

A U G U S T

2024

제38집 2호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문화
정책
논총

A U G U S T

2024

제38집 2호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CONTENTS

- 005 문화 정책 이슈에 유행이 존재하나?
예산, 언론보도, 학술논문을 통한 탐색적 연구_나보리
- 035 국제 유산보존관리에 있어서 바라헌장의 기여와 한계_이현정 · 정상철
- 063 지역 성평등 정책 사례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_공혜영 · 조소연
- 097 동행유형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에 미치는 영향_이승혁 · 허식
- 129 2024 문화정책논총 발간규정

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문화 정책 이슈에 유행이 존재하나? 예산, 언론보도, 학술논문을 통한 탐색적 연구

나보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이슈에 유행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위자와 이슈에 대한 관심주기에 주목하였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부업무계획에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부 세부사업 예산규모, 언론보도기사 수와 등재지 이상 논문 발표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시계열분석에서 정부예산, 언론보도기사 수, 논문발표 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키워드는 한류였다. 관심주기의 여러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글로벌과 한류, 남북이었으며 최소한 하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유통, 저작권, 인력, 창작, 공간, 지역 등이었다. 연구범위기간 동안 관심주기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공정, 복지, 인력이었다. 정책이슈 키워드에 대해 정부가 업무계획에서 언급하거나 정부예산을 배분한 후 언론과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부가 언론과 논문 흐름을 주도하는 경향이 보여, 문화정책 분야의 많은 키워드와 관련한 정책과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과 학계는 정책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고 꾸준히 제안하면서 정부의 관심과 자원 배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행위자로서 기능할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문화정책, 유행, 이슈관심주기, 정책이슈, 정부예산

*본 연구는 연구모임 '행간'을 통해 시작하여 2023.6. 문화정책리뷰, 2023.11. 서울행정학회 세션, 2023.12. 서울문화재단 예술연구활동지원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며 여러 조언을 얻어 발전시켰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투고일: 2024. 6. 5. 심사일: 2024. 6. 18. 게재 확정일: 2024. 7. 30.

<https://doi.org/10.16937/jcp.2024.38.2.5>

나보리_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주저자(ellenq@naver.com)

I. 서론

정책에 유행(policy fashion)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민간화(황창호·엄영호·이남국, 2021), 보조금이나 재단의 설립(전영한·이경희, 2010), 빅데이터 정책(김동환, 2018)은 정책에서 수단과 이슈가 유행했다고 평가된 사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특정 키워드, 정권별로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공감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 이슈의 유행에 대해 고백했으며,¹⁾ 특정 키워드나 분야에 대한 상대적 집중 등이 있다고 체감해 왔다. 한국 맥락에서 문화정책은 건축가적이고 중앙집권적 방식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시기에 정책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이슈나 정책수단이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문화 영역에서 좀 더 체감이 큰 것은 정책 이슈의 유행이다.

정책이슈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행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거나 혹은 정책 수요 왜곡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유행이 있는지, 어떤 이슈에서 유행의 모습이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책지속성 및 효과 창출 측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정책은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집행을 위해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과학적 근거와 필요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특정 정책의제의 설정과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은 많았다. 그러나 정책의제의 재료가 되는 이슈들의 등장과 쇠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 오지 않았다. 실제로 특정 분야에 정책적 집중이 있었는지, 그 집중에 정부나 언론, 학계 중 누가 관심을 보였는지, 그 양상이 어떤지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시간적 상황 맥락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활동하는 모습에 집중해 문화 분야 정책이슈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화 분야 정책에 유행이 존재하는가? 유행이 존재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위자들의 활동이 유행의 상황에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문화영역에서 어떤 이슈들이 어떤 시기에 정책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지, 그 이슈들에 대해 대표적 행위자로 여겨지는 정부, 여론, 학계에서 언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행위자들의 관심과 자원배분의 흐름이 시간적 변화 관점에서 유사한지 혹은 그렇

1) 박은희·김지영 기자(2016.07.01.). R&D예산 유행파라? ... “중장기적 과기정책 절실”, HelloDD (최종접속일: 2024.03.31.)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95>

지 않은지 여러 출처의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문화 정책 분야에서 유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는지, 어느 주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정책 이슈의 흐름이 여러 행위자들과 주고받은 영향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추적해 보고 정책 이슈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문화정책과 흐름

문화정책의 논의는 그 범위 설정부터 시작해 왔다. 문화 영역의 정의와 함께 정책의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부터 고민하는 한편, 복지나 공보의 개념을 포함해 접근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화정책이라고 하면 전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위주로, 법 제도(배관표·이민아, 2013)와 예산(이병량, 2004)을 통해 그 범위와 활동을 살펴보았다.

문화정책 흐름은 주로 정권별 정책기조에 따라 파악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정책 기조는 노태우 정부 이전까지 민족문화 진흥과 문화주체성 확립이 중시되었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 문화국가 실현에 방점을 두었다.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분권과 참여, 지역을 강조해 왔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일자리, 녹색성장과 관련한 문화정책이 강조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융성과 세계화 노력,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화기본권과 다양성 등에 집중했다(권영길, 2023: 165-166).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으로 인한 대면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을 고안하고 활용하는 것에 주력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더 분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권영길, 2023). 정권에 따른 정책기조만 고려했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계 시장 및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정권별 추구하는 바를 다르게 가져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정권별로 정책을 구분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한국 맥락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과 다르게 정책 방향성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화정책 역시 그에 따를 것으로 간주한 결과다. 문화정책이 정권에 따른 정책기조에 많은 영향을 받아 변화해 왔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보고서, 예산을 통한 분석결과,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지향을 보였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지향성이나 재원 배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병량·황설화, 2012). 또한 정부계획에서 어느 시기이든 ‘문화예술 강국’은 구호처럼 계속 나타났다.²⁾

이러한 상황 아래 문화정책에서 정권별 차이를 보일 가능성과 함께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이어지는 지점들이 모두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문화정책의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그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정책과 유행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유행(流行)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이다. 즉 ‘유행’은 단어 안에 특정한 행동이나 생각의 발생, 사람들의 추종, 그에 대한 사회적 동조 및 확산의 과정을 거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한 행동양식이나 사상을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은 유행과 관계가 깊을 수 있다. 용어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여러 주체들이 어느 특정 시점에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해 예산을 많이 배분하고, 언론보도를 많이 하며, 학술적으로 그 주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유행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이 널리 퍼지도록 하고, 사회적 동조를 만들며,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선행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표현방법을 활용해 정책의 유행에 대해 논의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책의 유행은 ‘policy fashion’으로 표현되어 왔다(Pollitt, Bathgate, Caulfield, Smullen, & Talbot, 2001). 정책 유행에 대해서 덮어쓰기(overwriting)라는 말을 활용하여(Tenbensel et al, 2021), 하나의 관리방식이 기존의 관리방식보다 더 우세를 점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분석하였다. 일시적인 유행의 의미를 담아 ‘fad’의 표현도 나타났는데, Starbuck(2009)은 사회과학의 역사는 개념과 방법론의 흥망성쇠(‘sequences of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ads’)를 포함한다고 보며 유행에 대해 언급하였다. 동향, 추세를 이야기하기 위해 ‘trend’로 표현

2) 도재기(2022.03.17.). 문화예술 강국? 문화 격차부터 없애라, 경향신문 (최종접속일: 2024.03.27.)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3170300005#c2b>

하기도 했다(Popeda & Hadasik, 2023). 정책 구성 시 이슈에 대해 사회적 포괄에서는 강하나 행위자들의 참여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행을 따라 정책을 구성하는 현상을 드러낸다고 보며, 정책개념화와 이론화에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념화 분석틀을 통해 확인하였다(Popeda & Hadasik, 2023). 유행의 성격 중 다른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상을 따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측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정책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국가들의 정책을 따라서 진행하는 경향에 대해 분석하며 이때의 선행 국가들에 대해 유행을 선도한다(trend-setter)라고도 표현하였다(Janicke, 2005). 서로 영향을 주는 막강한 유행은 뛰어난 선순환효과를 갖는다고도 표현하며(김동환, 2004), 유행의 순환에 대해서도 지적해 왔다.

이러한 정책 유행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책에서의 유행을 ‘fashion’으로 이해하며 덮어쓰기, 흥망성쇠, 추세, 선도자와 따르는 자가 나타나는 등 생애주기(life cycle)의 존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Abrahamson & Fairchild, 1999; Harrison, 2004). 정책 유행이 생애주기를 가진다고 보면, 유행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주체들의 활동과 이를 따르며 유행을 확산하는 주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러 단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유행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사회변화를 주도하거나 따르는 모습’은 시간뿐 아니라, 행위자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정책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있고 유행 단계에 따라 여러 사람들의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변화 등이 나타난다. 여기서 정책주도자(entrepreneurs)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된다(Abrahamson & Fairchild, 1999). 행위자들의 활동들은 관찰하거나 관여하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 생각 등을 공유하고 따르는 시간적 상황맥락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의 유행은 행위자와 시간이 함께 작용하여 특정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유행을 특정 관리 방법이나 이슈가 생애주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현상으로 이해하며,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 방법의 변화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슈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관리기법이나 이슈를 근본적으로 다른 선행자(先行者)의 활동을 따라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슈에 대한 집중이 한국 맥락에서 문화정책에 유행이 있는지 살펴보는 본 연구의 탐색적 의의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생애주기에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시간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중요한 요소로서 판단해 보기로 한다.

3. 행위자

정책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상황들을 여러 이론으로 설명해 왔는데 그 중 Sabatier와 Jenkins-Smith의 정책지지연합 모형(ACF)(Sabatier & Jenkins-Smith, 1993)은 정책변동의 원인으로 지지연합들의 작용과 시간흐름에 따른 학습, 사회와 경제의 변동과 정치체제의 변화를 꼽는다. 정책지지연합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신념은 정책학습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1995)에서는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정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책형성과정뿐 아니라, 정책변동의 설명에도 활용되는 이론들에서는 정부와 정치인, 이익집단 등 행위자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Cohen, March & Olsen (1972)의 쓰레기통모형은 문제와 해결책, 참여자, 정책의 창이 우연한 계기에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우연한 계기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 Kingdon (1984) 정책의 창 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으로, 우연한 계기와 정책의 창이 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책주도자와 참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서는 정부, 정치인, 이익집단 이외 여러 행위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점점 언론에 의해 사회 의제가 정책의제로 전환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Cobb & Elder, 1983; Kingdon, 1984). 언론은 특정 이슈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며(이태준, 2016), 판단의 준거 기능(Entman, 2007)도 제시한다. 학계의 역할도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Kingdon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정책혁신가를 제시하였는데, 이 혁신가는 학계(윤재상, 2018), 사서 및 문헌정보학자인 전문가(추윤미 · 김기영, 2013) 등으로 해석되며, 학술장에서의 연구자들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정책과정에서의 행위자 중요성을 고려하면, 행위자의 기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독려하기 위해 정책이 의제화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이슈를 둘러싼 행위자들이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그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판단된다(이태준, 2016; 유수동 · 이진실, 2017). 사회적 관심이 큰 정책 이슈에 대해 정부, 언론, 전문가 등 행위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를 형성하면

서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 활동은 많은 경우,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며(박치성 · 남기범 · 오재록, 2012), 언론이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문화산업분야에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 과정의 분석을 위해 공공기관의 법제와 계획, 의회 회의록, 정책연구 및 학술자료, 언론보도, 토론회 및 포럼과 행위자 인터뷰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산물을 활용하여 분석하며(강순화 · 김학실, 2024), 정책 내용 변화에 행위자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정책이슈가 유행이 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모이는 현상이 필요하다. 유행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판단하려면 각 행위자들의 활동변화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 분야는 한국 맥락에서 중앙정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행위자에 중앙정부를 포함하며, 사람들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언론과 정책구성에 자문과 목소리를 내는 학계를 포함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 기여하는 행위자들에는 정치인, 정부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 참여자, 시민단체 등도 포함되어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들은 정책이슈별로 참여도나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 정책의 유행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책 영역에서 유행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책에서의 자원배분변화와 관련하여 특정 정책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정 행위자를 고정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가지는 행위자들의 활동에 집중하여, 정책의 규모나 영향력이 달라지고 확산되는 모습이 존재하는지 거시적으로 판단하며 전반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정책이슈에 대한 유행에 행위자의 역할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구성하였다.

가설 1. 정책이슈 키워드에 대한 정부 자원배분의 증감 변화와 언론, 학계 관심 수준의 증감 변화 방향이 유사하다.

4. 시간

정책의 의제화와 변화를 고민해온 Hall의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시차모형 등 이론들은 시간의 개념을 암묵적으로 고려해 왔다. 정책이슈의 유행과 관련하여 정책 차원의 시간흐름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주는 논의들 중 이슈관심주기 이론에 주목해 볼 수 있다.

Downs의 이슈관심주기 이론(Issue Attention Cycle)은 정책의 변동과 여론의 관

제를 탐구할 때 가장 유행을 설명하기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Downs의 이슈관심 주기 모형을 정책에 적용한 연구들은 언론이 정부와 정책에 미친 영향을 함께 탐구했다(임도빈 · 허준영, 2010; 유수동 · 이진실, 2017). Downs는 특정 이슈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갑자기 등장하고 잠시 많은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는 경향에 주목했다(Downs, 1972).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이슈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단계를 이슈 전, 이슈 발견과 표면화, 관심의 증가와 비용인식, 국민의 관심 감소, 이슈 이후의 5가지를 관심주기로 묶어 제시했다. 특히 모든 사회문제가 이슈관심주기를 거치는 것이 아니며,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생태학적 이슈들이 주로 해당한다고 보았다(Downs, 1972; 임도빈 · 허준영, 2010). 이는 주목받는 이슈와 그렇지 않은 이슈들의 존재가 중요하며,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주목과 비 주목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문화정책의 유행 상황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정부, 언론, 학계 등 행위자별로 정책이슈에 대한 대응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여론뿐 아니라 학계의 관심, 정부 업무계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슈관심주기, 즉 생애주기가 정부의 자원배분(예산)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행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가 그 관심을 잃는 등의 패턴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시간과 행위자 모두를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유행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이슈가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들에 부합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2. 정책이슈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의 등장과 연계되며 생애주기를 따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과 범위, 측정

1) 연구방법

문화 정책 분야에서 유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는지, 어느 정책 이슈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을 수행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이론기반 분석틀을 활용한 데이터의 해석, 문헌연구와 자료에 대한 기초통계, 시계열 시각화, 상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2) 연구범위

현재 논의들에 비춰 보면 정책의 유행은 특정 이슈의 유행이나, 혹은 그런 이슈나 경향을 따라 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다소 의미가 혼재되어 있고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이 유행을 따르고 사그라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앞서 논의와 같이 어떤 이슈는 유행의 모습을 따르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으며, 유행이 되는 방식과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를 한꺼번에 보고 비교함으로써 정책에서의 유행 형성 및 변화 기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책이슈들이 유행의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에 집중하여, 정책 이슈에 대한 것을 논의 범위로서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문화 영역의 정책 이슈 키워드로 한정한다. 문화정책의 영역 구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영역의 정책수립 및 제언, 집행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음에 착안, 업무내용 중심으로 분류하여 중앙정부의 문화담당부처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을 문화예산으로 간주하고, 기관중심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기관중심의 분류는 가장 간단한 기준이면서도 문화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국가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여도 추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이병량, 2004). 이 부분은 정책 이슈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병량(2004)은 일반회계만 포함하였지만, 기금에서 상당수 문화정책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하여 분석했다.

부처별로 세부사업까지 정리된 예산을 2009년도 자료부터 확보가 가능하여, 자료

의 기준과 시기를 맞추어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부 주요업무계획, 문화부 연도별 국회확정예산, 언론기사, 학술논문 자료를 활용했다.

3) 측정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책에서 유행이 있다면 가장 크게 관여될 주체는 정부이다.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계획에 실린 비전, 전략, 추진과제명 중 추진과제명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도출한다. 정부 업무계획에서 특정 키워드가 2회 이상 반복하여 나타난다면, 특정 주제에 대해 최소 2년 이상 이어져 온 정부의 관심과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사를 최대한 그대로 파악해 보고자 키워드들 중 정책 영역이나 사업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들도 제외하지 않았다. 다만 ‘문화’, ‘예술’, ‘콘텐츠’와 같이 연구범위의 모든 연도에서 등장하여 당연히 출현하는 키워드들은 제외하였다.

정부의 자원배분결정 결과로서 특정 주제들에 대한 사업예산규모를 고려한다. 실제로 문화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정권별로 구분해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예산으로 표현되는 집행방식에 집중하였다. 문화예산을 분석하면서 문화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이병량, 2006), 문화관련 법률안에서의 정책대상과 전략을 통해 정권별 특성을 확인하며(배관표 · 이민아, 2013), 정권별 변천과 함께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으로서 코로나19를 고려하고(권영길, 2023), 각 정권별로 문화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법제도, 조직기구, 주요 프로그램의 변화를 60여 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박광국, 2008) 등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법제도와 예산을 통해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근거와 함께 정부의 역할을 보고자 함이다.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은 예산을 중심으로 보았다(이병량, 2004). 이에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세출 세부사업예산편성현황 자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총액으로 국회확정금액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세부사업은 자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상세한 정보이기도 하고, 실제 정책사업의 단위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예산의 단위는 천 원, 2020년을 100으로 기준점을 삼아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비교하였다.³⁾

3) 통계청, 2009-2023, 소비자물가조사.

언론에서 특정 주제를 많이 이야기한다면 이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언론의 보도량은 해당 이슈에 대해 보도한 뉴스 기사 수로 계량화할 수 있다(유수동 · 이진실, 2017). 언론에서의 사회 및 정책적 관심을 알아보고자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발행된 뉴스기사들에 대해 Big Kinds 웹사이트에서 2009.1.1.—2022.12.31.의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계획에서 2회 이상 나타났던 키워드를 검색하고 기사 분류를 문화로 한정하여 도출되는 연간 기사 수를 파악하였다.

조직이론 분야 이론적 콘셉트의 확산에서 유행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표된 논문들에서 콘셉트들에 대해 시간에 따른 수량 변화를 측정한 것에 착안하여(Bort & Kieser, 2011), 학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척도는 논문 발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09.1.1.~2022.12.31. 기간 내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체육학, 학제 간 연구에서 주제 분류 ‘문화’에 속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2023년 기준)에 게재된 논문에 한정하여 dbpia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도출한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2. 분석틀

연구에서는 시간적 맥락에서 정책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특정 정책 이슈가 유행 생애주기 안에 위치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 설명을 시도하기 위해 정책변동과정 이론과 이슈관심주기 이론의 개념에 착안하여 ‘정책관심주기’ 모형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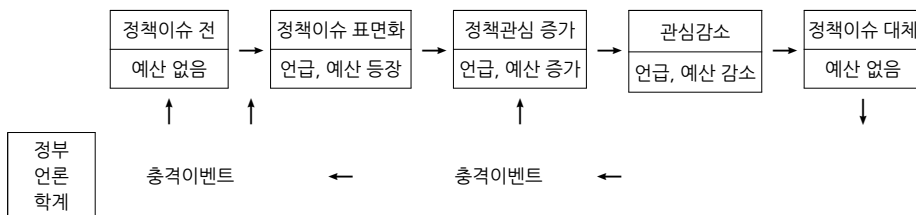
여론과 정책변동의 관계에 대해 이슈관심주기, 정책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이슈가 그것을 이끄는지 주목하는 정책변동이론을 활용하는 이유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자체에 관심을 갖는 정책네트워크이론, 정책유행이론(policy fashion: Harrison, 2004) 등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행위자와 시간의 작용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많은 연구들의 대상이 단편적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해 와 정책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유행의 패턴을 보이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책에 대해 Downs(1972)의 이슈관심주기모형과 Kingdon(1984)의 모형을 혼합한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한계를 극복하여 설명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임도빈 · 허준영, 2010; 왕재선 · 김선희, 2013). 본 연구는 혼합모형의 구성개

념에 착안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한 행위자를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책변동모형들이 하나의 정책 상황에 집중하여 변화를 살펴봤다면, 이슈관심주기의 개념을 접목한 혼합모형을 통해 하나의 이슈 흐름뿐 아니라, 여러 이슈들 중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는 정책변동의 이론들에서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소들인 시간과 행위자에 대한 활용에 집중해, 이슈에 대한 관심 주기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미 정책으로 구성된 것들이 관심을 받는 수준과 그 변화에 대해 주로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예산의 변화와 사람들의 관심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경향성을 가지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슈관심주기 이론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분석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5가지 단계를 포함한 ‘정책관심주기’ 분석틀을 형성하였다. 정책이슈 전 단계는 정부 예산의 배분이 없는 상태이며, 정책이슈 표면화 단계에서는 언론과 학계에서 정책키워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정부 예산도 등장한다. 정책관심 증가 단계에서는 정책이슈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언급이 늘어나고, 정부 예산 규모도 증가한다. 관심 감소 단계에서는 정부예산이나 언론보도, 논문건수가 감소한다. 정책이슈 대체는 그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던 정책이슈에 대한 정부예산이나 언론보도, 논문건수가 줄어들고 다른 이슈에 대한 정부예산의 규모나 언론보도, 논문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이다(그림 1).

[그림 1] 정책관심주기



IV. 분석

1. 문화 분야 정책이슈의 구성

정부가 연 초 업무계획으로 제시하는 계획서에는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나타나 있다. 유행의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1개 연도를 초과하는 지속성 있는 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도별 업무계획 내용을 통해 가장 많이 나타나거나 여러 년도에 걸쳐서 나타나는 키워드가 있는지 추적해 보았다. 2009-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계획의 추진과제명을 모두 수집하여 전체기간 동안 2회 이상 나타난 키워드들을 추렸더니 <표 1>과 같았다.

<표 1> 정부 업무계획 추진과제에 2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들

키워드 성격	키워드
가치	공정, 나눔, 소통
세계	글로벌, 한류, 교류
사업	유통, 저작권, 생태계, 일자리, 인력
예술	창조, 창작
장소	인프라, 공간, 지역
삶	생활, 복지, 향유
기타	남북, 전통

생활, 복지, 지역, 창작은 거의 모든 정권에서 나타나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키워드이다. 많은 키워드들은 1개 정권을 초과하여 출현하였지만, 가치와 관련한 키워드들은 공정을 제외하면 단일 정권에서만 나타났다. 공간(2011, 2012, 2015년 등장), 창조(2011, 2012, 2015, 2016년 등장)는 유사한 정치성향의 정권별로 반복하여 나타났으며, 생활문화(2017-2020년 등장, 그 이전에는 생활 속 문화)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업무계획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정권이나 시기별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활’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생활 속 문화’로 접근해 왔으나, 2018년부터 ‘생활문화’로 조어되어 사용되었다. ‘생활문화’는 1993년까지 문화부의 국 명칭이기도 했으나 그 이듬해 생활문화국이 폐지되고 잠시 정책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재등장하였다(<표 2>).

〈표 2〉 각 키워드별 문화체육관광부 연초 업무계획에 나타난 횟수

회계 연도	공정	글로벌	한류	교류	유통	저작권	생태계	인력	창조	창작	공간	지역	생활	복지	향유	남북
2009					1								1	1		
2010		1		1		1			1		1	1				
2011	1	1		1	1	1			1		1			1		
2012	3			1					1	2	1		1		2	1
2013										1				1		
2014			1									1	2			
2015			1			1	1	1	1	2	1		1			
2016		1	1				1	1	2	1			1	1		
2017	1	1					1			1		1	1		2	
2018	1						1	1				1	2			
2019	1			2						1			1	1	1	1
2020	1		1	2	1					1			1	1		
2021	1		1	1		1						1		2		
2022	1									1		1				
전체	10	4	5	8	3	4	4	3	6	10	4	6	11	8	5	2

2. 행위자별 정책 이슈의 활용

1) 정부의 자원 배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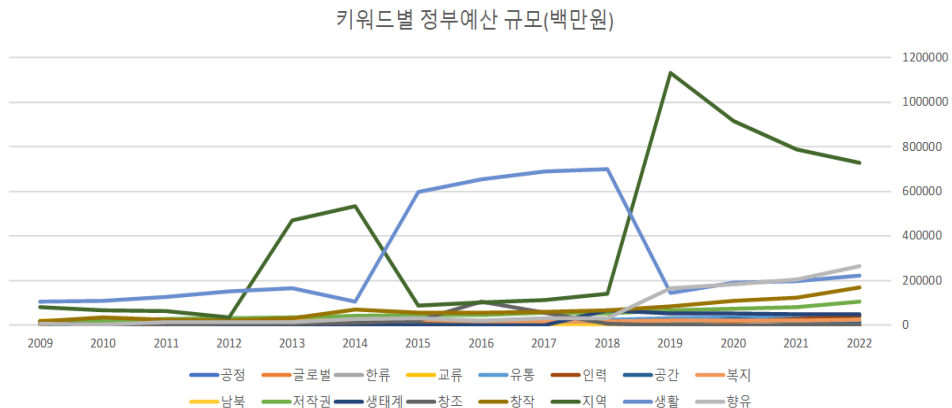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도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부터 2022년의 세출자료 중 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 총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업무계획에서 도출한 키워드 중 ‘공정’ 이외 모든 키워드가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어 있었다. 세부사업 예산의 연도별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성을 갖지 않고 특정 연도들에서만 나타나는 키워드는 글로벌, 한류, 생태계, 일자리, 남북, 창조였으며, 일관되지 않은 변화 양상을 보이는 세부사업들의 예산 총액 흐름을 가진 키워드들은 교류, 유통, 인력, 인프라, 공간, 지역, 생활, 복지, 향유였다.

생활은 2015-2018년에 다른 시기보다 예산을 많이 활용했고, 지역은 2012-2015년, 2019년부터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서, 생활과 지역이 예산의 규모가 큰 시기가 서로 대체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유는 2019년부터 급격하게 예산 규모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은 2009, 2010, 2022년에만 세부사업에서 예산이 드러나는데, 한류에 대한

예산은 2010-2017년까지 반영되어 서로 대체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⁴⁾ 교류에 대한 정부 예산은 2012-2015년까지 많았다가, 2016-2018년 시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졌고,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2).

[그림 2] 정책키워드별 세부사업예산 규모(백만 원)



2) 언론의 사회 관심 반영: 보도 기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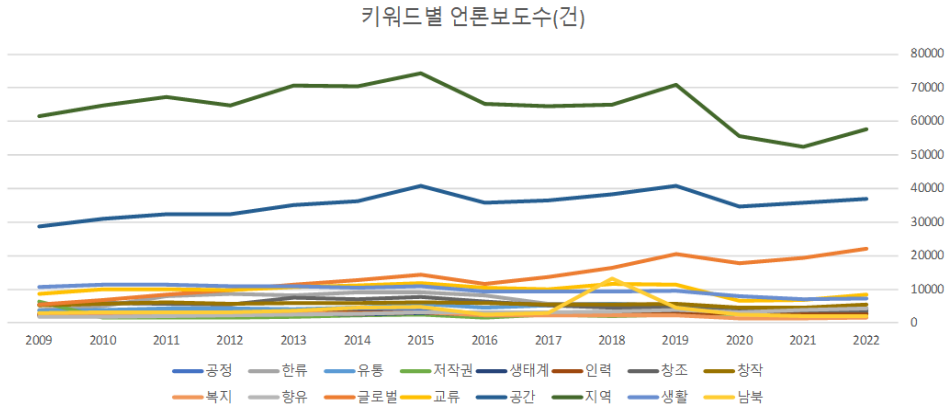
언론에서 표현된 사회에서의 정책 이슈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고자 선정된 키워드들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신문기사 수를 확인한 결과, 지역에 대한 연도별 기사 수가 평균 6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키워드는 글로벌, 생태계, 항유이며, 기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키워드는 생활, 기사 수의 증감이 반복되었던 키워드는 교류와 유통이었다. 그 중 교류는 2013-2019년까지 평균 1만 여 건이 넘는 기사 수를 보이다가 2020년 이래 감소하였다. 유통 역시 2014-2019년까지 기사 수가 증가했다가 2020년 이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3).

3) 학계에서의 관심: 논문 편수

학계에서의 정책키워드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고자 논문발표수를 확인한 결과, 대부

4) 이 연구에서 '한류'가 중간에 정책사업 영역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K-' 등 다른 키워드로 연결되는 모습을 추적하지는 않는데, 같은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변수들을 추적해 연계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고, 특정한 키워드들의 흥망성쇠 혹은 명멸을 살펴 보면서 연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까지가 연구 범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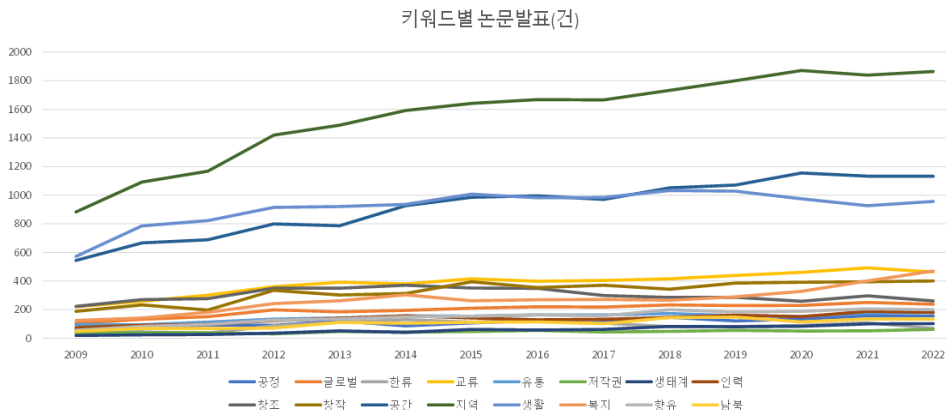
[그림 3] 정책키워드별 언론에서의 보도 기사 수(건)



분의 키워드에 대해 연구발표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22년의 논문발표 규모는 생태계가 5.3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지역의 논문발표수가 2022년 기준 1,800여 건 이상으로 절대량에서 많은 수를 보여 지역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문발표수의 증감은 일부 키워드에서 두드러졌는데, 창조와 한류는 2013년과 2014년에 논문 발표수가 급격히 증가하다 2017년 이래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19년 이후 급격하게 논문 수 증가를 보이는 키워드는 복지였다. 생활의 논문 발표 수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그 이후로는 비슷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4).

[그림 4] 정책키워드의 논문발표 수(건)



3. 정부, 언론, 학계의 관심

주요 업무계획에서 도출된 키워드들의 정부예산규모, 언론보도기사 수, 그리고 논문발표 수의 연도별 추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세 가지 정보를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고자 각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역사적 측면에서 키워드들이 갖는 의미는 복합적일 수 있어 정책 및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추이 변화를 파악하였다.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다양한 법이 제정된 2014년도와 그 이후로 언론에서 정책키워드들을 많이 언급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래로 지역에 대해 예산규모, 언론보도, 논문발표의 양이 많아졌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시기에 정부의 문화 관련 복지예산 규모도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2015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이후 주춤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규모가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로 교류, 지역에 대한 정부예산 규모가 확대되었다. 남북의 언론 언급은 2018년에 많아졌는데, 평창올림픽 등 이슈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은 2012년, 2019년에만 정부 업무계획에서 언급되었고, 정부예산은 2015년까지만 드러나고 그 이후부터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에는 향유에 대해 정부, 언론, 논문 수가 가장 증대되었다. 특히 2020년 이후인 코로나19 시기에는 복지와 관련한 논문과 향유에 대한 정부 예산 및 논문수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때 예술 활동의 어려움과 예술향유가 축소된다는 의견들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및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OTT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2021년 이후부터는 정부에서도 지역과 창작, 향유에 집중하여 예산을 규모 있게 지출하였다.

각 정권별로도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구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간을 강조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 교류를 꾸준히 언급해 왔다. 정권을 초과해서 나타났던 키워드들 중 생태계가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 강조되었고, 생활은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를 지나 문재인 정부까지 꾸준히 나오다가 코로나19 이후부터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교류는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 한류는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해 왔고 문재인 정부 후반에 교류와 한류 모두 활용했다. 복지는 모든 정권에서 자주는 아니어도 꾸준히 강조해 왔다.

특이한 점으로 한류-교류-글로벌에 대한 강조와 관심은 언론에서 주로 나타났고, 학계는 여러 법이 제정되었던 2014년 전후 시기에 창조, 코로나19 시기에 지역, 복지 등에 집중해 왔다. 행위자별로 강조하는 정책 이슈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코로나19 시

기에 향유와 지역에 대해 각 행위자들의 관심이 모였으며, 정부에서는 꾸준히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왔고 이것을 언론과 학계도 동의해 왔다.

한류의 경우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2000년대 초 한류의 용어가 등장하여 사용한 것은 언론이었지만, 2019년 공공기관에서 펴낸 보고서에서 한류의 새로운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등(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점차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념의 변화 및 활용을 이끄려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예산 규모와 기사 건수가 유사하게 진행되는 키워드들 중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기사화되어 언론을 통한 안내나 통보가 이루어졌던 건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정책만이 언론보도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창조’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창조경제’, ‘문화융성’의 맥락에서 강조되었다면 정책지지와 협력으로서 언론에서의 언급이 선행되고 그 이후 정부에서 사업적 접근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수 있다. 또한 ‘지역’과 ‘한류’는 여러 주체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어 꾸준히 상관성을 갖는 추이를 보인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복지’와 ‘교류’는 2017년과 2018년도까지 정부예산규모와 언론보도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후에 그렇지 않은 것은 정부정책과 언론의 관심의 방향이 달랐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정권별로 강조되었던 키워드들 중 일부는 그 관심사가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가치를 표현하는 ‘공정’, ‘나눔’, ‘소통’ 등은 예산에 표현되지 않거나 매년 늘어나는 등 계획상의 관심을 자원의 배분과 관련짓기 어려웠다. 이유는 세부사업 수준의 사업명은 가치를 표현하는 용어를 반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의 대상이나 목적을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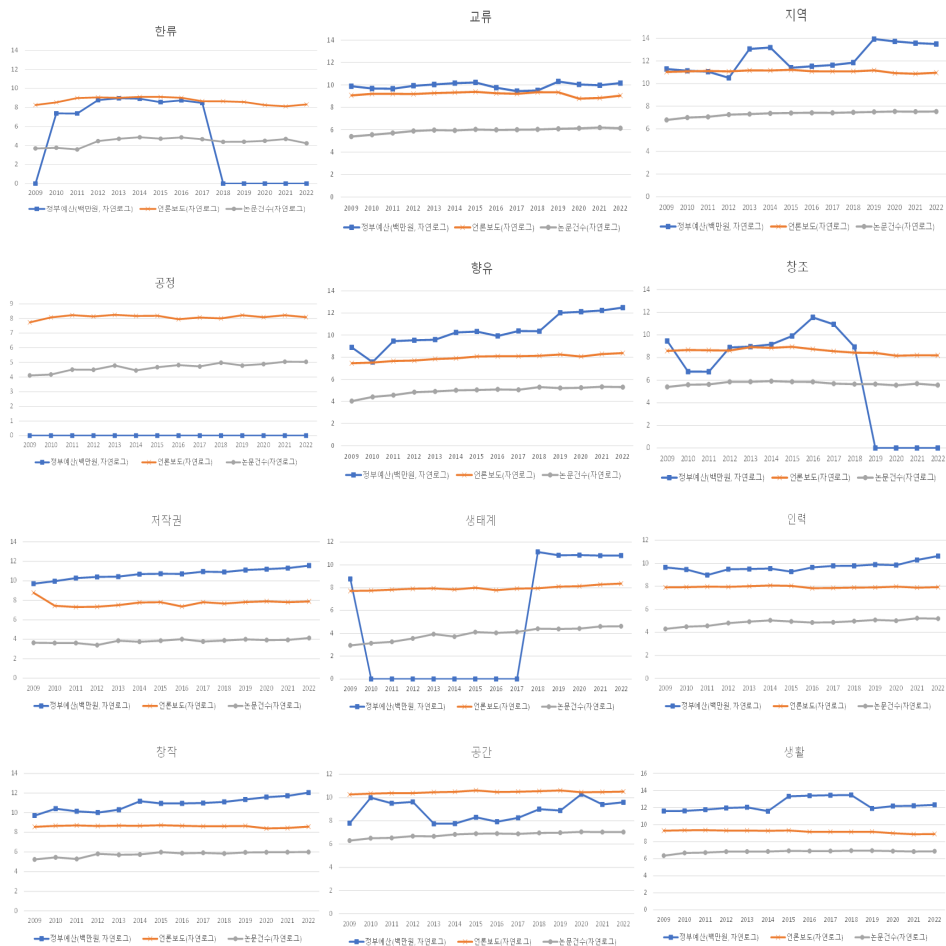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예산과 언론보도기사 수, 논문발표수의 흐름이 서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지, 선행 혹은 후행하는지 정권과 역사적 이벤트를 고려하여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부예산의 흐름과 언론보도, 논문발표수가 유사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키워드는 한류였다. 복지 또한 정부예산과 언론, 학계 관심의 변화 방향성이 유사하였다. 한편, 언론보도와 논문발표가 꾸준히 많아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정부예산이 증가한 키워드는 향유로, 모든 주체에서 향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지역은 정부업무보고의 언급 후 시기에 언론보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언론보도와 논문발표가 꾸준히 늘어나다가 정부예산이 갑자기 많아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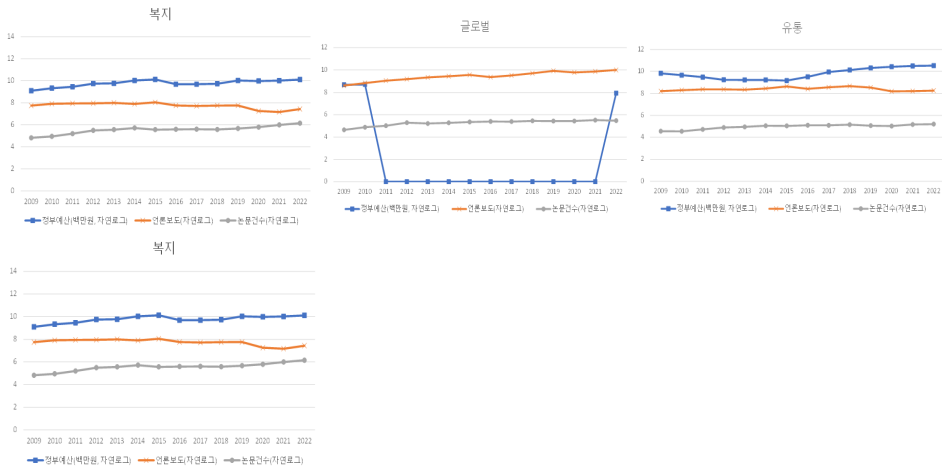
년을 기점으로 예산규모와 언론보도, 논문발표가 모두 줄어든 키워드는 창조였다.

언론보도와 정부예산규모 변화가 거의 유사하게 흐르다가 예산규모가 변화한 것은 교류, 언론보도와 학계 관심은 많으나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변화한 것은 지역이다. 언론보도기사수와 정부예산, 논문발표건수가 서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복지로, 2018-2019년 이래로 논문발표 수는 늘어나지만 언론보도기사수가 줄어들며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그림 5).

[그림 5] 정책키워드들의 정부예산, 언론보도기사수, 논문건수 추이



<그림 계속>



각 키워드들의 정부예산, 언론보도기사수, 논문건수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변수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키워드들은 생태계, 향유였으며, 예산이 다른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키워드들은 한류와 창작이었다. 논문수가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보였던 키워드들은 글로벌과 복지였으며, 논문수와 예산만 상관관계를 보인 키워드들은 저작권, 인력, 지역이었고, 창조와 공간은 논문수와 언론보도기사수만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향유, 한류, 복지에서 시계열의 변화가 유사한 것으로 보였지만 상관분석을 통해 향유는 모든 변수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변화, 한류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변화, 복지는 학계의 관심을 위주로 한 변화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상관관계는 선형관계를 전제로 하는 분석이므로 시계열 중 비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시계열과 역사적 이벤트들에서 변화 흐름이 나타났던 한류와 복지, 향유, 글로벌, 창조 등 키워드들의 정부예산과 언론보도기사수, 논문발표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표 3〉).

〈표 3〉 정책키워드들의 정부예산, 언론보도기사수, 논문건수의 상관관계 분석

키워드	언론보도기사수 ↔ 예산	논문수 ↔ 예산	논문수 ↔ 언론보도기사수
공정	.	.	0.2604
글로벌	-0.4409	-0.6983*	0.8814*
한류	0.8503*	0.6414*	0.4208
교류	0.0389	0.3912	-0.177
유통	-0.2841	0.4877	0.3403
저작권	-0.1147	0.8015*	-0.0452
생태계	0.7061*	0.8095*	0.8840*
인력	-0.3315	0.6773*	0.0546
창조	0.281	0.3423	0.6875*
창작	-0.5359*	0.7109*	-0.2883
공간	-0.2635	0.1682	0.7589*
지역	-0.2964	0.6330*	-0.2098
생활	-0.1358	0.5199	-0.4058
복지	-0.2953	0.8324*	-0.6326*
향유	0.7852*	0.6944*	0.9322*
남북	-0.0519	-0.3169	0.3474

* $p < 0.05$.

4. 정책관심주기를 통한 판단

정책키워드들의 상황을 정책관심주기를 통해 판단하면 아래와 같다. 정부 예산 배분이 없는 상태의 정책이슈 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키워드는 공정으로, 정부업무계획에 등장하지만 2009-2022년의 기간 동안 정부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이 불공정, 형평, 기회 등 개념화 방향성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 사업 명칭으로서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슈 표면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는 정부예산이 등장하기 시작한 2010년의 한류와 생태계이다. 생태계의 경우, 2009년 이래 정부예산의 배분이 없다가 논문건수, 언론보도기사수의 증가추세와 함께 2017년부터 정부예산이 등장하며, 정책이슈로 전면에 나섰다. 생태계를 체계로 보는 관점에 따른다면 사업 단위의 명칭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생태계 조성을 사업 목적으로 보면 사업명칭으로 포함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관심 증가 단계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창작, 공간, 저작권, 향유로, 2009-2022년의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정부 예산과 논문건수, 언론보도기사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화산업의 강조와 함께 저작권, 그리고 장소성의 강조로 공간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시기에서 정책관심 증가 단계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예산이 증가하였던 한류, 2015-2018년까지 정부 예산 규모가 매우 많아졌던 생활이 있다. 생활에 대한 논문건수는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5년부터 매년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연구기간 동안 논문건수와 정부예산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언론보도기사수는 2009년부터 2022년의 기간 동안 유사하게 유지 중에 있다. 키워드로서 지역이 함께 조어되는 단어들에 따라 다양한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언론에서의 관심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관심 감소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2019년부터 정부 예산이 등장하지 않는 한류, 2019년부터 정부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생활, 2013년에 정부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6년 이후 정부 예산이 등장하지 않는 남북이 있다. 또한 창조에 대한 정부예산은 2019년 이후 등장하지 않고, 언론보도와 논문건수도 2009년에서 2022년 사이 감소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이슈 대체 단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키워드는 한류로, 한류의 키워드를 포함한 정부예산이 없거나 줄어드는 시기인 2009년, 2010년, 2022년에 글로벌에 대한 정부예산이 등장하였다.

정책관심주기 단계에 위치한 정책키워드들을 파악해 본 결과, 정책관심주기의 특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유통, 저작권, 인력, 창작, 공간, 지역 등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 놓였다고 보인다.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가설 1 ‘정책이슈 키워드에 대한 정부 자원배분의 증감 변화와 언론, 학계 관심 수준의 증감 변화 방향이 유사하다.’는 일부 지지되었다.

또한 정책관심주기를 두 단계 이상 거친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글로벌과 한류로, 언론과 학계에서의 언급이 많아졌다가 감소하고, 두 키워드 간 활용이 대치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주었다. 글로벌과 한류는 연구기간인 200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정책이슈의 형성-확산-감소-전이 중 일부를 빠른 시간 내에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경우는 특정 시기에만 정책예산이 책정되고 언론과 학계의 언급이 늘었다 줄어드는 모

습을 보였다. 글로벌과 한류, 남북과 같은 키워드는 정책의 유행 단계를 따르는 면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애주기를 따르는 키워드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가설 2 '정책이슈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의 등장과 연계되며 생애주기를 따른다.'도 일부 지지할 수 있었다(〈표 4〉).

〈표 4〉 정책관심주기에 대응되는 키워드들

단계	상황	키워드
정책이슈 전	예산 없음	공정
정책이슈 표면화	언급, 예산 등장	2010년의 한류, 생태계
정책관심 증가	언급, 예산 증가	창작, 공간, 저작권, 향유
관심감소	언급, 예산 감소	2019년 이후의 한류, 2019년 이후 생활, 2016년 이후 남북, 2019년 이후 창조
정책이슈 대체	예산 없음	2009-2010년, 2022년의 한류

한편, 가설 1, 2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관심주기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로 공정, 복지, 인력이 있었다. 공정을 제외한 키워드들은 정부예산을 수반하여 정책이슈로 도출되었으나, 언론보도, 논문건수의 변화가 방향성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여 유행의 단계에 속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Downs(1972)가 유행을 겪는 이슈와 그렇지 않은 이슈가 공존함을 강조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 키워드들이 유행을 따르지 않아야 할 만큼 중요하거나 혹은 안정된 지지를 얻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혹은 의미나 사용례의 변형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키워드가 사용되었을 수 있다. 복지의 경우, 향유, 나눔, 참여 등의 키워드들과 함께 조어되며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문화이용권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차원에서의 정책 접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가, 예술인복지법 2011년도 제정과 함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 확대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논문, 언론보도의 양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상태에서 정책이슈 키워드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정부가 업무계획에서 언급하거나 정부예산을 배분한 후 언론과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부가 언론과 논문의 흐름을 주도하는 경향이 보여, 문화정책 분야의 많은 정책키워드와 관련한 정책과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영역의 정책형성 사례가 동원형을 따랐다(이종열, 2012)는 연구 결

과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이는 정책의 과정에서 정책 이슈에 대해 언론과 학계가 정부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받아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이슈에 유행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부업무계획에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부 예산, 언론보도와 논문발표 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시계열분석과 부트스트랩 회귀분석에서 정부예산의 흐름과 언론보도, 논문발표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키워드는 한류였다. 정책관심주기의 여러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글로벌과 한류, 남북이었으며 최소한 하나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유통, 저작권, 인력, 창작, 공간, 지역 등이었다. 연구범위기간 동안 정책관심주기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은 공정, 복지, 인력으로 유행과 상관없이 중요하거나 혹은 안정된 지지를 얻고 있는 정책이슈들이었 것으로 보았다.

학계와 언론의 관심 흐름은 유사한 경우가 많아, 문화정책 관련 영역에서 학자들과 사회의 활동은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예산 흐름은 독자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주도 및 영향력이 큰 한국 맥락에서 문화 분야의 많은 활동들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서 이루어지며, 유행을 이끌어내는 주체로 정부가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정책 분야에서 '유행'으로 보이는 여러 상황들이 사실은 정치적 결정의 산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정책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유행이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속성 있는 정책의 디자인 및 추진이 필요하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정책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이슈들을 발굴하고 꾸준히 제안하면서 정부의 관심과 자원 배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행위자로서 기능할 것이 요구된다. 정부도 사회와 학계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의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은 고찰을 통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정책 철학에 기반한 지속성 있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하드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론뿐 아니라, 실제 정책에서의 자원배분상황과 예산규모, 학계에서의 관심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간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던 문화 영역의 정책유행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의 문화영역 맥락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 관심이 커졌으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본 것에도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 해석은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 등 가치를 표현하는 키워드들이 사업예산 명칭에 반영될 가능성보다는 그 사업을 아우르는 상위 명칭이나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분석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정책용어로 정제되지 않았지만 정책사업에 꾸준히 포함되어 온 이슈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용어만 달리하여 거의 같은 내용의 정책사업이 이어져 왔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재 분석 상황에서는 한류와 글로벌, 교류 등 유행의 단계를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들이 같은 내용의 사업에서 정책 용어만 전환되는 유행을 겪었는지에 대해 식별하기는 어려웠다. 키워드가 지닌 의미가 정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여 정부예산이나 논문, 언론보도에서 드러나는 양상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논문과 언론보도의 내용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 정책이슈와 관련한 시차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에 고려하지 못했다. 연구에서 도출한 키워드들 중 일부만 대상으로 하여 세부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간범위를 확장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행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을 추후 연구의 과제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순화 · 김학실(2024), 우리나라 문화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203-225.
- 권영길(202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 문화정책 방향의 모색,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7권 2호, 157-168.
- 김동환(2004), 「시스템 사고」, 선학사.
- 김동환(2018), 빅데이터 정책 유행: 한 행정학자의 ‘간증(testimony)’으로서의 자문화 기술지, 「한국행정학보」, 제52권 1호, 3-25.
- 문화체육관광부(2009-2022), 2009년-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박광국(2008), 문화행정 60년의 분석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3호, 77-101.
- 박치성 · 남기범 · 오재록(2012), 관료권력과 언론보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부처들의 실제 업무관계와 언론보도에 나타난 업무관계 비교 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147-165.
- 배관표 · 이만아(2013), 한국 문화정책의 대상과 전략의 변화 - 1988-2012 -,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1호, 137-170.
- 왕재선 · 김선희(2013), 정책이슈 확산의 다이내믹스 -무상급식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1호, 389-422.
- 유수동 · 이진실(2017), 아동복지 이슈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Downs의 이슈관심주기이론을 중심으로, 「정부행정」, 제13권, 29-60.
- 윤재상(2018),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연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2권 1호, 337-372.
- 이병량(2004), 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3호, 99-125.
- 이병량(2006), 한국 문화정책의 논리에 관한 비판적 연구: 평가준거의 구성과 시론적 평가, 「행정논총」, 제44권 2호, 25-50.
- 이병량 · 황설화(2012), 정책 이념과 정책의 변화, 「한국정책연구」, 제12권 3호,

255-270.

이종열(2012), 동원모형에 따른 문화정책의제설정과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
아문화전당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6권 2호, 85-112.

이태준(2016), 언론매체와 디지털 공론장에서 나타난 공공이슈의 사회적 관심도에 대
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50권 2호, 215-241.

임도빈 · 허준영(2010), 기획논문 : 사회갈등의 확산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8권 4호 55-80.

전영한 · 이정희(2010),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제48권 2
호, 91-118.

추윤미 · 김기영(2013),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킹덤의 정책
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3호, 71-87.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한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한류 확산 전략 연구」.

황창호 · 엄영호 · 이남국(2021),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관한 연구: 정책유행·이해
관계자·사회규범·조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31권 1호,
87-110.

Abrahamson, E., & Fairchild, G.(1999), Management fashion: Lifecycles,
triggers, and collective learning process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4), 708-740.

Bort, S., & Kieser, A.(2011), Fashion in organization theor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iffusion of theoretical concepts, *Organization
Studies*, 32(5), 655-681.

Cobb, R. W., & Elder, C. D.(1983),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 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ohen, M. D., March, J. G., & Olsen, J. P.(1972),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1),
1-25.

Downs, A.(1972), Up and down with ecology - The “issue-attention cycle”,
The environment as problem:1, *The Public Interest*, 28, 38-50.

Entman, R. M.(2007), Framing bias: Media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163-173.
- Harrison, M. I.(2004), Implementing change in health systems: Market reforms in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the Netherlands. London: Sage Publications.
- Jänicke, M.(2005), Trend-setters in environmental policy: The character and role of pioneer countries, *European Environment*, 15(2), 129-142.
- Kingdon, J. W.(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 Mucciaroni, G.(1995), Reversals of fortune: Public policy and private interest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Pollitt, C., Bathgate, K., Caulfield, J., Smullen, A., & Talbot, C.(2001), Agency fever? Analysis of an international policy fashion,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3, 271-290.
- Popęda, P., & Hadasik, B.(2023), New public governance as a new wave of the public policy: Theoretical approach and conceptualization of the trend,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Public Policy*, 13(1), 18-36.
- Sabatier, P. A.(1993), Policy change over a decade or more, in P. Sabatier and H. Jenkinssmith (eds.),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3-39. boulder, CO: Westview press.
- Starbuck, W. H.(2009), The constant causes of never-ending faddishness in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Scandinavian Journal of Management*, 25(1), 108-116.
- Tenbensel, T., Silwal, P., & Walton, L.(2021), Overwriting new public management with new public governance in New Zealand's approach to health system improvement, *Journal of Health Organization and Management*, 35(8), 1046-1061.

[Abstract]

Are There Fashions in Cultural Policy Issues? An Exploratory Study

NA, Bori

This study focuses on actors and the attention cycle of issues to determine trends in cultural policies from 2009 to 2022. By examining the government budget, media coverage, and publications, the policy keyword that changed in the same direction in the time series analysis was the 'Korean Wave'. The keywords that seemed to have gone through multiple phases of the policy interest cycle are 'global', 'Korean Wave', and 'North-South', while the keywords that appeared to have stayed in at least one phase are 'distribution', 'copyright,' 'people,' 'creative', 'space', and 'region'. Generally, governments tend to lead the flow of media and academic papers on policy issues. This indicates that much of the policy process in the cultural sector is government-driven.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 and academia to function actively as policy actors by developing issues and continuously proposing them to draw the government's attention and allocate resources.

[Keywords] cultural policy, fashion, issue attention cycle, policy issue, government budget

국제 유산보존관리에 있어서 버라현장의 기여와 한계

이현정 · 정상철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버라현장: 호주이코모스의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를 위한 현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 유산보존관리에 있어서 버라현장이 기여한 점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버라현장은 1979년 호주의 유산보존관리를 위해 채택되었지만 호주를 넘어 국제적인 유산보존관리의 기준으로 자리했다. 버라현장은 베니스현장이 유산으로 정의한 기념물과 유적지를 장소로 대체하며 더욱 확대된 유산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미학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 가치의 합으로 정의되는 문화적 중요성을 보존관리의 핵심에 배치하고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세 단계접근법 - 중요성 이해, 정책 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관리-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중심 접근법에서 가치중심 접근법으로 진화한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고 이를 세계적으로 정착시키며 국제 유산보존의 역사에 기여했다. 현재 버라현장이 모델로서 기능하는 가치중심 접근법은 유산의 사회, 문화적, 즉 맥락적 가치를 수용하고 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다. 하지만 버라현장은 여전히 물질에 내재하는 본질적 가치 및 전문가 지식에게 특권을 부여하면서 동등하게 여겨져야 할 가치에 위계를 발생시키고 비전문가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주제어] 버라현장, 장소, 문화적 중요성, 가치중심 보존, 변화관리

투고일: 2024. 6. 5. 심사일: 2024. 6. 18. 게재 확정일: 2024. 7. 30.

<https://doi.org/10.16937/jcp.2024.38.2.35>

이현정_문화자원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주저자(leehyunchung@naver.com)

정상철_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가유산관리학과 교수/교신저자(jsc4362@nuch.ac.kr)

I. 서론

존 러스킨(John Ruskin)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그리고 ‘고대건축물보호협회(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cient Buildings)’와 ‘기념물과 유적지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헌장: 베니스헌장(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the Venice charter, 이하 베니스헌장)’을 언급하지 않고서 근대유산개념의 탄생과 보존원칙을 이야기 할 수 없듯이 버라헌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산보존의 발전 특히 가치중심 보존에 관해 설명할 수 없다. ‘버라헌장: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를 위한 호주이코모스헌장(Burra Charter: 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이하 버라헌장)’은 호주의 유산보존관리를 위해 1979년 호주 남부의 역사적인 탄광도시 버라에서 채택되었다. 채택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호주의 유산 실무에 적용되며,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의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 및 실무지침이자 유산법의 근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호주에서 버라헌장은 ‘유산의 성경’으로 일컬어지며 각종 유산관련 보고서에서 칭송의 대상이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Hanna, 2016: 4).

잘 알려져 있듯이 버라헌장의 영향력은 호주 국내로 한정되지 않는다. 호주의 특수성이 반영된 국내 헌장이지만 유산 헌장과 협약 중에서도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꼽히며 유산 보존관리의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Vileikis, 2016: 507). 버라헌장은 베니스헌장을 호주의 유산상황에 맞게 각색한 것이지만 베니스헌장이 대표하는 전통적인 유산보존 접근법인 물질중심 보존에서 가치중심 보존으로의 보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념적 토대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버라헌장을 유산실천에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가치중심보존¹⁾의 모델로 기능하며, 이는 버라헌장 과정도에 잘 요약되어 있다(Australia ICOMOSa, 2013: 13). 현재 가치중심 보존은 국제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접근법으로 정착하였으며, 확실히 전통적인(물질 중심) 접근법보다 진화한, 유산과 상호작용하는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에 대한 용어와 원어는 가치중심보존(values-centered conservation), 유산 보존에 대한 가치중심 접근법(values centered approach to heritage conservation), 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가치중심 접근법(values centered approaches to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등 이다. 후자들은 줄여서 가치중심 보존 접근법 또는 가치중심 보존관리 접근법으로도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또한 간단히 가치중심 접근법으로도 불릴 수 있다. 버라헌장은 보존관리를 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들 용어를 의미의 차이 없이 문맥에 따라 혼용했음을 밝혀둔다. values-centered approach는 value-led 또는 values-based approach로도 쓰인다.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더욱 민주적인 접근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바라현장이 도입한 장소 개념과 사회적 가치 역시 바라현장의 경계를 넘어 지속적으로 유산의 이론연구와 실무를 위한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바라현장을 탄생시킴으로써 20세기 국제 유산보존 더 나아가 국제 유산 분야의 역사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널리 인정받는다(Lesh, 2019a). 1970년대까지 변방에 머물러 있던 호주는 바라현장을 통해 일약 국제유산분야에서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이후 호주는 유산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정상철 외, 2023: 212).

바라현장은 베니스현장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되었지만 동시에 유럽식 유산과 대비되는 호주의 원주민 유산을 포함하여 호주의 상황에 맞는 유산을 적절히 다루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자국을 위한 유산현장이나 지침을 더욱 발전적으로 마련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세계화 시대 특히 유산의 세계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과 맥락이 반영된 현장이나 지침이 국제적인 유산 담론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며, 유산 분야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도 영향을 주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유산에 대한 변화된 환경과 인식이 반영된, 국제 유산보존 원칙과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특수성과 맥락이 온전히 반영된 현장이나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문화재청과 이코모스한국위원회는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이하 한국원칙)’을 수립하여 발표했다.²⁾

본 논문은 바라현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 유산보존관리에 있어서 바라현장이 기여한 점과 그 한계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라현장은 호주라는 한 국가의 유산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유산보존을 주도하는 국제현장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다. 국제현장은 현재사회에서 중요성이 더해가는 유산에 대한 보존실천과 유산연구를 통해 비판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적인 보존실천에 대한 규범을 제공한다(정상철 외, 2023: 194).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국제수준에서 유산보존 분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산보존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원칙과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바라현장의 구성 및 주요 내

2) 문화재청과 이코모스한국위원회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원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수행하기 위한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을 2022년 12월 20일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국제 유산보존관리에 있어서 버라헌장의 기여와 한계를 정리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II. 버라헌장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버라헌장의 구성

버라헌장은 1979년 최초로 채택된 이후 변화하는 환경과 유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1981, 1988, 1999, 2013년 총 네 차례 개정되었다. 본 논문은 2013년 개정판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버라헌장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산 실천에서 헌장을 어떻게 사용, 적용할 것인가를 안내하는 실무 노트(practice note), 문화적 중요성 및 공존하는 가치에 대한 윤리 강령 등에 대한 지침(Guidelines to the Burra Charter), 그리고 각 조항에 대한 해설과 함께 사례를 담고 있는 해설서(Illustrated Burra Charter) 등의 동반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모든 문서가 버라헌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버라헌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버라헌장 외에 언급된 동반 문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논문 지면의 한계상 본 논문에서는 헌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동반문서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버라헌장(2013년)은 총 34조 90항으로 서문, 정의, 보존원칙, 보존과정, 보존실천, 버라헌장의 과정도, 즉 헌장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표 1〉 버라헌장(2013년)의 구성과 핵심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서문		작성주체, 목적 및 구성, 사용방법, 적용대상, 보존의 정의와 보존 이유, 핵심 보존원칙에 대해 서술함.
정의 1조	1조	장소, 문화적 중요성, 패브릭(fabric), 보존(conservation), 유지관리, 현상보존(preservation), 복원, 재건, 전용, 사용, 양립가능한 사용, 주변환경(setting), 관련 장소, 관련 유물, 연상, 의미, 해석에 대해 정의함.
보존 원칙 2~ 13조	2조	보존과 관리: 보존의 당위, 보존의 목적, 보존과 관리, 그리고 보호에 대해 설명함.
	3조	신중한 접근법: 최소한의 변화 지향, 추측을 토대로 한 변화 지양함.
	4조	지식, 기량, 기술: 장소에 대한 연구와 장소를 돌보는 데 기여하는 모든 지식, 기량, 학문의 사용, 전통 기술과 재료가 선호되지만, 현대 기술과 재료도 사용 가능함.
	5조	가치: 모든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됨.
	6조	버라헌장 과정: 중요성 평가 → 정책 개발 → 정책에 부합하는 관리

〈표 계속〉

구분	조항	내용
보존 원칙 2~ 13조	7조	사용: 사용이 중요한 경우, 계속 양립가능하게 사용되어야 함.
	8조	주변환경: 적절한 주변환경을 유지해야 함.
	9조	위치: 장소의 물리적 위치가 중요성의 일부이므로 원위치가 우선시 되어야 함.
	10조	내용물(contents):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에 기여하는 내용물, 고정물, 유물은 원래 위치에 보존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에서 원위치에서 이탈되더라도 원위치로 되돌려 보내져야 함.
	11조	관련 장소와 관련 유물: 함께 유지되어야 함.
	12조	참여: 이해당사자는 보존, 해석, 관리에 참여해야 함.
	13조	문화적 가치의 공존: 갈등하는 가치가 공존함을 인식, 존중, 격려해야 함.
보존 과정 14~ 25조	14조	보존과정: 보존은 사용, 연상과 의미 유지, 유지보수, 보존, 복원, 재건, 전용, 해석, 이들 중 하나 이상을 결합한 것이며, 또는 관련 장소 및 관련 유물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함.
	15조	변화: 문화적 중요성과 해석을 토대로 필요한 만큼만 주어야 하며, 문화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변화는 되돌려질 수 있어야 함.
	16조	유지관리: 패브릭이 중요한 경우에 보존에 근본적임.
	17조	현상보존: 기존 패브릭이 문화적 중요성의 증거를 구성하거나 다른 보존조치를 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할 때 적절함.
	18조	복원과 재건: 문화적으로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함.
	19조	복원: 패브릭의 이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적절함.
	20조	재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중요성을 유지하는 사용이나 관습의 일환으로 적절함.
	21조	전용: 대안 고려 후, 문화적 중요성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때만 허용됨.
	22조	새로운 작업: 추가 및 그 외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식별가능한 신중한 접근법을 취해야 함.
	23조	계속 사용 및 재사용: 중요한 용도를 유지, 변경, 재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보존방식임.
	24조	연상과 의미 유지: 유지되어야 하며, 이들의 부활 역시 필요함.
보존 실천 26~ 34조	25조	해석: 문화적 중요성은 해석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함.
	26조	바라헌장 과정의 적용: 적절한 지식·기술·복수의 학문을 이용한 장소의 이해, 문화적 중요성 진술과 정책을 통합한 관리계획의 마련, 이해당사자의 참여, 정기적인 검토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27조	변화의 관리: 변화는 중요성 진술과 정책을 참고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전과 후가 기록되어야 함.
	28조	패브릭에 대한 침입: 연구를 위한 증거를 얻거나 조사를 위한 경우에도 침입은 최소화되어야 함.
	29조	책임: 관리와 결정 책임이 있는 기관과 개인이 지명되어야 하며, 이들은 각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함.
	30조	지식, 감독, 이행: 자질을 충분히 갖춘 사람에 의한 적절한 지식과 감독이 있어야 함.
	31조	일지 작성: 새로운 증거와 추가적인 결정은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함.
	32조	기록물: 장소의 보존과 역사에 대한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하며, 적절한 장소에서 보호함.
	33조	제거된 패브릭: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에 준하여 목록화되고 보호되어야 함.
	34조	자원: 보존을 위해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함.
바라헌장 과정도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의 계획과 관리 단계(중요성의 이해→정책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관리)

자료: Australia ICOMOS(2013a)을 정리하여 작성함.

서문에서는 현장이 채택된 맥락과 연혁, 작성 주제 및 현장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정의 부문(1조)에서는 유산 보존관리와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간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고, 문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7개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용어 및 이의 정의는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바라현장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와 그 정의

용어	정의
장소	지정학적으로 규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구성요소(elements), 유물, 공간과 전망을 포함하며, 장소에는 유형과 무형의 차원이 있음.
문화적 중요성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미학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의미함.
패브릭(fabric) ³⁾	구성요소, 고정물, 내용물, 유물을 포함하여 장소의 모든 물리적인 물질을 의미. 패브릭은 발굴된 물 질뿐 아니라, 건축물 내부와 지하의 잔존물을 포함함.
보존 (conservation)	문화적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소를 보살피는 모든 과정을 의미함.
유지관리 (maintenance)	장소와 장소의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돌보는 것을 의미함.
현상보존 (preservation)	현상보존은 장소를 기존의 상태로 관리하고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함.
복원(restoration)	부착물을 제거함으로써 또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요소들을 재조립함으로써 장 소를 알려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함.
재건 (reconstruction)	장소를 알려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만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복원과 다름.
전용(adaptation)	기존의 사용 또는 제안된 사용에 적합하도록 장소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함.
사용(use)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장소에 의존하는 활동과 전통적이며 관습적인 실천을 포함하는 장소의 기능을 의미함.
양립가능한 사용 (compatible use)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을 존중하는 사용으로 문화적 중요성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주는 것을 의미함.
주변환경(setting)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과 장소의 구별되는 특징의 일부이거나 또는 그것에 기여하는 인근의 환경과 그보다 넓은 환경을 의미함.
관련 장소 (related lace)	관련 장소는 다른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에 기여하는 장소를 의미함.
관련 유물 (related object)	한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에 기여하지만 그 장소에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함.
연상 (associations)	사람과 장소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감을 의미함.
의미(meanings)	의미는 장소가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 보여주는 것, 환기시키거나 또는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해석 (interpretation)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을 표출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함.

자료: Australia ICOMOS(2013a, pp2-3)을 정리하여 작성함.

보존원칙 부분(2조~13조)은 총 12개의 보존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뒷부분인 보존과정이나 보존실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존원칙은 이후에 보존과정과 보존실천에서 다시 언급되는 두, 세 개의 조항을 함께 읽을 때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⁴⁾ 이는 현장의 내용이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많은 조항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서문). 이외에도 보존원칙 부분에서는 보존의 목적을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2조2항), 보존과 관리의 관계에 관해서 보존이 ‘좋은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2조3항). 이는 버라현장에서 관리는 보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소를 위한 관리계획(안)에는 현장이 정의하는 다양한 보존조치가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부분인 보존과정은 보존조치와 동일한 용어로 이해될 수 있다. 버라현장에서 보존은 문화적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소를 보살피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존조치 대신 보존과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현상보존(preservation), 재건(reconstruction) 등의 물리적 조치 외에 다른 보존원칙 문서와 다르게 연상, 의미, 사용, 해석을 보존과정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버라현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보존실천 부분은 보존원칙을 적용하여 보존과정을 실천하는 원칙 또는 지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의 버라현장 과정도는 현장을 적용하는 세 단계, 즉 중요성 이해, 정책개발, 정책에 부합하는 관리의 이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후술될 가치중심 접근법, 혹은 가치중심 보존으로 요약된다(Mackay, 2019: 111-112).

2. 버라현장의 주요 내용

1) 보존 개념과 가치

버라현장에서는 보존(conservation)을 문화적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소를 보살피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한다(1조 4항). 베니스현장의 역사적 기념물을 호주의 유산 맥락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대체한 장소는 ‘지정학적으로 규정된 구역으로 대체로 구성요소, 유물, 공간과 전망을 포함하며 유형과 무형의 차원이 있다(1조 1항). 더욱 구체적으로 장소는 자연 및 문화적인 특징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며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념물, 나무, 개별 건축물이나 건축물군,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3) 한국어로는 이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를 찾기 힘들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 예를 들어 보존원칙 5조 1항의 가치에 관한 내용은 보존과정의 15조 4항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식으로, 보존원칙의 내용은 보존과정과 보존실천 부분에 적용될 때 더욱 구체적으로 해석된다.

장소, 도심지역이나 타운, 문화경관, 정원, 산업공장, 난파선, 잔존물이 있는 부지, 배치된 돌, 도로 또는 여행 루트, 공동체의 만남의 장소, 정신 또는 종교와 관련된 장소를 포함한다(1조 1항 주석).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는 문화유산장소(cultural heritage place)(서문)와 동의어로 주로 부동산유산을 의미한다.⁵⁾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현장의 장소 개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3장의 장소부문 참고).

문화적 중요성 개념은 호주의 유산 실천과 법에서 장소에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문화적 중요성은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다섯 종류의 가치 - 미학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를 의미하거나(1조 2항) 이들을 포함하여 장소가 갖는 자질(qualities) 또는 가치의 합이다 (Australia ICOMOS, 2013b: 1). <표 3>에 다섯 가지 가치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중요성은 장소 그 자체, 장소의 패브릭, 주변환경, 사용, 연상

〈표 3〉 바라현장에서 문화적 중요성을 구성하는 가치 유형과 정의

구분	정의
미학적 가치	장소에 대한 감각과 인식적인 경험 - 즉, 인간의 생각, 느낌, 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소리, 냄새, 기타 요인과 같은 시각적 및 비시각적 측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을 말한다. 미학적 자질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과 공식적인 미적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미학의 표현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역사적 가치	역사의 모든 측면 - 예를 들어, 미학, 예술, 건축, 과학, 영성, 사회의 역사 -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종종 다른 가치들의 기초가 된다. 장소는 역사적인 사건, 단계, 운동 또는 활동, 개인 또는 집단에게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일 수 있다.
학술적 가치	장소의 정보 내용과 고고학적 기술의 사용을 비롯하여 장소의 조사를 통해 과거에 대한 보다 많은 측면을 밝힐 수 있는 장소의 역량을 말한다. 장소가 갖는 학술적 가치의 정도는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중요성, 희귀성, 특징 또는 대표성, 그 장소 자체나 장소의 종류 또는 범주에 대한 더욱 중요한 정보에 기여하거나 중요한 연구 질문을 다룰 수 있는 잠재력에 달려있다.
사회적 가치	특정한 공동체나 문화적 집단을 위해 장소가 갖는 연상과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의미를 말한다.
정신적 가치	문화적 집단의 정신적 정체성이나 전통적 지식, 예술, 관습에 중요성을 주는 장소에 체현되어 있거나 장소가 환기시키는 무형적 가치와 의미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미학적 및 정서적 반응 또는 공동체의 연상의 강도에 반영되거나 문화적 관습 및 관련된 장소를 통해 표현될 수도 있다. 장소의 자질은 사람들에게 강한 그리고/또는 자발적인 정서적 또는 형이상학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정신적 영역과 관련하여, 세상에서 그 문화적 집단의 장소, 목적, 의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자료: Australia ICOMOS(2013b, pp3-4)을 정리하여 작성함.

5)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부동산유산을 역사적 장소, 문화유산장소, 유산장소 등으로 지칭한다 (정상철 외, 2023: 47) 바라현장이 유산보존의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하게 됨에 따라 유산학 분야에서도 유산 장소 혹은 장소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Smith, 2006; Harrison, 2013).

(associations), 의미, 기록, 관련 장소 그리고 관련 유물(object)에 체화되어 있다(1조 2항). 패브릭은 장소의 구성요소, 내용물, 유물을 비롯하여 장소에 존재하는 일체의 물리적인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버라현장에서 패브릭은 전통적인 보존접근법에서 강조하는 물질을 대표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패브릭이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비물질 또는 무형적 요소로 대표되는 것은 사용(장소의 기능), 연상(사람과 장소 사이의 유대감), 의미(장소가 의미하거나 보여주거나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소의 중요성을 구현하는 요소들이 기존의 문서들에서 물질적 요소로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사용, 연상, 의미로 확대됨으로써 유산의 비물질적 측면 또는 무형적 측면을 물질적인 측면과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⁶⁾ 따라서 장소를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것 외에도 장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하는 것, 장소의 연상과 의미를 유지하는 활동 역시 보존과정으로, 이러한 보존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당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 보존원칙

버라현장의 두 번째 부분인 보존원칙(2조-14조)은 구체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구현하고 있는 장소의 패브릭, 주변환경, 사용, 연상, 의미, 기록물, 관련 장소와 관련 유물의 중요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버라현장을 관통하는 핵심 보존원칙은 베니스현장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신중한 접근법이다. 따라서 유산의 물질적인 측면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버라현장은 베니스 현장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버라현장에서 말하는 신중한 접근법은 ‘장소를 보살피고,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변화를 주는 것’(서문)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존이 기존의 패브릭, 사용, 연상, 의미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측을 기반으로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3조 1항과 2항)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법의 원칙 아래, 중요한 패브릭의 보존은 전통 기술과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4조 1항), 주변환경(setting)이 문화적 중요성에 기여하는 경우, 이 역시 보존해야 하므로 주변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 역시 적절하지 않으며(8조), 장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자리에 있어야 한다(9조). 장소의 중요성에 기여하는 내용물 역시 제 자리에 있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 위치와 떨어져야 하는 경우, 그러한 불가피한 상

6) 비물질적 요소를 물질적 요소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1999년 버전이 처음이다.

황이 제거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보내져야 한다(10조).

하지만 버라현장은 주로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신중한 접근법을 토대로 하는 원칙 외에도 장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장소가 가진 여러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특정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희생되는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5조). 또한 한 장소에 서로 갈등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존하는 다양한 가치가 인식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절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되어야 하는(13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 장소에 존재하는 다양하며 때로 공존하는, 갈등하는 가치를 모두 인식, 존중, 판별하여, 한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와 관련이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해당 장소의 보존, 해석,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12조)는 참여 접근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는 해당 장소에 중요한 연상과 의미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외의 문화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12조). 그리고 장소의 중요성이 장소를 사용함으로써 드러나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7조)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유산의 중요성과 무형적 측면을 연결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장소의 가치가 구현된 대상물에 사용, 연상, 의미 등의 무형적인 요소를 포함한 것에서 당연히 예고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보존은 장소를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2조 3항)으로 관리와 동떨어져서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관리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Walker 외, 2004: 16).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은 장소의 관리를 위해서는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한 다음, 이를 토대로 (보존을 포함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된 정책에 부합하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버라현장의 과정(6조 1항)을 통해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버라현장 과정도(過程圖)’이자 ‘중요성이 있는 장소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라 명명되어 현장의 맨 마지막에도 제시되어 있다. 이 원칙을 통해 버라현장은 보존원칙을 위한 현장이자 가치중심보존관리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실천기준이자 이의 모델로 기능한다.

3) 보존과정

통상 보존과정은 유산의 물리적 요소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버라현장에서 사용과 재사용, 연상과 의미의 유지, 그리고 해석을 보존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

은 버라현장의 차별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버라현장이 이들을 보존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문화적 중요성을 구현하고 있는 요소에 무형적 요소를 포함한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중한 접근법이 보존과정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 장소의 변화는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변화는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15조). 하지만 장소를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장소의 문화적 의미나 관습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장소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15조의 주석).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적절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15조 1항). 따라서 해석은 다양한 보존과정에서 함께 행해져야 할 핵심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발생한 변화는 되돌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소위 가역성의 원칙(15조 2항)은 버라현장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패브릭에 대한 변화 개입은 무형적 요소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는 것으로, 이런 이유로 해석이 매우 중요한 보존과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모든 보존과정은 문화적 중요성을 더욱 드러내거나, 유지하거나, 최소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패브릭에 대한 개입(변화) 정도는 유지관리(maintenance), 현상보존(preservation), 복원(restoration), 재건(reconstruction), 전용(adaptation), 새로운 작업(new works) 순으로 증가한다. 복원과 재건을 구분하고, 재건을 보존과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버라현장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원과 재건은 고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정한 시기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동일하다(19조와 20조). 하지만 복원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존의 요소를 재조립해서 장소를 알려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 반면, 재건은 ‘새로운 재료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복원과 다르다(1조 7항과 1조 8항). 복원과 재건은 또한 문화적 중요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필요치 않은 것이며, 오직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실행되어야 한다(19조와 20조). 하지만 재건은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20조 1항). 이는 사용을 위해서는 변화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변화는 추가적인 해석을 통하여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20조 2항).

4) 보존실천

버라헌장의 보존실천 부분은 버라헌장을 구체적으로 보존과 관리에 적용하는 과정들(Burra Charter Process)에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존원칙과 보존과정을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만드는 지침이자, 관리계획안의 이행 및 모니터링과 검토를 위한 지침이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보존조치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하여 장소를 완벽하게 이해한 뒤에 문화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 문화적 중요성을 토대로 개발되어야 한다. 장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증거와 문서 증거 그리고 구술 및 그 외의 증거의 분석을 포함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는 다학제적 접근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6조 1항). 장소를 이해한 다음에는 장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적 중요성 기술문(Statement of Significance)을 작성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적 중요성 기술문과 정책은 해당 장소를 위한 관리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26조 2항). 해당 장소를 위한 문화적 중요성 기술문과 정책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보존 조치와 조치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적절하고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해야 한다(26조 4항).

변화에 대한 용인과 변화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유산영향평가가 도입된 것은 버라헌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관련 내용은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에 영향을 주는 변화는 장소의 관리를 위한 중요성 기술문과 정책을 참고하여 평가되어야 한다(27조 1항)’고 명시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기록의 원칙’(31조)에 따라 ‘기존의 패브릭, 사용, 연상 그리고 의미는 해당 장소에 변화를 주기 전과 후에 충분히 기록되어야 한다(27조 2항).

Ⅲ. 버라헌장의 기여와 한계

1. 버라헌장의 기여

1) 유산으로서의 장소(Place) 개념

버라헌장은 베니스헌장의 물질에 내재하는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최소한의 변화와 물리적 개입이 최고의 보존실천이라고 상정하는 보존철학을 그대로 승계했지만 미학적, 역사적 가치로 평가되는 기념물과 건축물 대신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라는 새

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위대한 기념물과 건축물만을 유산으로 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혁신성을 보여주었다. ‘유적지, 구역, 건축물 또는 다른 작품... 등으로’ 정의되는 장소는 도시구역에서부터 산업 건축물 및 토속 건축물, 지역의 타운들, 원주민 유산, 식민지 시대 건축물과 난파선과 같은 유물에 이르기까지 훨씬 넓은 범위의 유산을 포괄한다(Lesh, 2017: 123). 이렇게 유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장소 개념은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의 장소나 유물들을 유산화하려는 현실적 욕구와 잘 부합되어 버라현장 발표 이후 국제적으로도 장소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소 개념이 버라현장에 도입된 이유는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첫째, 유산이 건축가, 공학자, 고고학자, 역사가 등의 개별 학문 분야에서 정의되는 것을 피하고 다학제적 접근법을 택하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 기념물, 건축물, 유적지 등 베니스현장과 초기 세계유산협약이 정의한 유산개념이 주로 고고학자와 건축학자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 버라현장이 최초로 작성되던 1970년대 유산 보존 실무자들은 구조물과 건축물 등 문화유산은 일반적으로 인접한 주변환경에 의해 가치가 높아지며, 그 주변환경 자체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였다.⁷⁾ 이와 같이 유산 주변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당시의 유산 보존 실무자들의 인식에 영감을 받은 결과였다. 셋째, 유산 측면에서 호주가 직면한 독특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 결과였다. 호주의 자연적 경관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보려는 관점에서 장소 개념이 적절하게 보였던 것이다. 즉 한 장소에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⁸⁾. 또한 원주민 유산은 물질보다 전통적 가치와 무형적 측면이 더욱 중요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를 포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소 개념이 탄생되었다(Logan, 2004: 4).

이렇듯 버라현장에서의 장소 개념은 단순히 유산의 개념을 확대한 것을 넘어 유산이 다양한 학문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이는 한국에서 문화재구역과 그 주변환경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하여 함께 보호하는 것에 상응한다. 즉 장소 개념은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하나의 통합된 보존단위로 인식한다.

8) 버라현장 5조 1항의 주석에 ‘어떤 문화에서는 자연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는 구분되지 않는다(In some cultures, natural and cultural values are indivisible).’로 표현되어 있다.

2) 물질의 보존에서 문화적 중요성의 보존으로: 물질중심 접근법에서 가치중심 접근법으로

버라헌장은 보존을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을 유지하는 것’(1조 4항)으로 정의함으로써 보존 실천의 목적을 물질의 완전성과 진정성 대신 문화적 중요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⁹⁾. 이는 다시 말해서 보존관리의 핵심에 가치의 합인 중요성을 두는 것으로 물질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원이나 수리나를 결정하는 물질중심 보존 또는 물질중심 접근법에서 벗어나 보존관리에 관한 어떠한 결정이라도 내려지기 전에 장소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버라헌장은 보존관리에서 가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며,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한 다음 이에 부합하는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세 단계 보존계획과정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공했다. 가치중심 보존관리 또는 가치중심 접근법을 개념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버라헌장에서 문화적 중요성은 미학적, 역사적, 과학적, 사회적, 또는 정신적 가치로 구성된다. 버라헌장은 현재적, 무형적, 비전문가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문화적 중요성에 포함시킨 혁신성 외에도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가치중심 접근법을 통해 이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 보존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치에 대한 인식을 실용적으로 전환시킨 공로 역시 인정받았다(Hanna 2015; Sullivan 1993).

버라헌장이 채택되고 난 후 1980년대부터 중요성 평가가 유산보존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문화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문화적 중요성 기술문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이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버라헌장 과정도 <표 5>는 그 자체로 가치중심 접근법 모델로 기능한다.

이후 버라헌장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가치중심 접근법을 더욱 정교화시킨다. 유형적 가치 외에도 사용, 연상, 의미, 정신적 가치 등 무형적 가치를 폭넓게 수용하고 반복적인 재고를 추진하면서¹⁰⁾ ‘해당 장소에 중요한 연상과 의미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장소

9) 문화적 중요성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베니스헌장이었다. 하지만 베니스헌장에서 문화적 중요성 개념을 사용한 것은 오랜 세월을 견딘 역사적 기념물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화적 중요성이 등장하는 베니스헌장의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 기념물은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작품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적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다’(ICOMOS, 1965).

10)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 기술문과 정책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조치와 결과는 지속적인 적절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26조 4항).

〈표 4〉 바라현장 과정도-가치중심 접근법 모델

중요성 이해하기		정책 개발하기		관리하기
장소에 대해 이해하기	→	모든 요소들과 이슈를 식별하기	→	관리계획 실행하기
		정책 마련하기		
문화적 중요성이해하기		관리계획 준비하기		모니터링 및 계획 리뷰하기

자료: Australia ICOMOS(2013a: 10)을 정리하여 작성함.

에 대한 사회적, 정신적, 또는 다른 문화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소의 보존, 해석, 관리에 대한 참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비전문가를 유산보존관리의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¹¹⁾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한 사람들 간 ‘건설적인 긴장을 포용한다’(Avrami 외, 2019: 18).

바라현장이 가치의 속성이 변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바라현장은 장소가 갖는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별, 그룹별로 각기 다른 다양한 가치를 가지며(1조 2항), 이에 따라 한 장소에는 서로 갈등하는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13조). 동시에 하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희생되는 가치가 없어야 한다고 단언함으로써 특정한 가치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상황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현장은 실제로 윤리 강령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며, 문화적으로 다른 경쟁하는 가치가 공존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가치중심 접근법은 갈등하는 가치를 다룰 수 있는 관리수단으로서도 기능하게 된다.

더 나아가 바라현장이 정의한 문화적 중요성은 세대 간 공평을 선언하며 과거, 현재, 미래를 연속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유산과 현대 사회와의 긴밀성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사회적 및 정신적 가치는 해당 장소와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장소에서 인식하는 현대적 가치를 강조한다(정상철 외, 2023: 523).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의 유산 만들기, 즉 유산화가 활발히 일어나며, 유산이 현재와 관계 맺는 연결망은 강해진다.¹²⁾ 물질중심 접근법이 유산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었다면 가치중심 접근법에서 유산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다.

11) 이러한 변화는 1999년 개정에서 이루어졌다.

12) 반면에 역사적, 미학적 가치와 같은 유산의 내재적 가치는 과거에 고정된 것으로 과거와 현재를 불연속적으로 단절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에게 유산에 대해 권리 대신 이를 물려줄 책임이 강조된다.

3) 변화에 대한 관리

버라헌장은 15조를 통해서 ‘문화적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수적일 수 있다’¹³⁾라고 명시하고, 보존과 변화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Emerick, 2014: 258). 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법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버라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하지만 버라헌장은 패브릭이 변화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해도 더 이상 물질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존의 최고 실천이라는 관점을 지향하지 않으며 사용, 연상, 의미와 같은 무형적 가치를 위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이러한 유연한 태도는 제임스 커(James Kerr)의 보존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다.¹⁴⁾ 커의 핵심적인 주장은 개발(변화)과 보존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보존계획 프레임 안에 녹아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호주이코모스가 ‘유산의 보존은 변화를 막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제는 유명해진 케치프레이즈를 선언한 것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선언은 헌장의 본문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유튜브의 호주이코모스 채널에 올린 버라헌장 소개 영상의 내레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⁵⁾

2. 버라헌장의 한계

버라헌장은 유산이 속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 그리고 유산과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유산보존접근법을 발전시킴으로서 ‘권위적이고 서구가 지배하는 보존 운동 구조의 심장에 포스트모던의 상대주의라는 가치를 쏘아올리고, 진보라는 계몽주의 서사로 서의 보존 개념의 기반을 뒤흔들었다’(Glendinning, 2013: 403; Lesh, 2019a)는 찬사를 받았다. 동시에 독일의 역사가이자 전통주의적 유산 실무자인 마이클 펫젯(Michael Petzet)은 문화 및 유산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유산보존에 대한 지역의 원칙이 환영받아야 한다면서 버라헌장을 지역원칙의 예로 거론했다(Petzet,

13) 버라헌장 15조 1항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변화는 문화적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문화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경우라면 바람직하지 않다(Change may be necessary to retain cultural significance, but is undesirable where it reduces cultural significance).’

14) 커의 보존계획은 1982년 처음 출간된 이후 2014년 그가 작고하기 전까지 7차례 수정되면서 일종의 버라헌장의 지침서로 기능하며, 버라헌장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커는 1978년에 호주유산위원회(Australian Heritage Commission) 부국장으로 버라헌장 제정에 깊숙이 간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버라헌장과 커의 보존계획 문건은 상호 보완적으로 읽을 수 있다(Kerr, J.S., 2013).

15) <https://www.youtube.com/watch?v=ovuxLukNuDE> (접속일: 2024년 2월 4일 접속)

2004: 28). 하지만 버라현장이 지역현장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한 것에 대해 ‘호주의 유산실천이 유적지와 기념물을 보존하기보다는 변화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존 개념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를 훼손한다’며 불편한 심기 역시 숨기지 않았다(Lesh, 2017: 2). 이들은 유산보존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각자의 신념에 근거하여 버라현장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표현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는 버라현장에 대한 공통의 평가가 담겨 있다. 즉 버라현장이 19세기 서구유럽의 맥락에서 탄생한, 전문가의 지식을 특권화하고 물질에 내재한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유산보존을 탈맥락화하는 ‘공인된 유산담론’(Smith, 2006)으로서의 유산보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주장이다.

실제로 버라현장, 특히 더욱 정교화된 가치중심 보존접근법을 도입한 1999년 개정안은 기존의 담론에 도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Smith 2006: 102-103). 따라서 버라현장의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버라현장이 의도한 대로 혹은 이러한 평가에 부합하게 가치중심 접근법 모델로서 기존의 유산담론을 진정으로 벗어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자연스럽게 포스트모던의 특징인 다성성과 다원성 측면에서, 그리고 버라현장이 호주 국내 유산에 대한 지침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버라현장이 호주 유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 유산 및 이들의 가치를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 가치중심 접근법과 버라현장

가치중심 접근법 모델로서 버라현장은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 - 미학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 또는 정서적 가치의 합으로 요약되는 -을 식별, 평가,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기존의 물질 중심 접근법이 강조한 미학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 외에 유산이 속한 맥락과 관련 사람들이 유산에서 인식, 식별하는 사회적 및 정신적 가치를 중요성에 포함시키고 이의 식별, 평가, 유지에 전문가 외에도 비전문가를 참여시키려고 시도한다. 미학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 또는 정신적 가치의 나열은 알파벳 순서에 따른 것으로 가치의 서열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이들 가치는 모두 동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존은 다른 가치들을 희생하여 특정한 하나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5조 1항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주로 비전문가에 의해 식별,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 이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는 것과 이들의 가치가 전문가의 가치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바라헌장은 문화적 중요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1조 2항 주식)으로서 역사적 또는 사회적 맥락을 넘어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가정되는 장소의 물질에 내재한 본질적 가치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장소의 중요성을 사회적 구성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바라헌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은 바라헌장이 물질에 내재하는 본질적 가치의 식별과 평가를 강조하고 전문가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성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들면서 그 자체의 중요한 혁신들을 스스로 약화시킨다는 것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바라헌장은 여전히 보존의 중심을 패브릭에 두고 이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의 역할과 기술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진술에는 확정적 언어(*be* 동사)를 구사하고 있는¹⁶⁾ 반면, 비전문가 공동체가 포함된 진술에는 추측의 언어(*should*나 *may*)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전문가들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한다.¹⁷⁾(Smith, 2006; Waterton 외, 2006)

이렇듯 바라헌장의 공인된 유산담론에 도전하지 않는 담론의 구성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장소와 가치의 개념, 그리고 비전문가 공동체와 이들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혁신적인 의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을 야기한다. 부연하면 전문가의 가치와 비전문가의 가치가 충돌할 때 비전문가의 가치는 매우 취약해질 수 있으며, 주로 전문가의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와 그리고 비전문가의 가치는 비물질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에 비해 비물질적 가치가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 즉 가치에 위계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유산보존에서 물질 및 전문가의 지식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확실히 극복해야 할 낡은 개념 및 실천으로 여겨진다(Bandarin 외, 2012; Lesh, 2020: 434). 바라헌

16) 서문에서부터 역사적 기록으로서 장소의 물질성을 강조하고 신중한 접근법을 지지하며 패브릭에 가해지는 변화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1, 3, 8, 9, 10, 11, 15, 18, 22, 27조를 통해 이러한 관련 진술을 이어나간다.

17) 이는 26조 3항 '장소의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와 관련이 있는 집단 및 개인에게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참여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should be provided*), 적절한 경우, 그들은 장소의 보존과 관리에 참여할 기회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should also have opportunities*)'와 30조 '모든 단계에서 능숙한 지식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변화는 적절한 지식과 기량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를 통해 구체화된다.

장이 이러한 낡은 개념 및 실천을 넘어서 진일보한 가치중심 접근법의 시대를 연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적 특징, 불완전한 속성 때문에 바라헌장은 많은 경우 보존실천의 결과를 특정 장소의 보존에 참여하는 실무자나 이해당사자 및 지역 공동체의 능력에 맡겨버리는(Emerick, 2017: 258) 무책임함을 드러낸다. 물질과 전문가의 특권은 여전히 진행형이다(Lesh, 2020: 435). 이러한 측면에서 유산보존에서 ‘큰 변화가 있어 왔지만 이것은 혁명적이라기보다 진화적이었고 과거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엄밀한 의미로 패러다임은 변화하지 않았다’(Logan 외 2016: 18)는 윌리엄 로건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바라헌장의 이러한 한계는 당연하게 가치중심 접근법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한계와 맥을 같이 한다. 파울리우스(Ioannios Poulious)와 위제수리야(Wijesuriya)는 이렇듯 가치중심 접근법이 여전히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상 모든 공동체를 등등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유·무형을 통합적으로 보는 리빙헤리티지를 위한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리빙헤리티지 또는 사람중심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 접근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산의 원래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보존의 목적으로 이를 위해 큰 변화도 수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핵심공동체에게 강력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Poulious, 2014; Wijesuriya, 2015).

2) 원주민 유산에 대한 인식과 수용

바라헌장은 호주의 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원칙이자 지침이다. 따라서 호주이코모스를 비롯한 호주의 유산기관에게 원주민 공동체와 이들의 유산을 포용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에 해당할 것이다. 바라헌장의 초기 버전들은 원주민 유산을 포함하고자 시도했지만, 명백하게 사회적 가치보다는 과학적, 미학적,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로 유럽식 호주유산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Lesh, 2019b) 바라헌장의 적용이 서양전통과 관련이 있는 장소들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Sullivan, 2004: 37).

호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더불어 정착민들이 원주민들을 점령하고 국가를 건설한 대표적인 정착민 사회다. 이들이 원주민의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원주민의 문화를 그들의 시각으로 다시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의 유산은 점령자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보존되었다(Byrne, 2008; Harrison, 2013). 하지만 1980-

90년대 원주민 유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주민 장소들의 사회적 중요성과 전통적인 관리인들이 호주의 문화유산보존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하여 1999년 버라헌장은 정신적 가치와 연상 및 의미, 즉 무형적 측면이 유형적 측면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개정이 이루어졌다(Allen, 2004: 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라헌장과 버라헌장 과정이 원주민 장소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인지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다(Sullivan, 2004: 38). 이는 앞서도 설명했듯이 버라헌장이 중요성 평가의 일관성을 비롯하여 유산실천을 전문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비전문가를 소외시키는 단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원주민 공동체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유산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유산보존관리에서 적법하고 심지어 존중받는 역할을 해온 원주민 공동체가 호주의 유산보존관리체계에서 작업하는 전문가와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될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럽식 교육을 받은 유산 전문가와 원주민의 유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은 유산분야에서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원주민 유산을 고고학적 가치로 평가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 원주민 문화에서는 자신들의 유산을 고고학적 기준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1987년, 1990년에 각각 세계유산목록에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가 비판과 논쟁 끝에 1993년, 1994년 복합유산 및 문화경관으로 확장 등재된 뉴질랜드의 통가리로 국립공원과 호주의 울루루 카타 추타 국립공원역시 문화와 자연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유럽적 관점과 이를 구분하지 않는 원주민들의 관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Harrison, 2013: 114-140)¹⁸⁾.

원주민의 장소에 적용하기 위해 채택된 무형적 요소가 앞서 말한 대로 패브릭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문가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무형적 요소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유산의 중요성이 왜곡되고 훼손되게 되는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히 원주민 유산과 관련하여 헌장이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형과 무형의 관계가 더욱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Allen, 2004: 51).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하여 버라헌장은 한 장소에 문화 및 자연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5조) 있지만 버라헌장의 근간이 서구의 문화적 관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18) 이와 관련하여 버라헌장은 한 장소와 문화 및 자연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5조).

이다. 이러한 사실에 빚대어 일부 원주민은 그들의 유산 장소에 버라현장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화제국주의의 한 형태, 또는 적어도 탈식민지 이후의 무례함이나 불감증의 한 형태이며 호주 국가 정체성 건설의 일환으로 원주민 유산을 공동채택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Sullivan 2004: 37).¹⁹⁾ 이들에게 버라현장은 공인된 유산 담론의 재 문맥화 혹은 확장된 버전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원주민 장소에 대한 버라현장, 혹은 가치중심 접근법의 적용 역시 사례별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상황을 연출한다(De la Torre 외, 2005).

IV. 결론

버라현장은 호주의 자연, 원주민, 역사적 장소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를 보존 관리하는 최고의 실천기준으로 호주이코모스에 의해 1979년 호주의 역사적인 탄광도시 버라에서 채택되었다. 채택되고 난 후 진화하는 유산 및 보존에 대한 개념 및 실천을 반영하며 1981, 1988, 1999, 2013년 총 네 차례 개정되었다. 버라현장은 베니스현장을 호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베니스현장의 '재발명'(Lesh, 2019a)이라고도 불리지만, 미학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 가치의 합을 의미하는 문화적 중요성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보존관리의 핵심에 둬으로써 유산분야에서 가치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물질 중심 접근법에서 벗어나 가치중심 접근법의 시대를 열었다. 현재 가치중심 접근법은 국제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보편적인 접근법이다. 이런 이유로 버라현장은 가치중심 접근법모델로 불리며 호주를 넘어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받는다. 장소 개념 역시 기념물과 유적지를 비롯하여 더욱 다양한 유산을 포괄하기 위하여 버라현장이 채택한 이후 유산분야에서 흔히 부동산 유산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했다.

버라현장은 1999년 개정을 통해 문화적 중요성에 정신적 가치를 추가하고 패브릭 외에도 장소의 사용, 연상, 의미를 가치가 구현된 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장소가 가진 무형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이의 식별, 평가, 관리의 과정에 비전문

19) 1999년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에 앞서 작성된 1997년 초안은 채택된 개정안보다 원주민유산과 관련하여 더욱 진보적이었다. 이를 두고 호주이코모스 위원들 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1999년 재 작성된 좀 더 온화된 버전이 채택되었다(hanna, 2016: 41-44).

가의 참여를 촉진하는 혁신성을 보여주며 진화했다. 또한 가치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같은 장소에 서로 갈등하는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유산과 가치의 개념 역시 수용하였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물질과 전문가의 지식을 특권화하는 기존 유산담론인 공인된 유산담론과 차별화하여 다성성과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포스트모던 현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버라현장은 물질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폐기하지 않고 전문가 지식에 대한 특권 역시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비전문가를 참여시키며 다성성과 다원성을 수용하려는 원래의 의도를 약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원주민 유산의 경우 자칫 전문가보다 더 적절한 유산보존관리 당사자가 무시되거나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보존관리, 즉 장소의 문화적 중요성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이에 따른 보존관리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장소의 보존관리에 참여하는 실무자와 비전문 공동체의 의도와 의지에 크게 좌우될 소지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버라현장이 비전문가 및 이들의 가치를 그 자체로 온전히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라현장이 가진 이러한 한계는 가치중심 접근법이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버라현장은 여러 혁신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진화된, 보편성을 획득한 유산보존의 한 단계를 개척하며 이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유산보존을 이해하고 국내유산보존이 이를 반영하며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버라현장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22년에 수립된 한국원칙이 국내 유산보존관리현장에서 적절하게 이용되며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의 유산법에서 버라현장이 어떻게 근간이 되고 실무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원칙과 버라현장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한국원칙에 포함된 개념의 혁신성 여부와 실무에 적용될 때의 장, 단점을 살펴보기 위해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버라현장이 네 번의 개정을 거치며 다른 주요국제문서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진화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유산분야의 진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Allen, C.(2004), The road form Burra: Thoughts on using the Charter in the future, *Historic Environment*, 18(1), 50-53.
- Australia ICOMOS.(2013a), The Burra Charter: 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2013, Burwood: Australia ICOMOS.
- _____(2013b), Practice note: Understanding and assessing cultural significance, Burwood: Australia ICOMOS.
- Avrami, E., & Mason, R.(2019), Mapping the issue of values, in Avrami, E. Macdonald, S. Mason, R., & Myers, D(Ed.), Values in heritage management: Emerging approaches and research directions,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 Bandarin, F., & Oers, R.(2012), The heistoric urban landscape: Managing heritage in an urban century,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 Byrne, D.(2008), Heritage as social action, in Fairclough, G., Harrison, R., Jameson, J. H., & Schofield, J(Ed.), The heritage reader, New York: Routledge.
- De la Torre, M., Maelean, M., Randall, M., & Myers, D.(2005), Heritage values in site management: Four case studies, Los Angeles: Getty Publications.
- Emerick, K.(2014), Conserving and managing ancient monuments: Heritage, democracy, and inclusion, New York & Suffolk: Boydell and Brewe.
- _____(2017), Please Mr President, we know you are busy, but can you get our bridge sorted?, in Tolia-Kelly, D. P., Waterton, E., & Watson, S(Ed.), Heritage, affect and emotion: Politics, practices and infrastructur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Glendinning, M.(2013) The conservation movement: A history of architec-

- tural preservation, New York: Routledge.
- Hanna, B.(2015, February), James Semple Kerr, conservationist (obituary) *Australiana*, 32-35, reprinted from *Engineering Heritage Australia Quarterly Magazine*, December 2014.
- _____ (2016), *Innovation in conservation, a timeline history of Australia ICOMOS and the Burra Charter*, Sydney: Australia ICOMOS.
- Harrison, R.(2013) *Heritage: Critical approach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 ICOMOS.(1965),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The Venice Charter*, Charenton-le-Pont: ICOMOS.
- Kalman, H., & Létourneau, M. R.(2020), *Heritage planning: Principles and process*, New York and Oxford: Routledge, 정상철 · 김수민 · 이현정 · 이나연 역(2023), *문화유산 관리학: 유산 플래닝의 원칙과 과정*, 「한울아카데미」.
- Kerr, J. S.(2013), *Conservation plan, the 7th edition: A guide to the preparation of conservation plans for places of European cultural significance*, Australia ICOMOS.
- Lesh, J. P.(2017), A regional conservation manifesto, the Burra Charter and the Australian re-invention of urban heritage management, ca. 1975-1985, *International Journal of Regional and Local History*, 12(2), 120-133.
- _____ (2019a), Forty years of the Burra Charter and Australia's heritage vision, published online, Available: <https://www.foreground.com.au/culture/forty-years-of-the-burra-charter-and-australias-heritage-vision/>
- _____ (2019b), Social value and the conservation of urban heritage places in Australia, *Historic Environment*, 31(1), 42-62.
- Lesh, James.(2020), Place and heritage conservation, in Edenso, T.,

- Kalandides A., Kothari, U(Ed.), the Routledge handbook of pla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ogan, William.(2004), Introduction: Voices from the periphery: The Burra Charter in context, *Historic Environment*, 18(1), 2-8.
- Mackay, R.(2019), Values-based management and the Burra Charter: 1979, 1999, 2013, in Avrami, E. Macdonald, S. Mason, R. Myers, D(Ed.), Values in heritage management: Emerging approaches and research directions, Los Angeles: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 Petzet, M.(2004), Principles of preservation: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harters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40 years after the Venice Charter, 7-29.
- Poulious, I.(2014), The past in the present: A living heritage approach- meteora, Greece, London: Ubiquity Press.
- Smith, L.(2006), Uses of heritage, Oxon, New York: Routledge.
- Sullivan, S.(1993), Cultural values and cultural imperialism, *Historic Environment*, 10(2-3), 54-62.
- _____(2004), Aboriginal sites and the Burra Charter, *Historic Environment*, 18(1), 37-39.
- Vileikis, O.(2016), Achieving dialogue through transnational world heritage nomination, in Logan, W., Craith, M., & Kockel, U(Ed.), A companion to heritage studies,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 Walker, M., & Marquis-Kyle, P.(2004), The illustrated Burra Charter, Burwood: Australia ICOMOS.
- Waterton, E., Smith, L., & Cambell, G.(2006), The utility of discourse analysis to heritage studies: The Burra Charter and social inclu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2(4), 339-355.
- Wijesuriya, G.(2015), Guidance note: People-centred approaches to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Living heritage, Rome: ICCROM.
- Logan, W., Kockel, U., & Craith, M. N.(2016), The new heritage studies:

Origins and evolution, problems and prospects, in Logan, W.,
Craith, M., & Kockel, U(Ed.), A companion to heritage studies,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Abstract]

Contribution and Limitations of the Burra Charter in International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ee, Hyun Chung · Jeong, Sang Chul

This paper explores ‘The Burra Charter: 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2013’ and examines its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in the field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t was adapted in 1979 for Australian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however, its influence has extended beyond the country, becoming an international standard. This charter introduced a broader heritage concept by replacing monuments and sites defined by the Venice Charter with the term ‘place’ and placed cultural significance, defined as the sum of aesthetic, historical, scientific, and social values, at the core of conservation. It provides a systematic three-step approach: understanding significance, developing policy, and managing heritage con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olicy. Through this approach, it opened an era of a new conservation paradigm, value-centered approach, evolving from material-centered approach and spreading globally, thus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heritage conservation history. Today, value-centered approach, as modeled by the Burra Charter, encompasses social, cultural, and contextual values, ensuring non-expert involvement. However, the Burra Charter still privileges intrinsic values in the fabric and expert knowledge, creating a hierarchy of val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equal and making it difficult for non-professionals to participate.

[Keywords] Burra charter, place, cultural significance, values-centered conservation, managing change

Lee, Hyun Chung_Senior Researcher, Cultural Resources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First Author (leehyunchung@naver.com)

Jeong, Sang Chul_Professor, Dept. of Heritage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 Corresponding Author (jsc4362@nuch.ac.kr)

지역 성평등 정책 사례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공혜영 · 조소연

[국문초록]

성평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과 노동환경으로서의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인식의 문제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은 여전히 한계와 함께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의 사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선행 연구, 통계자료,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에 대한 주요 이슈와 실태, 2023년까지의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성평등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담당자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평등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성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문화예술정책, 젠더, 성평등, 성평등정책, 성평등교육

투고일: 2024. 5. 14. 심사일: 2024. 6. 18. 게재 확정일: 2024. 7. 30.

<https://doi.org/10.16937/jcp.2024.38.2.63>

공혜영_세종대학교 무용학 박사졸업/주저자(tinahy11@gmail.com)

조소연_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교신저자(andcontents@gmail.com)

I. 서론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불평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문화예술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여성 종사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인식으로 여초분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예술인과 종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예술이라는 탈상품화된 노동력 착취, 여성의 경력유지 어려움,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성별 직종분리 현상 및 성별임금 격차 등이 문화예술분야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예술인과 종사자들의 의사결정권 자리에서의 배제로 인한 과소대표, 비가시적 성불평등 존재, 성희롱·성폭력 문제 등 인권침해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육주원, 2022¹⁾; Diana L. Miller, 2016²⁾).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요구받는 여성예술가들의 경우, 일에 대한 헌신과 열정, 비가시화된 무급 가사노동, 육아 등의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성 등에 의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여성예술인에 관한 기존 문헌들은 사회적 재생산 책임과 일과 가정의 갈등이 성평등의 주요 장벽이라고 강조한다. 많은 여성예술인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더 자주 경험하며(Stohs 1992; 문화체육관광부 2021), 돌봄이라는 여성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예술경력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Brooks and Daniluk 1998; Piito 1991; 홍기원, 2019). 또한, 성공한 많은 여성예술인들도 자녀를 낳거나 키우는 것이 자신의 예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자제하기도 한다(Cowen 1996; Parker and Pollok 2013; Diana L. Miller, 2016: 122

1) 육주원(2022: 43)은 예술 분야는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대표적인 ‘여초’분야인데 이는 마치 분야 자체의 성평등성, 진보성을 담보하는 특성으로 간주되에도 불구하고, 예술계가 여초분야가 된 것은 성평등이나 진보성 때문이 아니라, ‘탈상품화’가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탈상품화가 진행될수록 저임금, 무급 노동에 여성 인력이 유입된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예술’이라는 특수성 즉 창의적 활동,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시간과 공간적 측면에서의 유연한 노동 환경은 여성예술인들에게 더 부합해 보이지만, 현실은 이러한 노동을 통해 성불평등이 재생산된다(Gil, 2002; Hesmondhalgh and Baker, 2015; 육주원, 2022: 33 재인용).

2) 여성예술인들은 각 분야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관리직이나 리더로서 과소대표되고(Bielby 2004; Cowen 1996; Parker and Pollock 2013[1981]; Piitro 1991; Tuchman and Fortin 1984) 있고, 유급 일 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Bielby and Bielby 1996; Goldin and Rouse 2000),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수입이 적으며(Menger 1999), 명백한 불평등을 경험한다(Bielby and Bielby 1996; Brooks and Daniluk 1998; Leonard 2007). 게다가 비평가, 동료, 청중 및 지원 담당자의 작품에 대한 미적 품질(aesthetic quality) 즉 평가와 판단은 체계적으로 여성예술인에 의해 창작·제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Leonard 2007; Millar 2008; Pheterson et al. 1971; Stokes 2015), 저명한 여성예술인들은 남성 지배적인 예술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많은 개인적, 감정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Kosmala 2007; Midler 1980)(Diana L. Miller, 2016: 119 재인용).

재인용). 이러한 문제들은 여성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예술 환경이 여성예술인들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권력형 젠더폭력에 기반한 성불평등은 어릴때부터 예술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육을 받는 학생, 잠정적 예비 예술인, 또는 막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신진 예술인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이는 곧 성희롱·성폭력 등과 같은 범죄적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해 더욱 문제적이다. 문화예술분야의 성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이끄는데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촉발의 계기가 되었지만, 결국 문화예술분야의 성불평등은 여전히 가부장제 남성중심적 노동환경 구조, 도제식 교육과 유명세에 따른 제한적 진로 선택,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침묵의 카르텔 형성 등의 권력형 위계 등에 의해 대부분 개인(사)적이며 폐쇄적 구조 속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이러한 문제가 늦게 드러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불평등은 어떻게 작동하며 실제 환경은 어떠한지,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평등 실현, 나아가 문화예술분야에서 성별, 성 정체성 및 지향성, 연령, 계층, 장애, 지역 등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통해 성별 편향성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다양한 성평등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와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에 맞춘 성평등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정책들은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평등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답습하는 형태로는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더욱이 성평등 정책은 시대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 이는 성평등 문제의 다차원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시대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그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성평등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성평

등 정책 사례가 중앙정부 차원의 성평등 지원 정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보완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지원 정책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지역의 성평등 지원 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 통계자료,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에 대한 주요 이슈와 실태, 2023년까지의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성평등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담당자 인터뷰와 자료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지원정책의 접근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환경 실태

최근 몇 년 동안 미투 운동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불평등과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이렇듯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평등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불평등과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성불평등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환경, 성평등 인식, 성희롱·성폭력 실태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환경

문화예술분야의 예술인 및 종사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예술인 및 종사자는 단기 계약직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약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전히 구두계약

을 통해 입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 통계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의 통계 등을 토대로 문화예술분야의 여성 과소대표, 성별 고용형태 및 임금 격차,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여초 분야, 여성 과소대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 예체능계열 학사 학위 취득자는 여성 65.0%, 남성 35.0%, 석사 학위 취득자는 여성 69.3%, 남성 30.7%이며, 박사 학위 취득자는 여성 57.2%, 남성 42.8%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학위 취득자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석사 학위 취득자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학과정 예체능계열 전임교원은 여성 1,906명(37.1%), 남성 3,231명(62.9%)으로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예체능계열의 성별 학생 비율과는 상반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통계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예술인 및 종사자는 2024년 2월 말 기준 전체 178,073명 중 여성 98,274명(55.2%), 남성 79,799명(44.8%)으로 여성예술인이 남성예술인보다 약 2만 명 정도 많았다. 그러나 김혜인(2018: 47-50)에 의하면, 대부분의 문화예술 기관이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가 여성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직급별 여성 비율에서 무기계약직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고위직 여성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 주요 기관 192개관의 기관장 중 여성 기관장은 단 9.9%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여초분야로 알려진 문화예술분야에 수직적 성별 직종 분리와 의사결정의 주체인 고위·관리직에서의 성별 불균형이 확연히 드러난다. 즉 고위직으로 갈수록 성별 대표성 부분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별 고용형태 및 임금 격차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업과 겸업(예술활동 직업, 예술관련 직업, 비예술 직업) 모두에서의 예술인 고용형태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두 높게 나타난 반면,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에서는 여성의 분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58-61).

그리고 예술인의 성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가구 총 수입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인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여성 570.3만 원, 남성 832.9만 원), 개인수입 중 예술관련 직업(교수, 강사 등) 수입(여성 416.5만 원, 남성 597.2만 원), 비예술 직업 수입(여성 875.6만 원, 남성 1,694.5만 원)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83-86). 이러한 고용형태의 차이는 임금 격차로 나타나는데, 여성예술인의 불안정한 창작·노동 환경이 곧 낮은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예술분야의 성별 고용형태에 따라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경력단절

예술경력 단절 경험의 경우, 여성 37.9%, 남성 34.5%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예술경력 단절 기간은 여성 2.5년, 남성 2.0년으로 경력단절 기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경력 단절 이유로는 남성(77.8%)과 여성(63.15) 모두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는 남성은 기타(13.3%), 여성은 출산·육아(14.0%)를 경력단절의 큰 요인으로 꼽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106, 108, 109). 이렇듯 많은 예술인들은 수입 부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데, 예술분야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임금이라는 특성상, 특히 단기 계약직과 같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많은 여성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예술활동과 가사·돌봄을 균형 있게 하며,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여성예술인들의 경우, 일시적 경력 중단이 곧 은퇴로 이어지기도 한다.

2)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인식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인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교육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방향과 지원 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예술인 및 종사자의 인권 실태조사 연구들을 바탕으로 성평등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예술환경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물음에 '남녀 평등' 65.2%,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26.8%, '남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

8.0%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남녀 평등’ 응답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남성(75.5%)이 여성(55.9%)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80). 이러한 경향은 박근화·김지학(2021: 31-39)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불)평등에 대해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불평등은 주로 성별 직무분리, 성별 임금격차, 남성중심적 권력문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 부재, 여성예술인들의 외모강조와 성적 대상화 등으로 나타났다.³⁾

이와 같은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 논리와, 성평등과 존중의 부족은 문화예술분야의 성불평등 문제를 더욱 비가시화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류정아, 2018; 박근화·김지학, 2021)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3)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분야별 실태조사 및 정책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박근화·김지학, 2021: 3). 이에 2017년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공연예술, 출판, 대중문화, 영화계 등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박근화·김지학, 2017, 2018, 2021; 박근화 외, 2018; 류정아, 2019; 윤우석 외, 2019; 김동식 외, 2018; 이나영 외, 2018).

박근화·김지학(2021)의 문화예술분야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험한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6.7%였으며, 여성(31.8%)이 남성(20.5%)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3)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영화인들은 성별에 따른 직무분리와 임금격차, 남성중심적 네트워크에서 오는 소외와 배제, 남성이라는 표준과 규범으로 인한 타자화, 임신·출산 등 여성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중심적 권력과 문화에서 비롯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김동식 외, 2018: xiii). 박근화 외(2018: 21, 25)의 예술인들의 공연예술활동 현장 인식 조사 관련, ‘본인이 활동하는 예술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벌, 지연, 사제 관계 등의 인맥이 중요하다’ 항목에 긍정적 응답 70.1%로 가장 높게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예술인들은 외모나 성적인 매력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64.5%, ‘예술계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지만 연출 및 감독의 비율은 남성의 비율이 높다’ 5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문화예술분야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기타 등 14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행위자는 주로 소속기관 상급자(43.8%)로 나타났으며, 외부 동종분야 종사자(22.4%), 문화예술인(22.1%), 교수·강사(19.4%) 등이 뒤를 이었다(박근화·김지학, 2021: 74-75, 77).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식으로는 응답자의 76.9%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여성은 주변인과 상의하는 등 개인적인 차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피해를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남성(61.9%)이 여성(47.1%)보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30.7%), '가해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26.1%), '아무도 조치를 취할 것 같지 않아서'(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박근화·김지학, 2021: 79-80, 88-90).

이처럼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 경향이 높았으며, 주로 지위나 권력이 높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건 발생 후 신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거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가해자는 복귀하고 피해자가 문화예술분야를 떠나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 논리가 매우 견고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박근화·김지학, 2017, 2018; 이나영 외, 2018). 미투 운동 이후,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화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사건 이후 대처 방식 등이 성별, 세대 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2.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 현황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을 근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술인 복지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후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

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내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별도의 장(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제16조~제19조))을 구성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지원 정책의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사건이 큰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고(배성희, 2023: 10),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 방지, 피해구제 방안 마련,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체가 되어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예술인 신문고 등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 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재단, 문화재단 등에서 자체적으로 성평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성평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 현황과, 이를 토대로 성평등 지원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은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로반디돌봄센터, 마포예봄센터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자녀 24개월부터 1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 시 11세~13세 자녀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예술인들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은 예술인들이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예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정책은 수도권(서울)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 수혜의 형평성면에서 고민을 해 봐야 할 지점이다.

2) 문화예술계 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내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은 문화예술계 특수

성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과정과 찾아가는 교육과정 이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문화예술계 성 차별적 구조와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판례, 문화예술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문화예술계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약속 등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은 10인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교육 신청 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교육 1회당 약 90분~180분 정도,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 외,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의 예술인 대상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의 수어·문자 통역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책’ 등 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3)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⁵⁾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의식 변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전개된 바 있는데, 전문강사 양성 제도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와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를 중심으로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예술계 성폭력의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 특화 과정으로,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로 1기 19명(2018년), 2기 17명(2019년)이 위촉되었다(송인자 외, 2018; 임지혜, 2020: 427).

문화예술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와 콘텐츠 구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2018년 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⁵⁾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시범 운영 참여자는 총 43명 대상을 시작으로, 25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최종 19명이 전문강사 1기로 위촉(송인자, 2018), 2019년에는 17명이 위촉되었다. 이렇

5)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0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모집 자료를 확인함에 따라 해당 자료와 송인자 외(2018) 자료를 참고하여 전문강사 양성과정 내용을 작성하였다.

게 중앙에서 양성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들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전국 문화예술분야 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활동 및 환경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크다는 점, 전문강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교육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예술계 성평등·성인지 교육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임지혜, 2020: 428)는 점은 한계와 과제로 남아 있다.

4)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센터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센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등 3개 기관이 있다. 예술인 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제2호⁶⁾ “예술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한다. 신고인이 희망 시 국가인권위원회 및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콘텐츠성평등센터보라는 콘텐츠산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든든은 영화·영상관련 종사자 대상 (사)여성영화인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위원회’를 발족하고, 2023년 12월 19일에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개소하였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예술인 권리보장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 상담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예술인 권리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의 역할로 보다 적극적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제2호: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5)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지원 정책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외 지역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여성재단, 문화재단 등에서 일부 성평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⁷⁾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배성희 2023: 31). 이에 대부분의 지역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창작준비지원금, 의료지 지원, 예술인 신문고, 성폭력피해 신고 상담지원, 법률상담지원 등 성평등 지원 사업을 일부 위탁 운영하거나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일부 지역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예술분야의 복지지원 수요 파악은 물론, 지역의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대상 성평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의 ‘성평등인식 개선사업’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

또한, 각 기초광역문화재단⁸⁾에서는 분야별, 대상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분야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은 주로 성평등(자문)위원회 운영,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캠페인,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가령,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청 성평등·탈위계 문화조성 플랫폼’,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 성평등 캠페인-성차별 언어 개선 아이디어’ 및 ‘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 광주문화재단의 ‘성평등 예술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 성평등 지원 정책의 범위와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수혜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중앙정부의 성평등 지원 정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일부 진행됨에 따라 예산과 인력 부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관련 기관들의 환경은 더욱 열악하여

7) 부산이 2017년 최초 설립되어 현재 전북,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전남, 제주, 광주, 충남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27).

8) 전국 279개의 시군구 중 2022년 7월 기준 기초문화재단은 116개, 광역문화재단은 17개(주성돈 외, 2022: 1)로 총 133개의 문화재단이 있다.

성평등 지원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정책 수혜의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성평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내용, 방향성이 모호하다. 현행 성평등 지원 정책은 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또는 후속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예술분야의 성별 편향, 성불평등 발생 원인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미흡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성불평등 발생 원인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하여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Ⅲ. 문화예술 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의 새로운 모색

1. 한국 성평등 정책 관점의 변화

앞서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환경과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성평등 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부분의 성평등 정책이 '문화예술 분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중앙의 여성정책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여성정책의 흐름을 통해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성평등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한국의 여성정책을 시대별 흐름에 따라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배은경, 2016: 20-34)를 바탕으로 크게 6개의 시기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초창기(해방후~1950년대)

1948년 해방 이후부터 미군정기를 거쳐 이승만이 집권한 1960년까지를 초창기로 분류했다. 해방 후 미군정기의 시기까지는 정책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다. 보건후생부에 부녀국이 신설되어 담당 기구는 있었지만 이 시기의 여성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 수립을 위한 지역 하부 조직으로서의 여성 집단의 간담회 활동이나 일제강점기 시절 공창제와 같은 악습을 폐지하는 것 정도였다. 1948년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사회부의 부녀국에서 여성 관련 정책을 담당했지만,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대부분이었다. 1953년에는 ‘근로 기준법’(1953.5)을 제정하여 사회부 노동국에서 여성과 소년 노동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기도 했다. 1955년 2월 사회부와 보건부가 통합되어 ‘보건사회부’가 되면서 기존의 여성 대상 정책을 전담하게 되었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은 변화되지 않았다.

2) 제1기(1960~1986년)

1960년 갑작스런 정권의 변화와 사회 내외부적 혼란까지 가중되며, 여성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1963년에는 보건사회부 ‘부녀국’이 ‘부녀아동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사회부 보건국 산하에 ‘모자보건과’가 신설된다. 이 시기 국가의 주요 정책이었던 ‘경제 개발 정책’을 위한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산아제한 정책’과 ‘영유아 탁아시설 마련’에 정책이 집중되면서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은 축소되었다. 초창기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제 체제 속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면, 제1기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여성 노동력이나 근대국가의 성별분업의 구분 의미로서의 전업주부와 같이 근대적인 젠더관계 속에서 여성을 규정지어,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는 이전에 비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제5공화국(1980~1987)이 들어서면서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은 가정복지국(1981.11)으로 변경되고 부녀복지과, 아동복지과, 가정복지과를 두어 정책이 확대되는 듯 했지만, 편제만 변경되었을 뿐 관련 정책은 대부분 근대적 젠더관계 속 일반화 된 여성의 범위 바깥에 있는 일부를 위한 시혜성을 띤 정책이었으며 가족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전히 여성정책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다만 1975년 UN ‘세계 여성의 해’, 제1차 세계여성대회와 1980년 제2차 여성대회, 1985년 제3차 여성대회 등의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무총리 정책자문기관인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에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3) 제2기(1987~1997년)

1983년 이후 조직된 여성단체들의 활발한 진보적 여성운동은 1987년 제6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여성정책에 영향을 주었고, 이 흐름은 문민정부(1993~1998년)까지 이

어졌다. 정무장관(제2)실은 여성문제를 전담(1990.6)했으며, 기존의 보건사회부에는 부녀복지과가 신설되고(1991.7) 노동부의 근로기준국에는 근로여성위원회가 설치(1988.9)되는 등 중앙 행정기구 편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여성운동과 정부의 변화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과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이끌어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여성정책 기본 5개년 계획이 추진되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복지증진이라는 뚜렷한 정책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1994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인권과 권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 시기의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흐름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이라는 WID(Women In Development) 관점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1995년 UN의 제4차 여성대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2기는 앞선 두 시기에 비해 비로소 여성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거론된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4) 제3기(1998~2007년)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정책의 관점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한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1998.2)되었고, 2001년에는 정부 부처인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정책의 기획과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의 강화와 정보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흐름은 2002년 참여정부에도 이어져 2003년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제’가 신설되고 2005년에는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정부의 역할 확대와 지속적인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직장 내 성희롱’의 공론화와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년에는 ‘성매매 금지법’이 제정,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이 제정되고 정부 합동 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참여도가 반영되었다.

이 시기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변화가 국내 여성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국가 경제 발전의 과정에 젠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GAD(Gender And Development) 관점이 자리 잡으면서 이 영향으로 국내 여성정책 또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성주류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5) 제4기(2008~2017년 초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정부를 지향하며 행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던 여성가족부는 여성부(2008.2)로 축소되었다가 여성가족부(2010.3)로 다시 확대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유지하며 정책을 수행했다. 이 시기 여성정책의 근본적 목표인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상실되고 가족과 청소년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여성정책의 대상이 ‘가족 내 여성’으로 다시 후퇴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의 강조와 가족 기능의 강화에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언급은 점차 희미해졌다.

이 시기에도 2007년 ‘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2년 ‘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지만,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고 2015년에는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에 편입되었다.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그 용어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영역에서 여성정책의 정체성 약화와 남성과 여성 간의 기계적 평등 구조 형성을 야기하면서 여성정책이 생물학적인 성별 개념으로 퇴보한 시기라 할 수 있다.

6) 제5기(2017년 5월~2022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고 ‘성평등 문화 실현’을 하나의 의제로 설정했다. 성평등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이행을 총괄 관리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편제 변화 시도는 각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두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여성가족부와 각 정부 부처가 공조하는 형태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여성정책이 시행되었다.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을 운영(2018년 4월~2021년 3월)해 공공, 교육, 민간기업, 문화예술 등 분야별 신고센터를 열어(2018년 3월)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2018년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는 실제로 여성,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역대 정부들

에 비해 여성정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노동분야의 성평등(성별임금 격차 해소)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한국의 여성정책의 흐름을 초창기부터 5기까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시작은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한 복지의 관점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정책이 국내외의 성평등 담론과 이슈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점차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노동자로서의 여성’에 대해 집중하고 사회 속 여성의 삶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등장한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2기 시기에 등장한 이 움직임은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제기하면서 한국 여성 정책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로도 젠더 거버넌스는 꾸준한 활동과 투쟁으로 실질적 의제들을 생산해내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지원정책 역시 이와 같은 관점의 흐름을 따라 보호적 관점이나 예방적 차원이 아닌, 문화예술계 안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여성 예술가의 삶에 집중한 성평등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방향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평등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214).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2018.3.12.~6.19.)을 운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도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2018.3.19.~2019.6.)를 운영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계, 영화산업 등 분야별 예술인 및 종사자 대상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실시,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사업 지원, 202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권고사항 발표에 이어 2021년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정책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적인 접근방식 중 하나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top-down)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네스코(UNESCO)는 문화와 성평등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인권에 기반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8개의 권고조항을 발표했다. 첫째,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 둘째,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차별은 창작자 및 향유자의 문화권 침해, 셋째, 성평등한 문화정책은 성차별과 성적 편견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 넷째, 성평등, 문화권(인권으로서의 문화권), 문화다양성의 연계 속에서 문제해결 필요, 다섯째, 문화다양성 협약은 성평등 원칙을 인권과 문화권의 초석으로 설정 등이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175-176). 인권의 영역에서 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방식은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여성의 성평등’이라는 성평등 정책의 목적이 초점을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UNESCO의 ‘젠더 창의성(Gender Creativity)’ 논의(2005)에서 또 다른 답을 찾으려 한다. 젠더 창의성 논의에서는 문화분야의 성평등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①정부, ②미디어, ③예술가·문화전문가 및 관객, ④대학, ⑤입법자, ⑥사법부, ⑦시민단체, ⑧도시와 지방정부, ⑨국제 및 지역 조직과 같은 9개의 영역에 제시했다(UNESCO, 2021: 10-11). 이제는 성평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단일 노력이 아닌, 다양한 조직과 분야 또는 구성원 개개인의 동시다발적인 변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봐야 할 부분은 ⑧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 부분인데, 지역 성평등 정책 및 조치를 제정하고, 모범 사례 공유, 여성 예술가를 지원하는 지역 프로그램 개발, 조직 간 대화의 촉진과 같이 기존 중앙정부의 정책에 기대어 수동적인 정책 시행을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주체적이고 지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선행연구(임지혜, 2020: 427)의 문화예술계 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성인지 교육정책과 병행하는 지역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범시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제 해결적 관점의 정책이 아닌 성평등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실현하는 관점에서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IV. 지역의 성평등 지원 정책 사례와 의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성평등 정책은 국내외의 성평등·여성정책의 흐름에 따라 그 관점이 반영되며, 그에 따른 정책의 내용들도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의 성평등 정책은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는 ‘탑-다운’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성평등 정책 철학과 실행 의지에 따라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지역별로 성평등 인식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상이하여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재의 정책 시행 형태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 위치 그리고 중층적인 정체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성평등 교차성의 관점에서도 미흡하다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정책 지원사업 중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례들을 선정한 기준은 첫째, 지역의 문화예술 또는 여성 관련 기관·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 둘째, 성평등, 여성 등과 관련된 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프로그램, 셋째, 2년 이상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이다. 2018년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에도 다양한 성평등·여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었으나 대부분 특강의 형태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지속성’을 중점 기준으로 삼아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소개하기로 한다.

1.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문화예술 다리미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이하 전북 네트워크)는 2020년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문화 확산 네트워크 전북포럼’을 계기로 전북권 5개 문화재단(고창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과 문화예술인 기관·단체 3개소(전북대학교부설 여성연구소, 전북 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가 성평등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첫 출범했다.

전북 네트워크는 출범 이후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인식 확산과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학술포럼’, ‘성평등 원탁회

의',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2022년에는 부안문화재단과 전주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새롭게 전북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북권 6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인 기관·단체 4개소가 공동으로 성평등 관련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 네트워크의 관련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인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다리미'이다. 전북 네트워크의 출범과 동시에 기획·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여성주의 비평가의 양성을 목표로 특강, 여성주의 시각에서 문화예술 보기 실습, 글쓰기 실습 등의 내용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연속 3회째 운영되고 있다.

〈표 1〉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문화예술 비평학교 운영 현황

연도	구분	내용
2021년	프로그램명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교육기간	2021년 6월3일~8월 12일 매주 목요일 오후2시~5시(대면+비대면), 총 10회차
	교육내용	여성주의 시각에서 연극, 문학, 시각, 영화 콘텐츠를 보고 비평문을 작성하는 워크숍 과정 및 공유회
	교육대상	젠더 감수성이 있고 문화예술비평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문화예술인(지역제한 없음)
	성과	총 참여자 수 18명, 수료자 수 13명 - 공유회(비평문 합평회) 1회, 비평문 15편, 비평집 1종 (전북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1 비평집 『스팀steam』)
2022년	프로그램명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
	교육기간	2022년 9월7일~11월 16일 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대면+비대면), 총 11회차
	교육내용	-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작업의 필요성 및 문화예술 장르별 비평 사례를 담은 전문가 특강 - 지역문화예술작품(전북지역을 소재로 하거나 전북 문화예술인이 제작한 작품)을 보고 비평문을 작성해보는 쓰기 활동
	교육대상	① 2021년 '문화예술다리미' 수료생 ② 젠더 감수성이 있고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예술비평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문화예술인 ※ 2가지 지원 요건 중 1가지 선택 지원(지역제한 없음)
	성과	총 참여자 수 9명, 수료자 수 6명 - 공유회(비평문 합평회) 1회, 비평문 15편, 비평집 1종 (전북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2 비평집 『스팀steam』)
2023년	프로그램명	성평등 예술비평활동 '문화예술다리미'
	교육기간	2023년 6월28일~10월 11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대면+비대면), 총 10회차
	교육내용	여성주의 시각에서 전북 지역을 소재로 하거나 전북지역 문화예술인이 제작한 문화예술 콘텐츠(연극, 문학, 시각, 영화 등)를 보고 비평문을 작성하는 활동 지원 및 공유회 운영

〈표 계속〉

연도	구분	내용
2023년	교육대상	① 2021년(1기) 또는 2022년(2기) '문화예술 다리미' 수료생 ② 젠더 감수성이 있고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예술비평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자 ※ 2가지 지원 요건 중 1가지 선택 지원(지역제한 있음. 전북도민)
	성과	총 참여자 수 9명, 수료자 수 7명 -공유회(비평문 합평회) 2회, 비평문 15편, 비평집 : 1종 ※ 공유회(비평문 합평회) : 전북 14개 지자체 제작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공유 1회, 비평문 합평회 1회 (전북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3 비평집 『스팀steam』)

전북 네트워크의 사례는 지역의 문화재단과 예술인 단체, 학계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문화예술계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관련 단체를 움직여 하나의 큰 연합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활동이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재단과 단체는 각각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공간제공, 기획 및 운영 인력, 교육 인력의 제공을 담당하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평의 대상이 되는 연극, 문학, 영화,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은 전북 네트워크의 구성 단체인 각 문화재단의 소장품이나 당해 재단에서 기획·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연, 전시 등을 활용하여 비평 대상 작품의 섭외와 감상에 대한 지원까지도 하고 있다. 이처럼 비평 대상 작품을 지역 내 작품들로 구성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문화예술 다리미 비평집 『스팀(steam)』의 발간은 국내에서 볼모지와 다른 없는 '성평등 관점 문화비평' 활동을 끊임없이 진행하면서 점차 하나의 담론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특정한 주제로 운영할 때 일단 그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려면 재원의 문제와 운영 주체의 의지가 중요한 점인데 전북 네트워크의 사례처럼 지역 내 여러 개의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성을 가지고 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는 운영 형태적인 면이 다른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2. 부산 영도 도시문화센터 영도문화기획자의 집: 성평등 문화기획자 과정

영도 도시문화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제1차 법정

문화도시에 ‘사람-자연-역사가 문화로 이어지는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라는 주제로 지정된 영도 지역의 문화도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센터는 ‘영도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영도 도시아카이브, 영도 풀뿌리 문화예술교육포럼, 예술치유 프로그램(똑똑똑 예술가) 및 각종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공동체(보람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지원하여 문화 활동이 사회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의 사업 중 ‘영도문화기획자의 집’은 2021년부터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영도 문화도시와 함께 문화기획자로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1년 첫 번째 프로그램(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은 첫 회차에서는 성평등·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센터 주최로 진행된 ‘여성기획자 NEXT 스테이지 IN 영도’⁹⁾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행사의 참여자들이 성평등 문화기획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듬해 ‘영도문화기획자의 집’ 과정에 성평등 문화기획자 과정이 정식으로 개설되었다.¹⁰⁾ 2022년부터 연속 2회째 운영 중인 ‘성평등 문화기획자 과정’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읽어내고, 성평등 관점을 기르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워크숍, 기초-심화 멘토링, 실습을 진행한다.

센터의 사례는 지역의 여성 문화기획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특화 과정으로 성평등 문화기획자 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공통 과정의 커리큘럼에도 ‘성평등 워크숍’을 포함시켜 영도문화기획자의 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교육 대상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관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기획 과정에서 발생

9) 영도 도시문화센터 주최·주관,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공동대표 송진희 총괄 기획으로 진행된 행사로 문화도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여성기획자들의 성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성평등 관점이 곧 문화기획에서의 전문성과 연결된다는 동시대적 공감대를 만들고, 지역 내 여성 기획자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2021년 10월 16일 진행된 행사는 총 참여인원 211명, 온라인 스트리밍 20,960회 재생, 전국 14개 도시 네트워크가 참여했으며, 이 행사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다음해(2022년)에는 ‘여성기획자 NEXT 스테이지 IN 원주’라는 타이틀로 원주에서 진행되었다. 영도도시문화센터에서는 2022년에는 이와는 별도로 ‘부울경 문화기획자 next stage in 영도’를 진행하여 동남권 지역 내 문화인재 교류와 문화기획자 네트워크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10) 영도문화기획자의 집 성평등 문화기획자 과정 기획 배경과 관련된 내용은 영도문화도시센터 문화팀 담당자와 2024년 2월 16일 서면으로 진행된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표 2〉 영도 도시문화센터의 영도문화기획자의 집 성평등 문화기획자 과정 운영 현황

연도	구분	내용
2022년	프로그램명	영도문화기획자의 집
	교육기간	2022년 4월~8월 ①공통워크숍: 4월 29일(금), 총 1회차 ②특화과정: 5월7일~8월16일, 유동적으로 진행(온라인), 총 8회차
	교육내용	- 영도문화기획자의 집 프로그램은 ①공통워크숍, ②특화과정, ③실험프로젝트로 구성되며, 특화과정의 성평등기획과정은 7~8회차 내 수업으로 진행 - 전체 대상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통과정의 성평등기획 특강은 모든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획자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 안내하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현장을 위한 기획자의 역할, 준비단계, 체크리스트를 공유 - 특화과정의 '성평등 기획'에서는 성평등리터러시 교육, 워크숍, 멘토링, 실습형 강의로 진행
	교육대상	문화기획 1년 미만 입문단계 시민
	성과	총 참여자 수 16명, 수료자 수 12명
2023년	프로그램명	영도문화기획자의 집
	교육기간	2023년 6월10일~8월12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7시, 총 7회차
	교육내용	- 문화기획자로서 성평등 관점을 세우는 경험 쌓기, 보이지 않는 개인의 서사와 사회적 불평등을 문화기획으로 개입하기 - 기획자로서 다양성, 성평등 관점 태도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탐구활동 및 기획서 작성
	교육대상	문화기획 활동 희망자 ※ 영도주민 및 영도구 재학, 근무 중인 타지역 주민 우대
	성과	총 참여자 수 11명, 수료자 수 5명

할 수 있는 성평등 관점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과 인식개선 효과를 전체 프로그램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성평등 문화 행사는 센터의 '성평등 실험과정'을 통해 실제 진행을 하여 교육 대상자가 기획한 문화 행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는 영도문화기획자의 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성평등 문화 활동에 하나의 플랫폼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충북여성재단: 여성주의 문화 기획자/활동가 양성과정

충북여성재단(이하 재단)은 2014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조례제정 등 설립 준비를 마쳐 2017년 출범한 충청북도 지역 여성·가족 분야 공공기관이다. 충북 지역의 성별 격차와 성별 불균형 해소,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여성 취약계층의 생활개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돌봄망 구축 등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있다.

재단의 다양한 성평등 교육사업 중 ‘여성주의 문화기획자/양성가 과정’은 문화예술 성평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021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여성 가족부, 충북여성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성평등 주제의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여성들의 영상콘텐츠 제작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충북지역 여성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영상기획에 대한 교육 기회가 없었다는 의견과 앞으로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영상제작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이다.¹¹⁾

재단의 프로그램은 앞의 두 사례와는 달리 선정 기준의 ‘연속성’에는 미치지 못하며 2021년과 2023년 진행된 프로그램명도 조금 다르다. 하지만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업이 시간 차이가 있고, 명칭이 상이하지만 ‘지역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영상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실습을 한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을 가진 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과 비록 예산 문제로 2022년에는 운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재단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례에 포함시켰다.¹²⁾ 프로그램은 충북지역 여성의 삶과 여성주의 시각에 대한 이론적 강의와 영상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촬영과 같은 실습, 그리고 실제 제작을 하고 마지막에 영상공유회를 통해 발표를 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충북여성재단의 여성주의 문화기획자·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현황

연도	구분	내용
2021년	프로그램명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교육기간	2021년 11월10일 ~ 12월 22일 총 40시간, 11회차
	교육내용	충북지역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 및 여성주의 시각에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고, 이를 기획·제작하는 워크숍 및 공유회 운영
	교육대상	여성주의 문화기획에 관심있는 충북도민 누구나
	성과	총 참여자 수 12명, 수료자 수 10명 공유회 1회, 영상제작물

〈표 계속〉

11) 충북여성재단의 여성주의 문화기획자/활동가 양성 과정 기획 배경과 관련된 내용은 충북여성재단 교육사업팀 담당자A와 2024년 2월15일 서면으로 진행된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2) 충북여성재단의 여성주의 문화기획자/활동가 양성 과정의 연속성과 관련된 내용은 충북여성재단 교육사업팀 담당자B와 2024년 2월 8일 진행된 전화를 통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연도	구분	내용
2022년		운영하지 않음
2023년	프로그램명	여성문화활동가 양성과정-〈충북 여성의 이야기〉 영상제작자 양성과정
	교육기간	2023년 11월6일~12월 6일 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대면+비대면), 총 10회차
	교육내용	충북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담아내는 문화 콘텐츠 제작 인력의 양성 위해 지역 여성의 삶과 여성주의 관점의 이해 및 영상의 기획·제작하는 워크숍 및 공유회 운영
	교육대상	① 도내 단체 및 기관의 문화활동 사업 기획 담당자 ② 지역 영상 관련 여성소모임 ③ 여성주의 문화기획에 관심있는 도민
	성과	총 참여자 수 14명, 수료자 수 11명 공유회 1회

재단의 여성주의 문화기획자·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은 이론-실습-공유의 3단계로 기획되었는데, 이론 수업에 ‘충북지역 여성’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점이 프로그램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진행된 프로그램 초반 이론 수업에 ‘충북지역 여성의 삶’, ‘생활 문화사를 통해 본 충북 여성의 삶’과 같은 주제의 교육이 있었으며, 2023년 진행된 프로그램은 ‘여성문화활동가 양성과정-〈충북 여성의 이야기〉 영상제작자 양성과정’이라는 타이틀로 ‘지역 여성’과 ‘지역의 문화자원’을 성인지 관점을 담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했다. 또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의 협력으로 진행되어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했다. 이처럼 강한 지역성, 특히 지역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여타 문화예술 성평등 지원 프로그램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영상을 발표하는 공유회를 통해 영상콘텐츠들이 확산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의 사례는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지원 정책의 내용은 대부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후조치(신고, 피해자 지원 등)나 예방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이고 일률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성평등 지원 정책과 다르 없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지원 정책인 만큼 ‘문화예술계 안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여성 예술가의 삶에 집중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각 지역에서 그 지역 참여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책의 수혜자가 정책의 주체이자 기획자가 되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텀-업(bottom-up)의 방식은 그 지역의 성평등 교육 수요와 교육자, 교육 운영 기관 또는 단체 등 실질적인 주체들 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기관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영도도시문화센터의 사례나 지역 기관들과 관련 단체, 연구자의 모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의 운영주체와 방식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례이다. 둘째,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들이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문화예술의 창작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지역성이 살아있는 프로그램 기획의 단초를 참가자가 직접 제공하고, 이를 시행기관이 받아들여 실행하는 방식이야말로 바텀-업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보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의 내용 면에서 단순한 성평등 이론 교육이 아닌, 문화예술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린 창작물을 결과물로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세 가지 사례 각각 ‘문화예술 기획’, ‘문화예술 비평’, ‘지역 여성을 주제로 한 영상물’이라는 확실한 교육의 결과물이 있으며, 이 결과물이자 창작물들은 공유회 등의 형식을 거쳐 다시 문화예술로써 지역사회에서 향유된다.

전술했듯이 이제는 성평등을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분야 또는 구성원 개개인의 동시다발적인 변화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장에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문화예술 창작이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영을 바탕으로 지속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변화된 정책의 관점에 따라 새롭게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젠더 거버넌스 작동과 그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V. 결론

페미니즘 리부트,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해시태그, 미투 운동 등은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논의를 촉진시키기에 충분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관심과 정책적 논의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평등 이슈가 정권 교체와 관련되어 관심의 정도가 달라지는 점 때문일 것이다. 본문에서 분석했듯이 대부분의 성평등 정책이 문화예술분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중앙의 여성정책 변화에 기인하고, 여성정책 흐름은 국내외의 성평등 이슈와 담론은 물론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기에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추진력이 달라지기도 하면서 성평등 정책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이슈와 정책은 정치적인 영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도 인식되어 구조적 개선과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분야의 성인지, 성평등 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분야 관계자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행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중앙, 수도권 중심으로 탑-다운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후조치(신고, 피해자 지원 등)나 예방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성평등 지원 정책의 범위와 규모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궁극적 목적에 맞는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첫째, 문화예술분야의 성불평등의 구조적 접근을 통한 정책 수립, 둘째,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 지원, 셋째, 다양한 지역, 분야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평등 전략 마련 및 정책 사례 발굴, 넷째,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체계 구축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분야 성평등 지원 정책 중 탑-다운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시한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 성평등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의 정책 수혜자가 정책 주체이자 기획자가 되

어 관련 기관, 단체 등 실질적인 주체들 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성평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의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이를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셋째, 지역의 성평등 교육은 일반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성평등 이론 교육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창작물을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창작물은 다시 문화예술로서 지역사회에서 향유된다. 다시 말해, 사례들을 통해 각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었으며, 현행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의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주제적이고 적극적인 성평등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의 젠더 거버넌스 작동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역의 성평등 지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담보를 위해 예산, 인력,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중앙에서 시행되는 정책과 지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 지원 정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성평등 지원 정책 방식을 유지하되 바텀-업 방식의 성평등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의 성평등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정책 현황과 이슈는 연구 시점에 국한될 수 있으며, 지역 성평등 정책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의 사례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며 다양한 지역의 성평등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비교 분석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성평등 정책 모델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군(2023), 문화 예술활동에서 성평등 실천 방안, 「문화예술융합연구」, 제4권 3호, 51-62.
- 김동식·박선영·김난주·김인순·김숙이(2018), 「문화예술계(영화산업) 여성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혜인(2018), 양성평등문화정책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계의 성 격차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32집 3호, 33-58.
- 류정아(2018),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정아(2019), 「출판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2018),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근화·김지학(2017), 「예술분야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근화·김지학·차민경·윤지연·이미정(2018), 「공연예술분야 성(性)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근화·김지학(2021),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배성희(2023),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NARS 현장실태조사 제4호 (2023.10.4.),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배은경(2016), 젠더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제32권 1호(2016), 1-45.
- 변신원(2023), 양성평등 교육 가이드, 교육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지도 만들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 2023 상반기 VOL.01 창간호」, 60-83.
- 송인자·김영옥·양현경·최기자·이해성(2018), 「2018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구」,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육주원(2022), 예술가의 일: 탈상품화된 예술노동에 대한 젠더적 접근,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5권 제1호, 통권 28호(2022), 31-55.
- 윤우석 외(2019), 「2018년 대중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이나영 · 이미연 · 문수연 · 이하영(2018), 「2017년 영화계 성희롱 · 성폭력 실태조사」, 부산: 영화진흥위원회.
- 임지혜(2020), 문화예술계 성인지 교육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6권 제2호(2020), 415-433.
- 주성돈 · 윤지경 · 박규동 · 이선영 · 김태훈(2022), 「‘22년 기초 · 광역문화재단 실태조사 연구」, 서울: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차민경 · 양혜원 · 김태완 · 박소현(2020),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성평등 예술지원 정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연구」,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20 · 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Miller, D. L. (2016), Gender and the artist archetype: Understanding gender inequality in artistic careers, *Sociology Compass*, 10(2), 119-131.
- UNESCO(2021), Gender creativity: Progress on the precipice. Paris, France: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문화체육관광부(2018.5.16.),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Available: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96&pMenuCD=0302000000&pCurrentPage=5&pAction=&pTypeDept=&pSearchType=02&pSearchWord= (2024.2.22.검색)
- 이주빈(2023.1.9.), 여가부, ‘여성’ ‘성평등’ 정책목표서 지웠다…“윤 정부의 기조”, 「한겨레 사회일반」,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016.html (2024.2.23.검색)

이하나(2021.11.2.), 문재인 정부 5년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미흡”, 「여성신문 정치일반」, Available: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30> (2024.3.16.검색)

한국교육개발원 KESS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Available: <https://kess.kedi.re.kr/index>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Available: <https://www.law.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평등 지원 사업, 예술활동증명 통계, 2020년도 문화예술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모집공고」, Available: <https://www.kawfartist.kr/>

[Abstract]

Exploring New Directions for Gender Equality Support Policies in the Cultural and Art Sectors through Local Gender Equality Policy Cases

Kong, Hye-Young · Cho, So-Yeon

In contemporary society, gender equality has emerged as a critical issue, including in the cultural and arts sectors, where discussions and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have steadily expanded. This is rooted i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and arts fields as labor environments, along with challenges in gender equality awareness within these sectors. However, the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in place still face limitations and challenges.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 is a need to critically examine current policies and explore new directions to shift the paradigm of support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in the cultural and arts sectors. To achieve this, this study aimed to find answers within practical cases of gender equality support policies being implemented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arts.

Through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statistical data, news articles, and online sources, I will examine key issues and realities regarding gender equality in the cultural and arts sector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gender equality support policies until 2023. Focusing on case studies of local gender equality support programs in the cultural and arts sectors, I intend to explore new directions throug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data analysis.

Through this research, I aim to propose new directions for gender equality support policies in the cultural and arts sectors, thereby enhanc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gender equality in cultural and arts communities and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ies.

[Keywords] culture and arts policy, gender, gender equality, gender equality policy, gender equality education

Kong, Hye-Young_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Dance, Sejong University / First Author
(tinahy11@gmail.com)

Cho, So-Yeon_Research Professor, Humanity Sciences Institute, Daegu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ndcontents@gmail.com)

동행유형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에 미치는 영향

이승혁 · 허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비자 행동이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사회적 집단관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자본, 문화자본 등의 주요 요인과 더불어 동행유형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종속변수를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확률과 관람횟수로 구성하였고, 분석을 위해 다중선택 및 장르 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변량 프로빗 모형과 다변량 토빗 모형을 적용하여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 관람확률은 가족, 지인, 혼자 순으로 나타났지만, 관람횟수의 경우에는 혼자, 지인, 가족과 관람 순으로 횟수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 관람의 확률관점에서는 관계재 특성으로 주로 동반관람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는 일회성 경향이 높으며, 횟수관점에서는 경험재의 특성이 주요한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로 다루지지 않은 동행자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였고, 추가로 장르 간 문화예술 소비관계도 분석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문화예술 관람, 관계재, 동행유형, 다변량 프로빗 모형, 다변량 토빗 모형

*이 논문은 202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2023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되었음.

투고일: 2024. 5. 3. 심사일: 2024. 6. 18. 게재 확정일: 2024. 7. 30.

<https://doi.org/10.16937/jcp.2024.38.2.97>

이승혁_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주저자(paullee96@cau.ac.kr)

허식_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교신저자(shikheo@cau.ac.kr)

I. 서론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으로 개인의 소득수준 또한 높아지며,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효용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김준·최배석, 2018). 또한, 수출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이른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성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가영, 2014). 이처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며, 여가의 유형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예술 영역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유대감 등을 형성하고, 삶의 만족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며, 그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Lee & Heo, 2021; Wheatley & Bickerton, 2017; 김병용, 2022).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반적인 문화예술 향유는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및 외부 활동의 제약과 정부 차원의 시장 통제가 함께 이루어지며, 문화예술 시장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를 조사한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3년 문화예술 행사의 관람률은 2022년 대비 0.5% 증가한 58.6%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81.8%에 비하면 23.2% 감소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문화예술 시장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및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

한편, 문화예술 향유를 포함한 여가활동은 인간의 사회화에 기여하며, 개인과 사회의 결속감 및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때 문화여가 활동은 사회적 집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누구와 문화여가 활동을 하는가, 즉 동행자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윤소영, 2015; 황혜선·이윤석, 2021).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관람은 대부분 가족, 친구 등 타인과 함께 관람하는 동반관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이는 문화예술이 소비자의 경험이 나 관련 지식에 따라 소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경험재(experienced goods)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교류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개인의 취향 및 문화예술

소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재(related goods)의 특성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Erickson, 1996).

문화예술은 관계재의 특성을 통해 타인과 연계되는 사회적 통로가 될 수 있고, 관계 형성 및 사회적 결속력을 향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이려정, 2015; Hampshire & Matthijsse, 2010). 또한,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문화예술 향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Raymore, 2002), 문화예술 분야에서 동행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행자 관점의 연구는 주로 여가 혹은 관광의 분야에서 동행자에 따른 만족도, 선호가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로 진행되고(Su, Cheng, & Swanson, 2020; Van Ingen & Van Eijck, 2009; 김수아 · 김남조, 2020; 신상식 · 최수일, 2010), 동행자 유형이 여가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수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소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자본, 그리고 문화자본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였기 때문에 동행자 관점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의 관계재 특성 및 동행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주요 결정요인과 관람 동행자 유형이 문화예술 관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를 조사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문화예술 장르 간 다중선택과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변량 프로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과 다변량 토빗 모형(multivariate tobit model)을 이용하여 동행유형을 포함한 문화예술 관람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이 문화예술 소비증진에 효과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II. 동행유형에 관한 고찰

1. 타인과 문화여가 활동

개인은 사회적 집단에 속하고 싶은 관계성 욕구를 가지며,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Ryan & Deci, 2000). 따라서 개인의 소비결정은 대인 관계 및 사회적 집단에 따라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Bagozzi, 2000). 또한, 타인과 함께 상품을 소비하는 경우, 타인의 취향과 타인이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상품의 구매의사를 결정한다(김주호 · 이은정, 2015). 이는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함께 소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품의 용도와 추구 편익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소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적 특성은 서비스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동행자와 정서적인 결속과 애착을 형성하며 소비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umeister, De Wall, Ciarocco, & Twenge, 2005; Deci & Ryan, 1991; 류혜진 외, 2020). 김주호 · 이은정(2015)은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동반소비(co-consuming)의 개념을 설명한다. 동반소비는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소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제품의 소비 행위와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함께 소비하는 대상의 영향력에 따라 소비의 전반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동반소비의 특성은 여가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은 생애 전반을 통해 경험하는 사회화 과정이며, 친구, 배우자, 부모, 직장동료 등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한다(Burch, 1969). 아울러, 문화여가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반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윤소영, 2015), 누구와 함께 문화여가 활동을 향유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가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동행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가족과 가족 외 사회적 관계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본적인 사회구성 단위인 가족과 함께 향유하는 가족 여가활동은 가족 간 상호작용과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이며 삶의 만족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이다(Agate, Zabriskie, Agate, & Poffet, 2009; Kelly, 2019; 유계숙 · 김수화 · 임정현 · 최혜림 · 채희화, 2011). 이와 관련하여 가족 여가활동이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주연 · 지명원(2022)은 가족 여가활동의 참여가 높을수록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높아지며, 부정적 상호작용은 감소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카일과 칩(Kyle & Chick, 2002)은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가 문화여가 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히며 문화여가 활동에 있어 가족이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며, 쿤첼과 헤버라인(Kuentzel & Heberlein, 2008)은 개인의 혼인 여부가 문화여가 활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가족 간 문화여가 활동은 개인의 건강 및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과 유대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여가 활동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가 및 문화예술 분야 내 동행자 관점은 보다 확대되어 친구, 동호회, 직장동료 등

가족 외 사회적 관계와 함께 향유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버치(Burch, 2009)는 친구, 직장동료와 같은 사회적 관계가 문화여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동행자와의 관계는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Srinivasan & Bhat, 2006; Warde, Tampubolon, & Savage, 2005).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함께 여가를 향유하는 것은 여가 및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수아·김남조, 2020; 류성옥·안영주, 2015; 임사라·박세영, 2012). 반면, 문화여가 활동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어 문화여가 활동과 사회적 관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Putnam, 2000; Van Ingen & Van Eijck, 2009).

2. 나홀로 문화여가 활동

미국의 정치학자 퍼트남(Putnam)은 저서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2000)을 통해 미국 사회의 사회적 참여와 연계가 줄어드는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 단체,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 여가활동에서조차 혼자 여가를 즐기는 ‘나홀로 여가’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구매력이 상승함에 따라 여가의 행태가 동반 여가에서 개인적 여가로 변화하고 있고, 영화 및 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마저 혼자 관람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박지남·천혜정, 2012).

나홀로 여가에 관한 연구는 1인 가구의 여가 참여구조, 여가 행태 등으로 시작되어 2010년 이후부터 관광을 포함한 여가의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김용수·이훈, 2020; 조승행, 2017). 나홀로 여가는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선택행위라는 특성이 나타나고, 집단의 소비욕구와는 다르게 개인의 취향이 소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마니아적 여가 특징이 나타난다(박지남·천혜정, 2012; 박휴경·원영신·조은영, 2014). 이와 관련하여 이승혁·허식(2023)은 문화예술 관람 동행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혼자 관람은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경험재의 특성이 다른 동행유형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1인 관객의 관점으로 클래식 공연 관객 유입 전략을 연구한 서은아(2022)는 나홀로 관람객이 공연예술을 관람할 때 작품의 수준과 연주자의 명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

라고 언급하며, 나홀로 관람객의 유입을 위해서는 경험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나홀로 여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반된 평가로 나타난다. 김고은·최막중(2019)은 짧은 기간 내 급격하게 성장한 산업화와 정보화를 모두 경험한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나홀로 여가가 부득이하게 선택되는 비자발적인 여가소비의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교육학 및 발달심리학 등에서는 나홀로 여가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사회자본 형성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또한, 이려정(2020)은 주로 혼자 여가를 향유하는 나홀로족은 자유롭고, 당당하고, 자립심이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 우울, 근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내포되어 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반면, 나홀로 여가가 사회적 피로에서 벗어나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또한 존재한다(유숙희·이훈, 2017). 김주연·최영래(2015)는 나홀로 여가의 원인은 외적인 통제와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혼자 소비하는 시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외로움과 소외감 대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정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Larson, 1999; Storr, 2005; 김주연·최영래, 2015).

3. 문화여가 활동의 동행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

개인의 소비행동은 사회적 집단의 관계에 따라 전반적인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Ateca-Amestoy, 2008), 함께 소비하는 타인이 존재하는지, 또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소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Bagozzi, 2000). 이에 따라 여가 및 문화예술의 분야에서는 동행유형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반 잉겐과 반 에이크(Van Ingen & Van Eijck, 2009)는 여가활동과 사회자본의 관계를 주목하며 여가 동행유형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혼자 및 가족과 여가를 향유하는 경우 조직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지만, 가족 외 동반자와 향유할 때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동반 여가활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가족과 여가는 주로 남성이, 사회적 관계와 여가는 주로 여성이

더욱 많이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주로 가족과 여가를 향유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주로 사회적 관계와 함께 여가를 향유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로짓 모형과 토빗 모형을 사용하여 가족, 지인, 단체의 특성이 문화관람 여부 및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살펴본 이용관·김혜인(2015)은 가족구성이 복잡할수록 문화예술 관람확률은 감소하며, 50대 이상부터 교류하는 지인이 많을수록 관람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관계망과 문화관람의 관계에 있어 가족은 금전적, 시간적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문화관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에 문화관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하였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접근은 사회관계망과 연관된 기존의 교육 및 가족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샤프란스카야와 포타포프, 그리고 오제고프(Shafranskaya, Potapov, & Ozhegov, 2021)의 연구에서는 WTP(willingness-to-pay) 추정을 통해 개인(1인) 방문자와 동반(2인) 방문자의 오페라 극장 티켓 지불 의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 방문자와 동반 방문자의 WTP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해 이들을 별도의 세그먼트로 구분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공급자 관점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동반 방문을 공략해야 하며, 동행유형은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여가 및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경우 동행유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연결망이 개인의 취향 및 문화예술 소비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재 특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지만(Erickson, 1996), 문화예술 소비 분야에서는 동행유형 관점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의 결정요인으로 다뤄졌던 주요 요인과 더불어 동행유형이 문화예술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동행유형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2018~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¹⁾²⁾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수와 신뢰가능한 수준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2개년도 자료를 풀링(pooling)하였고, 조사에 응답한 유효 응답자 수는 2018년 9,899명, 2019년 10,102명으로 총 20,001명이 집계되었다.

본 연구는 동행유형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결정요인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여부 및 횟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사 응답자 중 아홉 장르의 문화예술을 전혀 관람하지 않았지만 관람 동행자 항목에 응답하거나, 문화예술을 관람한 경험이 있지만 관람 동행자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156명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총 19,84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은 개인의 자본이나 선호 등 공통된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이 어떠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관람할 때는 한정된 시간과 금전적 제약 내에서 관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장르 간 문화예술 관람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박혜련·허식, 2018). 또한, 연구자료인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문화예술은 총 아홉 가지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응답자는 문화예술을 관람했을 경우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문화예술 장르를 관람하였고, 문화예술 장르 중 오직 한 가지 장르만 선택하여 관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르 간 문화예술 관람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다중선택 및 장르 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변량 모형

1) 본 조사는 2019년 기존 명칭인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에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조사명이 변경되었다.
2)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및 외부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정부 차원의 시장 통제가 이루어지며 2019년 81.8%이던 문화예술 관람률이 2021년 33.6%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엔데믹이 선언된 2023년 문화예술 관람률은 58.6%로 2022년 대비 0.5%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완벽한 시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8년과 2019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multivariate model)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변량 모형은 오차항 ϵ_{ij} 가 독립적이고 평균이 0, 공분산 행렬이 Σ 인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공분산 행렬 Σ 을 통해 장르 간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신정우 · 이미숙, 2016). 본 연구에서 공분산 행렬 Σ 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Sigma = \begin{pmatrix} \sigma_{\epsilon 1}^2 & \rho_{\epsilon 2 \epsilon 1} \sigma_{\epsilon 2} \sigma_{\epsilon 1} & \rho_{\epsilon 3 \epsilon 1} \sigma_{\epsilon 3} \sigma_{\epsilon 1} \\ \rho_{\epsilon 1 \epsilon 2} \sigma_{\epsilon 1} \sigma_{\epsilon 2} & \sigma_{\epsilon 2}^2 & \rho_{\epsilon 3 \epsilon 2} \sigma_{\epsilon 3} \sigma_{\epsilon 2} \\ \rho_{\epsilon 1 \epsilon 3} \sigma_{\epsilon 1} \sigma_{\epsilon 3} & \rho_{\epsilon 2 \epsilon 3} \sigma_{\epsilon 2} \sigma_{\epsilon 3} & \sigma_{\epsilon 3}^2 \end{pmatrix} \quad (1)$$

$\sigma_{\epsilon j}^2$ 는 장르 $j(j = 1, 2, 3)^{3)}$ 의 잠재변수 y_{ij}^* 와 관련된 오차항 ϵ_{ij} 의 분산을 나타내고, $\rho_{\epsilon l \epsilon m}(l, m = 1, 2, 3, l \neq m)$ 은 장르 l 과 m 의 오차항인 ϵ_{il} 과 ϵ_{im}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상관계수 $\rho(cov(\epsilon_{il}, \epsilon_{im}))$ 가 0이면 각 장르 간 의사결정이 상호 독립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오차항 간 상관계수가 0이 아니라면($\rho(cov(\epsilon_{il}, \epsilon_{im})) \neq 0$), 장르 간 의사결정은 종속적이기 때문에 다변량 모형을 통해 동시 추정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뜻한다. 이때, $\rho(cov(\epsilon_{il}, \epsilon_{im})) > 0$ 이면 장르 j_l 과 j_m 은 한 장르의 소비 확률 혹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장르의 소비 확률 혹은 횟수도 함께 증가하는 정(+)의 소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rho(cov(\epsilon_{il}, \epsilon_{im})) < 0$ 이면 장르 j_l 과 j_m 은 한 장르의 소비 확률 혹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장르의 소비 확률 혹은 횟수는 감소하는 부(-)의 소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비관계가 느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정(+)의 소비관계가, -1에 가까울수록 부(-)의 소비관계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박상곤 · 김상태,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다변량 모형을 통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을 결정하는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고, 추가로 모형에서 나타난 상관계수를 통해 문화예술 장르 간 소비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르별 문화예술의 관람 여부와 관람횟수로 구분하였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 본 연구는 문화예술 장르를 총 세 가지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j 를 1, 2, 3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은 전시예술, 2는 공연예술, 그리고 3은 대중예술을 의미한다.

1) 다변량 프로빗 모형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수인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을 도입하고, 다중선택을 고려할 수 있는 이산선택모형인 다변량 프로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을 적용하였다(Edwards & Allenby, 2003; 최재영 · 김연배 · 고대영, 2006). 다중선택을 고려하는 이산선택모형은 다변량 로지스틱 모형(multivariate logistic model)도 존재하지만(Boztug & Hildebrandt, 2006), 다변량 로지스틱 모형은 대안 간의 독립성을 가정한다(Train,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장르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변량 로지스틱 모형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대안 간 독립성을 완화시킨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다변량 프로빗 모형의 효용함수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U_{ij}^* = \gamma_j + \sum_j X'_{ij} \beta_{ij} + \epsilon_{ij}, \quad j = 1, 2, 3 \quad (2)$$

식 (2)의 U_{ij}^* 는 응답자 i 가 장르 j 를 선택했을 때 얻는 효용을 의미한다. γ_j 는 장르 j 에 대한 대안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를 나타내며, X'_{ij} 는 본 연구의 설명 변수 벡터를, ϵ_{ij}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때 응답자 i 는 장르 j 에 대한 효용 U_{ij} 가 0보다 클 때 문화예술 장르 j 를 관람하며, 0와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장르 j 를 관람하지 않는다. y_{ij} 가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여부를 의미할 때, 이는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ij} = \begin{cases} 1, & \text{if } U_{ij}^* > 0 \\ 0, & \text{if } U_{ij}^* \leq 0 \end{cases} \quad (3)$$

2) 다변량 토빗 모형

두 번째 종속변수인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 토빗 모형(multivariate tobit model)을 적용하였다(Tobin, 1958).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는 0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일정 기간

을 한정하여 관람횟수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절단(censored)된 자료의 형태로 나타난다(Garcia & Labeaga, 1996).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한다면 추정치에 편이(bias)가 발생할 수 있기에(Greene, 2003; Washington, Karlaftis, Mannering & Anastasopoulos, 2020), 절단된 자료의 경우 토빗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Amemiya, 1984).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은 본인의 자본이나 선호와 같이 공통된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한정된 시간과 금전적 제약 내에서 어떠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관람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장르 간 문화예술 관람결정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인 단변량 토빗 모형으로 분석한다면 마찬가지로 편이된 추정치를 얻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토빗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변량 토빗 모형의 설명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는 식 (4) 및 식 (5)와 같이 성립한다.

$$y_{ij}^* = \sum_j X_{ij}' \beta_{ij} + \epsilon_{ij}, \quad j = 1, 2, 3 \quad (4)$$

$$y_{ij} = \begin{cases} y_{ij}^*, & \text{if } y_{ij}^* > 0 \\ 0, & \text{if } y_{ij}^* \leq 0 \end{cases} \quad (5)$$

여기서 y_{ij} 는 종속변수로 응답자 i 가 관람하는 문화예술 장르 j 의 관람횟수를 의미한다. X_{ij}' 는 설명변수 벡터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가 포함되고, β_{ij} 는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 ϵ_{ij} 는 독립적이며 정규분포하는 오차항을 뜻한다.

3. 변수설정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8~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응답자의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여부와 관람횟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문화예술은 장르별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와 생산, 유통방식의 차이가 존재해 장르 간 이질성이 나타난다(윤수영 · 허식,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문화예술을 전시예술과 공연예술, 그리고 대중예술로 구분하였다. 전시예술은 문학행사와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전시회로⁴⁾,

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학'이라는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류하는 문학 행사를 의미한다. 이는

공연예술은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그리고 뮤지컬로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영화,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는 대중예술로 포함하여 문화예술을 세 가지 장르로 구분하였다(Van Eijck & Bargeman, 2004; 홍윤미 · 이명우 · 윤기웅, 2015). 이후 조사 기간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내 장르별 문화예술을 한 번도 관람하지 않은 대상을 0, 최소 1회 이상 관람한 대상은 1로 변환하여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여부를 의미하는 첫 번째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동행유형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산변수로 두 번째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명변수 중 하나인 동행유형 변수는 문화예술을 단 한 번도 관람하지 않은 4,126명의 관측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횟수의 관점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문화예술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먼저, 설명변수는 크게 인구통계적 특성, 경제자본, 문화자본, 그리고 동행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 동거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 동거 자녀

<표 1> 종속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설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전시예술 관람 여부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관람경험이 있다=1, 없다=0	19,845	0.172 (0.377)
공연예술 관람 여부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뮤지컬)	관람경험이 있다=1, 없다=0		0.289 (0.453)
대중예술 관람 여부 (영화, 대중음악, 연예)	관람경험이 있다=1, 없다=0		0.764 (0.424)
전시예술 관람횟수	최솟값=0, 최댓값=150(가산변수)	15,719	0.539 (2.082)
공연예술 관람횟수	최솟값=0, 최댓값=72(가산변수)		0.988 (2.148)
대중예술 관람횟수	최솟값=0, 최댓값=84(가산변수)		5.889 (5.925)

자료: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18~2019).

시화전, 도서 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과 같이 문학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로 정의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유무로 구성하였고(Kraaykamp, 2003; 이승길, 2018), 월평균 가구소득은 경제자본을 의미하며, 소득이 없다는 응답부터 100만 원 미만의 응답은 1, 이후 100만 원 단위의 등간척도로 구분, 최댓값이 11인 등간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문화자본을 구성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상속된 문화자본의 대리변수로서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사용하였다. 무학부터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재학 이상을 각각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중학교 졸업 이하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획득된 문화자본은 크게 교육과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비정규 교육과정인 문화예술 교육경험은 유·아동기(3~12세)와 청소년기(13~18세), 그리고 조사 기간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시기별 총 세 가지 변수로 구분하였다(Bourdieu, 1979; DiMaggio & Ostrower, 1990).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변수는 최근 1년 내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개별적인 두 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문화자본을 설명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Lee & Heo, 2023).

끝으로 동행유형 변수는 총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주로 누구와 함께 문화예술을 관람하는가에 관한 항목에 혼자 관람한다고 응답한 대상은 혼자 관람으로, 주로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친척 포함)와 관람한다고 응답한 대상은 가족과 관람, 마지막으로 주로 친구, 연인, 동호회원, 직장동료 및 기타에 응답한 대상은 지인과 관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였고, 혼자 관람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⁵⁾⁶⁾

5) 이주는 외(2021)는 동행유형을 혼자, 가족(친인척 포함), 친구(연인 포함), 사회적 관계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친구(연인 포함)도 사회적 관계에 포함하여 ‘지인과 관람’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6) 본 연구의 전체 동행유형 변수는 미응답(20.8%), 혼자 관람(3.4%), 가족과 관람(37.7%), 지인과 관람(38.1%)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동행유형의 미응답은 문화예술을 단 한 번도 관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유형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미관람자와 동행자 유형의 미응답은 동일한 응답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람 여부를 분석할 때는 미응답자의 더미변수는 실증분석에서 제외하고 혼자관람의 더미변수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동행유형의 더미변수에는 미응답자의 관측치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가족과 관람의 더미변수는 주로 가족과 관람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을 1로 설정하였고, 그 외의 응답인 미응답, 혼자 관람, 가족과 관람의 관측치는 0으로 변환된 변수이다. 하지만, 가산자료인 관람횟수를 분석할 때는 문화예술 미관람자(동행유형 미응답자)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동행유형의 미응답자는 동행자 유형의 더미변수에 포함하지 않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설명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여성=1, 남성=0	0.508 (0.500)	0.515 (0.500)
	연령	최솟값=15, 최댓값=94 (연속형 변수)	46.203 (17.508)	42.529 (16.192)
	거주지역	수도권=1, 비수도권=0	0.312 (0.464)	0.337 (0.473)
	동거 가구원 수	최솟값=1, 최댓값=10 (연속형 변수)	2.791 (1.247)	2.926 (1.232)
	배우자 유무	있음=1, 없음=0	0.590 (0.492)	0.580 (0.494)
	동거 자녀 유무	있음=1, 없음=0	0.397 (0.489)	0.422 (0.494)
경제자본	월평균 가구소득	0~100만 원=1, 100~200만 원=2, 200~300만 원=3, 300~400만 원=4, 400~500만 원=5, 500~600만 원=6, 600~700만 원=7, 700~800만 원=8, 800~900만 원=9, 900~1,000만 원=10, 1,000만 원 이상=11	4.206 (1.943)	4.501 (1.875)
문화자본	최종학력 더미	중학교 졸업 이하(기준변수)	0.181 (0.385)	0.105 (0.307)
		고등학교 졸업	0.380 (0.485)	0.377 (0.485)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0.427 (0.495)	0.503 (0.500)
		대학원 이상	0.012 (0.112)	0.015 (0.121)
	유·아동기(3~12세) 문화예술 교육 여부	있음=1, 없음=0	0.176 (0.381)	0.213 (0.410)
	청소년기(13~18세) 문화예술 교육 여부	있음=1, 없음=0	0.147 (0.354)	0.179 (0.383)
	현재(최근 1년) 문화예술 교육 여부	있음=1, 없음=0	0.099 (0.299)	0.124 (0.330)
	현재(최근 1년)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여부	있음=1, 없음=0	0.072 (0.258)	0.086 (0.280)
	현재(최근 1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 여부	있음=1, 없음=0	0.073 (0.260)	0.085 (0.280)
동행유형	동행자 유형 더미	혼자 관람(기준변수)	0.034 (0.181)	0.043 (0.202)
		가족과 관람	0.377 (0.202)	0.476 (0.499)
		지인과 관람	0.381 (0.486)	0.481 (0.500)
관측치			19,845	15,719

자료: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18~2019).

IV. 연구결과

1. 다변량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확률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전시예술과 공연예술을 관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연령은 높아질수록 전시예술과 대중예술의 관람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보의 격차가 문화예술 향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지지하는 바이다(진현정·오현석다라, 2016;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다음으로 동거 가구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장르의 관람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의 수가 증가하면 고려해야 하는 문화적 취향이 다양해지고, 개인의 행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의 증가는 문화예술 관람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용관·김혜인, 2015). 하지만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 전시예술의 관람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예술을 관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대중예술과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부(-)의 영향이 나타나 전시예술과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경제자본을 의미하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단위가 증가할수록 모든 장르의 관람확률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자본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향유의 수준이 높고, 문화예술 향유에는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장미혜, 2001; 허식·윤수영, 2013)를 지지하며, 문화예술 영역의 소득효과는 모든 장르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시기별 문화예술 교육 여부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은 모든 문화예술 장르의 관람확률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류희진·허식(201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문화자본 축적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반면 현재 문화예술 교육 및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모두 전시예술과 공연예술의 관람확률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표 3〉 다변량 프로빗 모형에 따른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분석결과

구분		전시예술	공연예술	대중예술
성별(기준: 남성)		0.156*** (0.024)	0.158*** (0.021)	0.008 (0.035)
연령		-0.003** (0.001)	0.004*** (0.001)	-0.023*** (0.002)
거주지역(기준: 비수도권)		0.158*** (0.025)	0.290*** (0.022)	0.058 (0.037)
동거 가구원 수		-0.024* (0.014)	-0.035*** (0.012)	-0.064*** (0.022)
배우자 유무(기준: 없음)		-0.053 (0.040)	0.003 (0.033)	-0.288*** (0.045)
동거 자녀 유무(기준: 없음)		0.084** (0.037)	-0.081** (0.032)	0.022 (0.051)
월평균 가구소득		0.031*** (0.007)	0.030*** (0.007)	0.070*** (0.012)
최종학력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0.135*** (0.047)	-0.132*** (0.037)	0.295*** (0.049)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0.422*** (0.050)	0.154*** (0.040)	0.520*** (0.061)
	대학원 이상	0.945*** (0.096)	0.506*** (0.092)	0.839*** (0.184)
유·아동기(3~12세) 문화예술 교육 여부(기준: 없음)		0.103*** (0.034)	0.150*** (0.031)	0.164** (0.070)
청소년기(13~18세) 문화예술 교육 여부(기준: 없음)		0.238*** (0.035)	0.130*** (0.033)	0.141* (0.074)
현재(최근 1년) 문화예술 교육 여부(기준: 없음)		0.850*** (0.036)	0.731*** (0.036)	-0.153** (0.064)
현재(최근 1년)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여부(기준: 없음)		0.447*** (0.041)	0.395*** (0.041)	-0.152** (0.069)
현재(최근 1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 여부(기준: 없음)		0.267*** (0.040)	0.306*** (0.038)	-0.163** (0.068)
동행유형 (기준: 혼자 관람)	가족과 관람	0.836*** (0.048)	1.154*** (0.038)	3.038*** (0.043)
	지인과 관람	0.793*** (0.047)	1.143*** (0.038)	2.687*** (0.043)
연도변수		0.054** (0.024)	-0.084*** (0.021)	-0.124*** (0.034)
상수항		-2.302*** (0.095)	-2.067*** (0.081)	-0.073 (0.123)
Log likelihood		-20,361.317		
Chi ²		12,550.989***		
N		19,845		

주1) *, **, *** 는 각각 0.1, 0.05, 0.0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주2) 표의 값은 회귀계수(β)를 나타내고, 괄호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대중예술의 관람확률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두 장르와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관람은 시간 집약적인 활동이지만, 전시예술과 공연예술은 시간제약보다 문화자본 축적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예술은 현재 관련 활동을 통해 문화자본을 축적하더라도 시간제약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주어진 여가시간에서 추가로 시간을 할애하여 관람하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 이로써 대중예술은 현재 축적되는 문화자본의 영향이 다른 장르보다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대중예술의 양식이 특정 지역과 사회 환경 속에서 형성되며 그 시대의 대중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문화예술 양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과 훈련 없이도 원활히 향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제환(2012)의 주장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동행유형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은 혼자 관람보다 누군가와 함께 관람하는 동반관람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이 사회적 교류 및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햄프셔와 마테이세(Hampshire & Matthijsse, 2010)의 주장을 바탕으로, 관람 여부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개인의 취향과 문화예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재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장르의 관람확률은 가족과 관람할 경우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지인과 문화예술을 관람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기초통계량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추가로, 장르 간 절대적인 계수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대중예술의 경우 동반 관람의 계수값이 다른 두 장르보다 크게 나타나, 대중예술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회적 관계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다변량 토빗 모형 분석결과

〈표 4〉는 다변량 토빗 모형을 사용하여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인구통계적 요인은 앞선 다변량 프로빗 모형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전시예술과 공연예술의 관람횟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연령은 증가할수록 공연예술 관람횟수에는 정(+)의 영향이, 대중예술 관람횟수에는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시예술의 관람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 전시예술은 상대적으로 여유

〈표 4〉 다변량 토빗 모형에 따른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분석결과

구분		전시예술	공연예술	대중예술
성별(기준: 남성)		0.735*** (0.121)	0.577*** (0.080)	0.110 (0.094)
연령		-0.000 (0.006)	0.023*** (0.004)	-0.069*** (0.004)
거주지역(기준: 비수도권)		0.650*** (0.124)	0.950*** (0.083)	-0.774*** (0.098)
동거 가구원 수		-0.014 (0.069)	-0.105** (0.046)	-0.112** (0.054)
배우자 유무(기준: 없음)		0.175 (0.209)	0.202 (0.133)	-0.671*** (0.158)
동거 자녀 유무(기준: 없음)		0.132 (0.189)	-0.346*** (0.122)	-0.450*** (0.143)
월평균 가구소득		0.154*** (0.037)	0.146*** (0.025)	0.272*** (0.029)
최종학력 (기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0.440* (0.249)	-0.775*** (0.151)	1.029*** (0.177)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1.875*** (0.258)	0.377** (0.159)	2.238*** (0.188)
	대학원 이상	5.164*** (0.468)	1.860*** (0.325)	2.232*** (0.422)
유·아동기(3~12세) 문화예술 교육 여부(기준: 없음)		0.402** (0.165)	0.504*** (0.115)	0.053 (0.137)
청소년기(13~18세) 문화예술 교육 여부(기준: 없음)		1.115*** (0.172)	0.569*** (0.121)	0.841*** (0.147)
현재(최근 1년) 문화예술 교육 여부(기준: 없음)		3.524*** (0.175)	2.423*** (0.125)	-0.201 (0.161)
현재(최근 1년)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여부(기준: 없음)		2.090*** (0.195)	1.315*** (0.141)	-0.108 (0.180)
현재(최근 1년)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 여부(기준: 없음)		1.160*** (0.192)	1.181*** (0.135)	0.316* (0.171)
동행유형 (기준: 혼자 관람)	가족과 관람	-0.598** (0.304)	-0.571*** (0.201)	-0.836*** (0.234)
	지인과 관람	-0.440 (0.293)	-0.444** (0.194)	-0.776*** (0.226)
연도변수		0.421*** (0.120)	-0.413*** (0.080)	-0.832*** (0.093)
상수항		-8.178*** (0.522)	-3.546*** (0.340)	8.054*** (0.391)
ln sigma		1.661*** (0.013)	1.409*** (0.010)	1.743*** (0.006)
Log likelihood		-83,721.629		
Chi ²		5,028.010***		
N		15,719		

주1) *, **, *** 는 각각 0.1, 0.05, 0.0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주2) 표의 값은 회귀계수(β)를 나타내고, 괄호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냄.

시간이 많은 노년층이 적극적으로 향유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류희진·허식, 2018)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구구성 변수인 동거 가구원 수와 배우자 유무 역시 앞선 관람확률의 관점과 대부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지만,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 전시예술의 관람횟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예술을 관람할지라도 단발로 그치고, 단순히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는 전시예술의 관람횟수를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단위가 증가할수록 모든 장르의 관람횟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문화예술 영역은 관람확률뿐만 아니라 횟수의 관점에서도 소득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문화자본이 장르별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기별 문화예술 교육 여부와 현재 문화예술 교육,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 모두 전시예술과 공연예술 관람횟수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나 활동 등에 참여하면 일반적인 관람객보다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많을 것이라는 최명일·이귀옥·박조원(2017)의 주장을 바탕으로 축적된 문화자본이 전시예술과 공연예술 관람횟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하지만 대중예술의 관람횟수에는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과 현재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만이 유의한 정(+)의 효과로 나타나 횟수관점에서도 문화자본의 역할이 다른 장르에 비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은 대중예술 관람확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람횟수에는 모든 장르에서 정(+)의 영향을 보여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은 시간제약이 발생하더라도 문화예술 관람횟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유형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선 관람확률의 관점에서는 타인과 함께 관람하는 동반관람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지만, 관람횟수의 관점에서는 동반관람을 하는 경우 혼자 관람에 비해 관람횟수 증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행유형 중 가족과 관람하는 경우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 관람횟수 증가에는 가장 큰 부(-)의 영향을 보여 가족과 관람이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나타냈던 관람확률의 관점과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은 가족, 지인, 혼자 관람의 순서로 관람확률이 증가하지만, 관람횟수 증가의 관점에서는 혼자 관람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가족과 관람의 영향력이 가장 적은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이 타인과 동반하여 관람할 경우 동반자의 취향 및 경제적, 시간적 요인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횡수증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시점의 문화예술 동반관람은 일회성이 높고, 동반관람의 횡수를 증가하고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혼자 관람의 경우에는 박지남·천혜정(2012)이 주장한 개인의 취향이 소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마니아적 취향이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시사하며, 혼자 관람은 문화자본의 영향으로 인해 경험재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이승혁·허식(2023)의 연구를 바탕으로 횡수관점에서는 문화예술의 경험재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람 여부와 횡수의 관점에 따라 문화예술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다.

3. 문화예술 장르 간 소비관계에 관한 추가분석

추가로 다변량 모형을 통해 도출한 종속변수의 오차항 간 상관관계수(ρ)로 세 가지 문화예술 장르의 상호 소비관계를 살펴보았다. 모든 상관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 세 장르의 관람확률 및 관람횡수 모두 상호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변량 모형을 사용해 동시 추정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뜻한다.

우선, 전시예술과 공연예술 간 상관관계수는 통계적 유의수준 1% 내에서 양(+)의 값인 0.319와 0.313으로 나타나 두 문화예술 장르는 관람확률과 관람횡수 모두 함께 증가하는 정(+)의 소비관계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전시예술과 대중예술 간 상관관계수(ρ)도 양(+)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0.038과 0.069라는 다소 낮은 계수값으로 나타나 전시예술과 공연예술에 비해서는 약한 정(+)의 소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공연예술과 대중예술 간 관람확률의 상관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0.044 로 두 장르의 문화예술은 한 장르가 관람확률이 증가할수록 다른 장르의 관람확률은 감소할 수 있는, 예컨대, 상호 대체적일 수 있는 부(-)의 소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며, 앞선 전시예술과 공연예술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⁷⁾ 그럼에도 관람횡수의 관점에서는 0.0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수로 나타나 공연예술

7) 성제환(2003)은 공연예술의 경우 경제적 요인과 문화예술 교육이, 대중예술은 시간, 접근성 및 온라인 문화활동을 통한 정보 습득이 관람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장르의 상이한 특성으로 인해 부(-)의 소비관계가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과 대중예술은 관점에 따라 상반된 소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추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연예술과 대중예술의 관람확률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전시예술은 모든 장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소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전시예술을 향유하는 개인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을 시사한다(〈표 5〉).

〈표 5〉 다변량 모형에 따른 장르별 문화예술 소비관계 분석결과

문화예술 장르 간 상관관계				다변량 프로빗 모형	다변량 토빗 모형
장르	전시예술 (1)	공연예술 (2)	대중예술 (3)		
전시예술 (1)	—	ρ_{12}	—	0.319*** (0.014)	0.313*** (0.012)
공연예술 (2)	—	—	ρ_{23}	-0.044** (0.020)	0.087*** (0.009)
대중예술 (3)	ρ_{13}	—	—	0.038* (0.022)	0.069*** (0.010)
Log likelihood				-20,361.317	-83,721.629
Chi ²				12,550.989***	5,028.010***
N				19,845	15,719

주1) *, **, *** 는 각각 0.1, 0.05, 0.0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주2) 아래첨자에서 1은 전시예술, 2는 공연예술, 3은 대중예술을 나타냄.

V. 결론

본 연구는 함께 소비하는 대상에 따라 소비행태가 달라질 수 있는 동반소비의 개념과 사회적 집단이 개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다중선택 및 장르 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변량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산선택모형인 다변량 프로빗 모형과 자료의 절단과 0의 문제를 고려한 다변량 토빗 모형을 사용하여 동행유형을 포함한 설명변수가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여부와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분석으로, 다변량 모형에서 도출된 오차항 간 상관계수를 통해 문화예술 장르 간 소비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행유형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확률 및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 관람확률은 가족, 지인, 혼자 관람의 순서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관람횟수의 관점에서는 혼자 관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족, 지인과 관람할 경우 관람횟수 증가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람 여부의 관점에서는 문화예술의 관계재 특성이 높게 나타나며, 관람횟수의 관점에서는 문화예술의 경험재 특성이 주요한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 향유가 주로 누군가와 함께 관람하는 동반관람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동반관람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며, 동반관람의 소비 지속력을 유지하여 관람횟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반관람을 장려해야 하며, 이들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 등 문화정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반관람은 함께 관람하는 타인과 취향,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화정책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예컨대, 동호회 및 사회적 활동 등을 장려하는 간접적인 정책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이용관·김혜인, 2015). 이를 통해 문화예술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동반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개인·사회적 효용의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자본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통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과거(유·아동기 및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모든 문화예술 장르의 관람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기에 축적된 문화자본이 문화예술 관람에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주장한 정지은(2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학교 방과후 시간이나 지자체 문화회관 등을 활용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경험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단체 문화예술 관람 경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잠재 수요층을 확보한다면 문화예술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문화예술 교육과 동호회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과 같이 현재 문화예술 관람 이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전시예술과 공연예술의 관람확률은 증가하였지만, 대중예술의 관람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시예술과 공연예술 관람은 시간제약이 존재하더라도 현재 축적하는 문화자본이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시사하는 바이며, 대중예술 관람은 시간제약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현재 문화예술 교육과 동호회, 자원봉사와 같은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예술 관

람의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하더라도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 관람을 증진할 수 있는 문화정책에 관한 논의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변량 토빗 모형을 통해 문화예술 관람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제자본은 모든 장르의 관람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모든 장르의 문화예술은 관람 여부뿐만 아니라 횟수관점에서도 소득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다. 반면, 현재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 모두 대중예술의 관람확률에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현재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관람횟수 증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관람할 시 증명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변량 모형을 통해 문화예술 장르 간 소비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시에술과 공연예술, 그리고 전시에술과 대중예술은 관람확률, 관람횟수 모두 정(+)의 소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전시에술 관람자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는 성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연예술과 대중예술의 관람확률은 부(-)의 소비관계로 나타나 두 장르의 문화예술 모두의 관람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소비 영역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언급되었던 경제자본, 문화자본과 더불어 문화예술 영역에서 주로 연구되지 않았던 동행유형이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관람 여부와 횟수 두 관점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여 동행유형에 따라 문화예술의 관람확률과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동반관람을 장려해야 하며, 동반관람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논의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적인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활히 사회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활동을 장려하는 간접적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동반관람의 빈도 증가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시에술 관람자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할 것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에술의 동반관람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2020년부터 2022년까

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및 외부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정부 차원의 시장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예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2023년까지의 자료는 정확한 문화예술 소비 통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과 2019년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는 추후 팬데믹 이전의 상황과 팬데믹의 상황, 그리고 2024년 이후 자료를 활용한 엔데믹 상황을 비교·분석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상품의 가격은 전반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문화예술의 가격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는 문화예술 관련 지출금액이 존재하는 자료가 확보된다면 문화예술 장르 간 소비관계가 보완관계인지, 혹은 대체관계인지를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화예술 시장은 사회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온라인 관람이나 정주형 문화예술 활동과 같은 새로운 향유방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문화예술 향유를 직접관람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문화예술 향유방식에 따른 동행유형별 시사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가영(2014), 「LGERI리포트: 한국인의 여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하다(보고서 번호: 28)」, LG경제연구원.
- 김고은·최막중(2019), 한국사회의 나홀로 여가 특성: 10대와 60대 이상 남성 집단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4권 1호, 18-29.
- 김병용(2022), 문화예술 여가활동에 대한 결과기대와 문화예술 여가활동이 사회적 유대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36권 9호, 49-63.
- 김수아·김남조(2020),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여가환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비교-여가공유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2권 3호, 121-143.
- 김용수·이훈(2020), ‘나 홀로 여가’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관광학연구」, 44권 6호, 211-232.
- 김주연·최영래(2015), 혼자서 하는 여가: 자기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9권 1호, 125-136.
- 김주호·이은정(2015), 동반 소비의 종류와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20권 1호, 41-65.
- 김준·최배석(2018),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10호, 545-557.
- 류성욱·안영주(2015), 여가 동호회 참여 영향 요인 고찰, 「관광연구논총」, 27권 4호, 73-93.
- 류혜진·구동모·배준희(2020), 동반 소비자의 유무에 따른 대기시간 지각과 기술 불안감의 상호작용이 무인 주문 결제기기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권 1호, 47-65.
- 류희진·허식(2018), 시기별·활동별 문화자본에 따른 순수예술 관람수요 결정요인 분석: 전시예술과 공연예술간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권 2호, 87-113.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박상근·김상태(2011),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수요: 대체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소득에 따른 수요변화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권 4호, 237-257.
- 박지남·천혜정(2012), 청년세대의 '나 홀로 여가'문화, 「여가학연구」, 10권 2호, 87-105.
- 박혜련·허식(2018), 문화적 여가활동의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기혼가구의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8권 4호, 1-12.
- 박휴경·원영신·조은영(2014), 남성노인의 홀로 하는 산행의 경험과 의미: 나는 때로 혼자이고 싶다,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권 3호, 41-53.
- 서은아(2022), 공연 관람 행태 변화에 따른 클래식 공연 관객 유입 전략, 「문화와융합」, 44권 9호, 403-417.
- 성제환(2003), 文化·藝術商品 消費決定要因에 관한 經濟學的 研究-文化·藝術商品의 體驗財的 特性이 消費에 미치는 影響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10권, 87-113.
- 성제환(2012), 문화 소비자본이 문화 예술상품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학회지」, 15권 1호, 67-93.
- 신상식·최수일(2010),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 「호텔관광연구」, 12권 3호, 173-189.
- 신정우·이미숙(2016), 친환경행동의 영향요인과 상관관계 분석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1권 3호, 131-152.
- 유계숙·김수화·임정현·최혜림·채희화(2011), 가족여가활동. 가족식사활동 빈도와 가족친밀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권 3호, 99-116.
- 유숙희·이훈(2017), 사람들은 왜 혼자 여행을 떠나는가, 「관광학연구」, 41권 6호, 81-99.
- 윤소영(2015), 「한국의 사회동향 2015: 여가활동의 동반자」, 통계개발원: 통계청.
- 윤수영·허식(2016), 문화예술인의 예술근로 만족에 관한 연구: 스로스비의 근로선호모형 적용: 스로스비의 근로선호모형 적용, 「문화정책논총」, 30권 2호, 66-90.

- 이려정(2015), 관광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이 사회적 책임활동 연상에 미치는 영향연구, 「관광레저연구」, 27권 3호, 5-21.
- 이려정(2020), 기업 문화마케팅의 여가적 접근을 통한 사회해체 징후의 완화·해소·외로움, 고독 (사), 나홀로족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2권 2호, 139-166.
- 이승길(2018), 문화서비스상품의 옴니보어 (omnivore) 및 유니보어 (univore) 추정: Double-hurdle 모형 및 Tobit 모형의 비교분석: Double-hurdle 모형 및 Tobit 모형의 비교분석, 「관광연구저널」, 32권 2호, 67-80.
- 이승혁·허식(2023), 문화예술 관람 요인이 동행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6권 3호, 39-67.
- 이용관·김혜인(2015), 연령별 사회관계망과 문화관람 활동의 관계 분석, 「소비자문제 연구」, 46권 3호, 77-100.
- 이주연·지명원(2022), 가족여가활동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31권 2호, 225-238.
- 이주은·장윤선·이정희·이현진(2021), 산림복지시설 이용객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동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5권 4호, 1-12.
- 임사라·박세영(2012), 직장인의 개인 및 집단 여가활동에 따른 여가만족과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권 1호, 171-193.
- 장미혜(2001),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35권 3호, 51-81.
- 정지은(2016),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과잉 음이향 모형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4권 2호, 67-75.
- 조승행(2017), 혼여족의 여가태도, 여가몰입,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51권, 33-43.
- 진현정·오현석다라(2016), 다변량토빗모형을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경영교육연구」, 31권 6호, 203-225.
- 최명일·이귀옥·박조원(2017), 문화 자본이 미술관 체험 만족 및 관람 후 행동 의도에

-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권 2호, 55-73.
- 최재영 · 김연배 · 고대영(2006),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전자지불수단에 대한 소비자 선호분석,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6권 2호, 259-272.
- 허식 · 윤수영(2013), 문화서비스의 가구소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5권 4호, 21-53.
- 홍윤미 · 이명우 · 윤기웅(2015),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 연구논총」, 17권 1호, 185-211.
- 황혜선 · 이윤석(2021), 노인 1인가구의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동반자 유형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의 탐색, 「한국보건사회연구」, 41권 4호, 88-107.
- Agate, J. R., Zabriskie, R. B., Agate, S. T., & Poff, R.(2009). Family leisur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2), 205-223.
- Amemiya, T.(1984), Tobit models: A survey, *Journal of Econometrics*, 24(1-2), 3-61.
- Ateca-Amestoy, V.(2008), Determining heterogeneous behavior for theater attendanc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2(2), 127-151.
- Bagozzi, R. P.(2000), On the concept of intentional social action in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7(3), 388-396.
- Baumeister, R. F., De Wall, C. N., Ciarocco, N. J., & Twenge, J. M.(2005), Social exclusion impair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589.
- Bourdieu, P.(1979), Symbolic power, *Critique of Anthropology*, 4(13-14), 77-85.
- Boztuğ, Y., & Hildebrandt, L.(2006), A market basket analysis conducted with a multivariate logit model, In From data and information analysis to knowledge engineering. *Proceedings of the 29th Annual Conference of the Gesellschaft für Klassifikation eV University of Magdeburg*, March 9-11, 2005, 558-565, Berlin,

-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 Burch Jr, W. R.(2009), The social circles of leisure: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3), 313-335.
- Deci, E. L., & Ryan, R. M.(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8(1), 237-288.
- DiMaggio, P., & Ostrower, F.(1990), Participation in the arts by black and white Americans, *Social Forces*, 68(3), 753-778.
- Edwards, Y. D., & Allenby, G. M.(2003), Multivariate analysis of multiple response data,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0(3), 321-334.
- Erickson, B. H.(1996), Culture, class, and conn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1), 217-251.
- Garcia, J., & Labeaga, J. M.(1996), Alternative approaches to modelling zero expenditure: An application to Spanish demand for tobacco,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8(3), 489-506.
- Greene, W. H.(2003), Econometric analysis, Pearson Education India.
- Hampshire, K. R., & Matthijsse, M.(2010), Can arts projects improve young people's wellbeing? A social capital approach, *Social Science & Medicine*, 71(4), 708-716.
- Kelly, J. R.(2019),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s, London: Routledge.
- Kraaykamp, G.(2003), Literary socialization and reading preferences. Effects of parents, the library, and the school, *Poetics*, 31(3-4), 235-257.
- Kuentzel, W. F., & Heberlein, T. A.(2008), Life course changes and competing leisure interests as obstacles to boating specialization, *Leisure Sciences*, 30(2), 143-157.
- Kyle, G., & Chick, G.(2002), The social nature of leisure involv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4), 426-448.
- Larson, R. W.(1999), The uses of loneliness in adolescence, Loneliness in

- childhood and adolescence, 244-262.
- Lee, H., & Heo, S.(2021),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and happiness: Evidence from Kore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6, 1637-1651.
- Lee, H., & Heo, S.(2023), Does cultural education contribute to higher consumption of the arts? Evidence from South Korea, *Applied Economics*, 55(14), 1534-1545.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Raymore, L. A.(2002), Facilitator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1), 37-51.
- Ryan, R. M., & Deci, E. L.(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Shafranskaya, I., Potapov, D., & Ozhegov, E.(2021), Individual versus companion visitors' willingness-to-pay for the theater tickets: The case of Perm opera, *Journal of Philanthropy and Marketing*, 26(3), e1698.
- Srinivasan, S., & Bhat, C. R.(2006), Companionship for leisure activities, *Innovations in Travel Demand Modeling*, 2, 129-136.
- Storr, A.(2005), Solitude: A return to the self, Simon and Schuster.
- Su, L., Cheng, J., & Swanson, S. R.(2020), The impact of tourism activity type on emotion and storytelling: The moderating roles of travel companion presence and relative ability, *Tourism Management*, 81, 104138.
- Tobin, J.(1958), Estimation of relationship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24-36.
- Train, K. E.(2009), Discrete choice methods with si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Eijck, K., & Bargeman, B.(2004), The changing impact of social

background on lifestyle: “culturalization” instead of individualization?, *Poetics*, 32(6), 447-469.

Van Ingen, E., & Van Eijck, K.(2009), Leisure and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types of company and activities, *Leisure Sciences*, 31(2), 192-206.

Warde, A., Tampubolon, G., & Savage, M.(2005), Recreation, informal social networks and socialcapital,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7, 402-425.

Washington, S., Karlaftis, M. G., Mannering, F., & Anastasopoulos, P.(2020), Statistical and econometric methods for transportation data analysis, Chapman and Hall/CRC.

Wheatley, D., & Bickerton, C.(2017), Subjective well-being and engagement in arts, culture and spor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41, 23-45.

[Abstract]

The Influence of Accompanied Types on Arts and Cultural Participation by Genres

Lee, Seung-Hyuk · Heo, Shik

This study observed that consumer behavior is influenced by individual behavior and social group relationships. Accordingly, it aim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influence of companion types on art and cultural participation by genre, along with various social and cultural factors. The dependent variables include the probability of arts and culture participation by genre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For analysis, the multivariate probit model and multivariate Tobit model, which account for multiple choices and correlations between genres, were appli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arts and culture participation by genr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arts and culture participation in all genres follows the order of family, acquaintance, and alone. However, in terms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rticipants follows the order of alone, acquaintance, and family. This suggests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bability of arts and cultural participation, they are highly likely to be viewed together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related goods. However, the one-time tendency is high, and from the perspective of frequency,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enced goods are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approaches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anion, which has not been primarily dealt with in the field of arts and culture,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culture consumption across genres.

[Keywords] arts and cultural participation, related goods, companion type, multivariate probit model, multivariate tobit model

Lee, Seung-Hyuk_Ph.D. Student, Dept. of Culture-Art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 First Author (paullee96@cau.ac.kr)

Heo, Shik_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shikheo@cau.ac.kr)

A U G U S T

2024

제38집 2호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발간 규정

문화정책논총 발간규정

〈제정 2018. 03. 28.〉

〈개정 2018. 11. 09.〉

〈개정 2019. 11. 11.〉

〈개정 2021. 04.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문화정책논총’의 발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정책논총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정책논총에 연구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와 투고된 연구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연구자의 윤리)

- ① 문화정책논총에 연구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투고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술지에서 게재 불가의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중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③ 연구자는 연구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히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윤리)

- ①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

려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간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윤리위원은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2인 이상 위촉하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09〉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 간사 1인을 선임한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의결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⑥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소명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④ 위원회는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① 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에 열거된 제재 조치 중 선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시행을 요구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2. 논문이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3. 논문이 이미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학술지 게재 취소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지
 4. 향후 3년간 문화정책논총에 논문 투고 금지
 5.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처음 발간되는 문화정책논총에 위반 사실을 공지
- ③ 위원회는 조사심의결과 심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문화정책논총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며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11조(결과의 통지 및 사후조치)

-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 및 제재 조치 판정 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통보 받은 즉시 제재 조치의 내용을 위반행위자에게 통지하며 판정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 ② 위반행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록물 유지)

- 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내용,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 ②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3조(구성 및 임기)

-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내 및 원외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4.15.〉
- ③ 위원회는 원내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원장이 위촉한다.
 1. 원내 위원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2. 원외 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별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학술지 편집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각종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간사)를 둔다.

제14조(기능 및 권한)

- ① 문화정책논총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문화정책논총과 관련된 간행물을 기획·편집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심사 조치를 취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감안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5조(회의)

- ①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심의·의결 사항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심사위원

제16조(심사위원 위촉)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위촉한다.
- ② 각 논문당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하며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논문심사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 ④ 논문을 투고한 자는 해당 호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중 부득이하게 심사를 못하게 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장은 투고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심사 기준 및 절차)

- ① 심사위원은 연구 주제의 적절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체계성, 연구의 독창

성, 연구 결과의 학문·실용적 기여도, 참고문헌·각주·표·그림의 출처 및 적합성과 정확성, 초록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며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단계로 판정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초심에서 3인의 심사위원이 내린 평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개정 2019.11.11.>

구분	평가 점수			판 정 기 준 (심사위원 3인 평가 합산 결과)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게재 가	4	4	4	11점 이상
	4	4	3	
수정 후 게재	4	4	2	8점 이상~11점 미만
	4	4	0	
	4	3	3	
	4	3	2	
	4	2	2	
	3	3	3	
	3	3	2	
수정 후 재심사	4	3	0	5점 이상~8점 미만
	4	2	0	
	3	3	0	
	3	2	2	
	3	2	0	
	2	2	2	
게재 불가	4	0	0	4점 이하
	3	0	0	
	2	2	0	
	2	0	0	
	0	0	0	

주. 심사자는 4점(게재 가), 3점(수정 후 게재), 2점(수정 후 재심), 0점(게재 불가) 중 하나의 점수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초심 결과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연구자에게 소정의 문서를 통해 알려야 하며 투고자는 수정 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기한 내 제출하고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한다. 다만,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초심 때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은 ‘게재 불가’, ‘게재’로 심사하고, 재심사에서 2인 이상에게 ‘게재 가’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다만,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9.11.11>
- ⑤ 초심 결과 ‘게재 불가’의 평가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장은 제출된 이의 내용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 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재심 결과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⑥ 호당 게재 편수는 12편을 기준으로 하되, 게재 우선순위는 초심 결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는 재심에서 ‘게재 가’ 중 초심 심사 상위 점수 순에 의한다. 다만, 동점이 발생 할 경우는 게재 편수를 추가 할 수 있다.

제18조(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논문)

- ① 기존에 발표된 논문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은 제외되며 다른 학술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은 학회의 제반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②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은 제외되며 문화정책논총 게재 논문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특별기고 논문,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기획초청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의결 및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 ③ 논문 투고 공고문에 제시된 ‘주제 영역’을 벗어난 논문은 제외된다.

제19조(심사 결과 통보 및 최종결정)

- ① 심사가 완료된 후에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논문심사표 사본과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② 게재 결정 후이라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심사 수당) 심사 관련 수당은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투고 및 발간

제21조(논문투고 자격)

- ① 논문 투고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한다.
- ②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문헌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심사 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을 수정하여 다음 호에 투고할 수 있다. 투고 시 재신청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다만, 재투고하여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더 이상 투고할 수 없다.
- ④ 투고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제22조(논문투고 방법)

- ① 논문은 별표 1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투고자는 연구윤리 준수 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 확인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논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논문은 심사 및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제23조(발행 일자) 문화정책논총은 매년 3회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제1호 : 4월 30일 <개정 2018.11.09>
- ② 제2호 : 8월 31일
- ③ 제3호 : 12월 31일

제24조(저작권) 제출된 논문은 최종 심사를 거쳐 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되면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이 갖는다.

제25조(기타) 영문논문에 대해서도 국문논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8.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09.〉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1.〉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4. 15.〉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정. 2018. 03. 28>

《문화정책논총 논문투고 신청서》

논문제목				
논문매수	총 매 (호글 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원고지'로 체크)			
주저자	이름	국문)	학위	
		영문)	E-mail	
	소속 및 직위		주소	인쇄본 책자를 받을 주소 표기
	휴대전화		생년월 일, 성별	(주민번호 앞자리) 남, 여
교신저자	이름	국문)	학위	
		영문)	E-mail	
	소속 및 직위		주소	인쇄본 책자를 받을 주소 표기
	휴대전화		생년월 일, 성별	(주민번호 앞자리) 남, 여
공동저자 * 공동저자 추가는 복사하여 작성(붙이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국문)	학위	
		영문)	E-mail	
	소속 및 직위		주소	인쇄본 책자를 받을 주소 표기
	휴대전화		생년월 일, 성별	(주민번호 앞자리) 남, 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 및 저작권이양 동의 확인	<p>◎ 연구윤리 준수 서약</p> <p>저자(들)는 문화정책논총 발간규정의 '연구윤리'를 숙지하였으며, 본인이 귀 원에 투고한 이 논문은 문화정책논총 연구윤리 위반행위(출처표시 부정확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저작권이양 동의</p> <p>저자(들)는 본 논문의 저작권 이양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논문이『문화정책논총』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권한의 행사 등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이양합니다. 단, 저자(들)가 다른 연구물에 본 논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p>			
	<p>저자(들)는 본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대표 권한을 일임하며, 동 권한을 위임받아 교신저자가 저자(들)를 대표하여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교신저자 (자필서명 必)</p>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정책논총》편집위원회 귀하				

[별지 제2호] <제정. 2018. 03. 28>

《문화정책논총 논문심사표》

			초심		재심					
논 문 제 목										
심사의뢰 받은 일자	년	월	일	논문 유형	기획논문 ()					
심 사 표 제출 일자	년	월	일		일반논문 ()					
심 사 위 원	성 명 소 속 전 화			직 위: 이메일: 계좌번호(외부심사위원):						
<p>※ 아래의 척도를 이용하여 각 항목 해당 점수에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게재불가의 경우 심사총평에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심 사 항 목				점 수						
				매우 미흡		보 통		매우 우수		
1. 연구 주제의 적절성				1	2	3	4	5	6	7
2. 연구 방법의 타당성				1	2	3	4	5	6	7
3. 연구의 체계성				1	2	3	4	5	6	7
4. 논문의 독창성				1	2	3	4	5	6	7
5. 연구 결과의 학문실용적 기여도				1	2	3	4	5	6	7
6. 참고문헌각주표·그림의 적합정확성				1	2	3	4	5	6	7
7. 초록의 질적 수준				1	2	3	4	5	6	7
총 점				_____점						
<p>※ 참 고: [심사 총점] 7-24점 : 게재불가 36-42점 : 수정 후 게재 25-35점 : 수정 후 재심사 43-49점 : 게재가</p>										
<p>(심사 총평)</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심사위원 : _____ (인)</p>										

〈세부 심사평〉

※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 제안 및 논평 등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여 논문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제정. 2018. 03. 28〉

《문화정책논총 원고작성요령》

1. 논문의 기본요건

- 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 단면으로 작성한다. 다만, 영문 논문은 MS wor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②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한글 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분량-원고지’로 체크)로 하며, 전체 분량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한 원고는 원칙적으로 투고할 수 없으며 영문원고 분량도 동일하다.
- ③ 논문 구성은 제목, 필자명, 국문초록(200자 원고지 3매 이내, 키워드 5개 내외 포함), 본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영문 논문 구성은 제목, 필자명,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순으로 배열한다.
- ④ 개별 게재논문의 표지에는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편집위원회에서 명기한다.
- ⑤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한다.
- ⑥ 본문의 체제는 ‘서론/본론/결론’이나 ‘장, 절’ 등을 쓰지 않고 I → 1. → 1) → (1) → ①의 순서로 한다.
- ⑦ 원고 작성 언어는 한글 또는 영어로 하되, 한자와 외국어로 된 용어, 인명, 지명 등은 한글로 적고 처음 나올 때에 한해 () 안에 같이 적는다.
- ⑧ 원고는 논문 투고 공고문에 명시한 곳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과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논문투고신청서의 세부사항은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 ⑨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연구원 측의 내용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한다.
- ⑩ 본문 작성 시 원고의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크기 10pt, 장평100%, 자간 0%, 줄간격 160%, 용지종류 A4(국배판), 용지여백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30mm, 머리말, 꼬리말 12mm로 한다.

2. 본문주

①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박동서(1990)에 의하면 …; 강내희(1985)의 연구에서도 …; 김창식·안문훈, 1989: 79)은…; 이종석 등(1990: 410-412)이 제시한…; 토마스(Thomas, 1976: 900)의 모형을 수정하여 …; …황(Hwang, 1987)을 들 수 있다.; 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 1990)의 분류에 따라 …; 브라운 등(Brown et al., 1982)을 중심으로…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동석, 1990; 이정서 등, 1990: 410-412; 김창식·안문훈, 1989: 79; 신문섭, 1985).;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예: Perry & Wise, 1990; Hwang, 1987; Brown et al., 1982; Thomas, 1976: 900).

② 각주

1)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예) ~ 높아진다.¹⁾ ~와 같다.²⁾

2) 각주에는 가능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하고 표기방법은 인용문헌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3. 참고문헌

① 일반적인 사항

- 1)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에 ‘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정확한 서지정보에 의해 제시한다.
- 2) 한글문헌, 동양어 문헌(일본어, 중국어),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하되, 번역서(예컨대 한글로 번역된 영문서)는 해당 원어 문헌으로 분류한다.

- 3) 한글·한자·일본어로 된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에 따라 배열하되, 원어 표기를 할 때에는 괄호 속에 병기한다.
예) 吉澤 清-궤(요시자와 키요요시)(2007),
- 4)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등을 넣어 구별한다. 예) (1999a), (1999b)
- 5)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둘째 줄(行)부터는 3칸 들여쓰기를 하여 각 참고문헌간의 구별을 쉽게 한다.
- 6) 저자가 1~5명인 문헌은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저자가 6인 이상일 때는 ○○○ 외, ○○○, et al. 로 표기한다. 예) 김문환 외(1990), Gibbon et al.(1983),
- 7)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로 두고 그 다음에 발간연도를 밝힌다. 다만, 인용문헌에서 Anonymous라고 된 것은 이것을 저자로 간주한다.
- 8) 만일 주 저자 다음에 with와 더불어 다른 이름이 열거된 문헌(예, Kuan-Hsing Chen with Hsiu-Ling Kuo, Hans Hang, and Hsu Ming Chu)은 참고문헌에서는 이름을 모두 열거한다. 다만,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주 저자 이름만 밝힌다.
- 9) 특히 단행본의 연도는 문헌이 인쇄된 연도가 아니라 저작권 표시(©)된 연도를 쓴다.
- 10) 발간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d.) 라고 쓴다.

② 논문

- 1) 학술지나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의 예
임학순(2004),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전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집 2호, 305-324.
홍길동·이몽룡(1990), 문화와 관광, 「문화관광」, 34권 2호, 78-91.
Knapp, M., Ellis, D., & Williams, B.(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262-278.
Scott, W. A.(1950), Reliability of content analysis: The case of nominal scaling co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51(3), 79-91.
(* 저널명, volume은 이탤릭체로 처리)
Glaser, R., & Bond, L. (Eds.).(1981), Testing: Concepts,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Special issue], American Psychologist, 36(10).

(저널 특별호 전체를 표기할 때).

다만, 학술지의 권, 호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저자 / 연도 다음에 발간 월이나 계절을 표기한다.

예) Austin, J. E.(2003, September), 홍길동(2003, 가을)

2) 단행본에 게재된 논문의 예

홍길동(1990), 미디어 문화정책의 전망, 홍길동·이몽룡(편), 「미디어문화정책론」 (45-66), 서울: 한울아카데미.

Berger, C. R.(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39-62), Newbury Park, CA: Sage.

③ 단행본·보고서·학위논문

1) 출판사 사항을 표기할 때 미국 출판사 출간도서는 '출판사 소재 도시, 주: 출판사', 미국 이외 국가 출판사 출간도서는 '도시, 국가: 출판사', 널리 알려진 대도시 소재 출판사 출간도서는 '도시: 출판사' 순으로 한다. 이 때 주(state) 이름은 약자로 쓴다 (예: CA, NY, IL). 출판된 도시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가장 먼저 나온 것만 표시한다.

예) Hillsdale, NJ: Erlbaum.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Amsterdam: Elsevier.

2) 출판사 이름에서 Books, Press 등은 밝히나, Publishers, Co., Inc. 등은 생략한다.

- 단행본의 예

고정민(2007), 「문화콘텐츠 경영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홍길동·이몽룡(편)(1995), 「문화예술정책 연구」, 서울: 새나라.(공편저일 때)

Fiske, J.(1990),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1986),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Y: Harper & Row.(공저일 때)

Gibbs, J. T., & Huang, L. N.(Eds.)(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CA: Jossey-Bass.(공편저일 때)

- 보고서의 예

조현성(2007),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서울 : 문화관광부.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1982),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DHHS Publication No. ADM 82-1195),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학위논문의 예

홍길동(2000), 「지역과 학교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Ryerson, J. F.(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ging: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④ 번역서나 번역논문

1) 번역서는 한글 번역서에 한해 원서명을 함께 밝혀준다.

- 번역서의 예

Illich, I.(1996), Deschooling Society, 심정보 역(2004), 「학교 없는 사회」, 서울: 도서출판 미토.

Laplace, P. -S.(1951), A philosophical essay of probabilities(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NY: Dover(Original work published 1814).

- 번역논문의 예

Hall, S.(1996),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임영호(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203-232), 서울 : 한나래출판사(원저 출판연도 1980).

Freud, S.(1961), The ego and the id. In J. Strachey(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19, 3-66), London: Hogarth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23).

⑤ 신문·잡지기사

1) 국문 기사의 예

홍길동(2002. 6. 28),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국매일신문』, 5.

문화예술을 말한다(2001. 9. 1), 『한국매일신문』, 1. (* 저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사명, 날짜. 신문, 쪽수 순으로 표기)

2) 영문 기사의 예

Gardner, H.(1981, September), Do babies sing a universal song, Psychology Today, 70-76.(잡지 기사)

Study finds free care used more(1982, April 15), APA Monitor, 14.(신문기사)

⑥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 해당 기관(개인) 홈페이지 사이트명, 실제로 참고한 자료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표기한다. 맨 끝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저자가 없을 때는 문서명을 저자 위치에 둔다. 출판일은 사이트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되,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을 때에는 접속일자를 밝힌다.

예) Author, I.(date), Title of article. Name of Periodical[On-line], 호수, Available: 웹사이트 주소나 이메일 주소

⑦ 시청각 자료

Harrison, J.(Producer), & Schmiechen, R.(Director).(1992), Changing our minds: The story of Evelyn Hooker[Film]. (NY: Changing Our Minds). (영화일 때)

Crystal, L.(Executive Producer).(1993, October 11), The MacNeil/ Leher news hour.

New York and Washington, DC: Public Broadcasting Service. (텔레비전 프로그램일 때)

⑧ 기타

1) 표나 그림의 제목은 세분화 없이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 중앙에 표기하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 : ’라고 표시하고 본 책자의 인용 요령에 따라 표나 그림의 아랫부분 왼쪽에 위치하게 표기한다.

- 2) 표나 그림에 대한 註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일반주(‘주 : ’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아랫부분에 달아 준다. 그림에 대한 註도 이에 준한다. 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자료,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이 되도록 배열한다.

〈표 2〉○○○

구분	○○	○○	○○

자료 : Duncan(1981:349)a)의 재구성
a) ○○○○○○

- 3)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하고, 다양한 도식, 화살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개체를 묶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시킨다.
-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 5)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PA) 양식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으로,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매뉴얼에 따른다.

4. 국·영문초록(ABSTRACT)

- ① 국문 요약 및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② 국문초록은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초록은 25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A U G U S T

2024

제38집 2호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문화
정책
논총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세훈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외식학부 교수
	박찬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양지연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가나다 순〉	

발행일 : 2024년 8월 31일

발행인 : 김세원

발행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TEL/ 02)2669-9800, FAX/02)2669-9880, www.kcti.re.kr

디자인 및 편집 : 거목문화사/거목인포

인쇄 : 거목문화사/거목인포

투고 및 기타 문의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편집위원회

전화: 02-2669-8437, 메일: thejeesun@kcti.re.kr